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599-01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2. 12.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제 출 문

인천광역시청 귀하

귀 시와 체결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 석
연구 원	김 정 훈
연구 원	정 소 희
연구 원	구 본 희
연구 원	김 다 예

※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 1 장 과업 개요

제1절 과업의 추진근거 .....	3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3
제3절 과업의 내용 .....	4
제4절 과업의 추진체계 .....	5

## 제 2 장 주요 현황

제1절 전국 장애인 현황 .....	9
1. 장애인 인구 .....	9
2. 전국 장애인 유형별 현황 .....	11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현황 .....	12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	12
2.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	16
3.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인 인구 .....	19
제3절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21
1.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21
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	22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	24
제4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현황 .....	25
1. 장애복지시설 현황 .....	25
2. 다중이용시설 현황 .....	27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	28
1. 장애인 현황 .....	28
2. 장애인 학대 .....	28
3. 장애인복지시설 .....	29
4. 시사점 .....	29

제6절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 .....	30
1. 단위 사업별 예산 .....	30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	31
3. 장애인 재활지원 .....	33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36
5.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	39
6.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	40
제7절 관련 법률 .....	43
1.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	43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 .....	43
3.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44
4.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	47

### 제 3 장 사례 및 관련 계획

제1절 상위계획 및 타 지역 장애인 인권정책 사례 .....	51
1.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8 ~ 2022) .....	51
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 (2019~2023) .....	55
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57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2019 ~ 2023) .....	59
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019 ~ 2023) .....	61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	63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2022 ~ 2026) .....	63
2. 2022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	65
3.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	67
제3절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69
1. 주요 내용 .....	69
2. 시사점 .....	70

## 제 4 장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75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75
1. 설문조사 .....	75
2. 전문가 회의의견 .....	141
3. 중간 보고 전문가 의견 .....	143
4. 장애인 종사자 및 관계자 의견수렴 FGI .....	145

## 제 5 장 기본계획 수립

제1절 기본구상 .....	157
1. 추진 방향 .....	157
2. SWOT 분석 및 대응 전략 .....	158
제2절 비전 및 목표 .....	160
1. 비전과 목표 .....	160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	161
1. 추진전략 .....	161
2. 분야별 핵심과제 .....	162
제4절 세부 추진과제 .....	166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	166
2. 장애인 기본권 보장 .....	188
3.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	216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	228
제5절 소요 예산 .....	240

## 부록

## 〈표 목차〉

[표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	9
[표 2-2]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와 비중 .....	11
[표 2-3]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군·구별, 유형별) .....	12
[표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정도별 현황 .....	13
[표 2-5] 전국과 인천시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비교 .....	15
[표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	16
[표 2-7]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인구 기준 장애 유형 분포 .....	17
[표 2-8]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 인구 기준 군·구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	17
[표 2-9]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	18
[표 2-10] 인천광역시의 연령대별 장애 유형 .....	19
[표 2-11]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	20
[표 2-12]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21
[표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	23
[표 2-14]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	24
[표 2-15]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복지시설 현황 .....	26
[표 2-16]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현황 .....	27
[표 2-17]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합계) .....	30
[표 2-18]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	31
[표 2-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재활지원) .....	33
[표 2-2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36
[표 2-2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	39
[표 2-22]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	40
[표 2-23]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	43
[표 2-24]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	44
[표 2-25] 광역자치단체(본청)별 조례 비교 .....	45
[표 2-26] 인천광역시 조례 비교 .....	46



[표 2-27]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	48
[표 3-1] 제2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	56
[표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추진 분야 .....	60
[표 3-3]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	69
[표 3-4]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시사점 .....	71
[표 4-1] 설문조사 표본설계 .....	76
[표 4-2] 설문조사 응답 결과 .....	76
[표 4-3] 응답자 성별 .....	77
[표 4-4] 응답자 연령대 .....	78
[표 4-5] 응답자 학력 .....	79
[표 4-6] 응답자 주거 형태 .....	80
[표 4-7] 응답자 혼인상태 .....	81
[표 4-8] 응답자 가구소득 .....	82
[표 4-9] 응답자 거주지역 .....	83
[표 4-10] 응답자 장애 유형 .....	84
[표 4-11] 응답자 장애등급 .....	86
[표 4-12] 장애인과의 관계 .....	87
[표 4-13]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	88
[표 4-14]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	89
[표 4-15]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	90
[표 4-16]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	91
[표 4-17]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	92
[표 4-18]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	93
[표 4-19]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	94
[표 4-20]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	95
[표 4-2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	96
[표 4-22]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	97
[표 4-23]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	98

[표 4-24]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성별 분석) .....	100
[표 4-25]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재가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	101
[표 4-26]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시설거주 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	102
[표 4-27]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	103
[표 4-28]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	104
[표 4-29]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	105
[표 4-30] 시설 밖 거주 경험 .....	106
[표 2-31] 시설 밖 거주기간 .....	106
[표 4-32] 시설 밖 거주 이유 .....	107
[표 4-33]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	108
[표 4-34] 시설 외부 거주 의사 .....	109
[표 4-35]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	110
[표 4-36]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	111
[표 4-37]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	112
[표 4-38]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	113
[표 4-39]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	114
[표 4-40]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	115
[표 4-41]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	116
[표 4-42]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	117
[표 4-43] 소지 자격증 .....	118
[표 4-44]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	119
[표 4-45]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120
[표 4-46]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121
[표 4-47]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	122
[표 4-48]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	123
[표 4-49]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빈도 .....	123
[표 4-50]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	124
[표 4-51]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	125

[표 4-52]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126
[표 4-53]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127
[표 4-54]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1	128
[표 4-55]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2	129
[표 4-56]	FGI 일정	145
[표 4-57]	인터뷰 종합	153
[표 5-1]	SWOT 분석	159
[표 5-2]	주요과제 및 핵심과제	164
[표 5-3]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추진계획	168
[표 5-4]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소요예산	168
[표 5-5]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추진계획	170
[표 5-6]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소요예산	170
[표 5-7]	1.1.3.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계획	172
[표 5-8]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계획	174
[표 5-9]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소요예산	174
[표 5-10]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계획	176
[표 5-11]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176
[표 5-12]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계획	178
[표 5-13]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소요예산	178
[표 5-14]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추진계획	180
[표 5-15]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추진계획	183
[표 5-16]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소요예산	183
[표 5-17]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추진계획	185
[표 5-18]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소요예산	185
[표 5-19]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 추진계획	187
[표 5-20]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추진계획	189
[표 5-21]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소요예산	189
[표 5-22]	2.1.2. 저상버스 도입현황	191

[표 5-23]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계획	191
[표 5-24]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소요예산	191
[표 5-25]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추진계획	193
[표 5-26]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소요예산	193
[표 5-27]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추진계획	195
[표 5-28]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소요예산	195
[표 5-29]	2.2.2. BF 인증 수수료 적용 요율	197
[표 5-30]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추진계획	197
[표 5-31]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소요예산	197
[표 5-32]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추진계획	199
[표 5-33]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소요예산	199
[표 5-34]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추진계획	201
[표 5-35]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소요예산	201
[표 5-36]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203
[표 5-37]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203
[표 5-38]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추진계획	205
[표 5-39]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소요예산	205
[표 5-40]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추진계획	207
[표 5-41]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소요예산	207
[표 5-42]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추진계획	209
[표 5-43]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소요예산	209
[표 5-44]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계획	211
[표 5-45]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소요예산	211
[표 5-46]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추진계획	213
[표 5-47]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소요예산	213
[표 5-48]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추진계획	215
[표 5-49]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소요예산	215
[표 5-50]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17

[표 5-51]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소요예산	217
[표 5-52]	3.1.2.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218
[표 5-53]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추진계획	219
[표 5-54]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추진계획	221
[표 5-55]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소요예산	221
[표 5-56]	3.2.2. 자립지원 시설 체계	223
[표 5-57]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추진계획	223
[표 5-58]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소요예산	223
[표 5-59]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진계획	225
[표 5-60]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소요예산	225
[표 5-61]	3.3.2.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진계획	227
[표 5-62]	3.3.2.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소요예산	227
[표 5-63]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추진계획	229
[표 5-64]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소요예산	229
[표 5-65]	4.1.2.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추진계획	231
[표 5-66]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요예산	231
[표 5-67]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추진계획	233
[표 5-68]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소요예산	233
[표 5-69]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추진계획	235
[표 5-70]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소요예산	235
[표 5-71]	4.2.3.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내용	236
[표 5-72]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추진계획	237
[표 5-73]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소요예산	237
[표 5-74]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운영현황	239
[표 5-75]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현황	239
[표 5-76]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	239
[표 5-77]	세부사업 별 소요 사업비	240

## 〈그림 목차〉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도 .....	6
[그림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	10
[그림 2-2] 전국 장애 정도별 장애인 현황 .....	10
[그림 2-3]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 .....	11
[그림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현황 .....	14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비율 .....	14
[그림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	16
[그림 2-7]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	18
[그림 2-8]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	20
[그림 2-9]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	20
[그림 2-10]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22
[그림 2-11]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	23
[그림 2-1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	24
[그림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6
[그림 2-14] 인천시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	30
[그림 3-1] 보건복지부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51
[그림 3-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 .....	55
[그림 3-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57
[그림 3-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59
[그림 3-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61
[그림 3-6]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2022 ~ 2026) .....	63
[그림 3-7]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	65
[그림 3-8]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	67
[그림 4-1] 응답자 성별 .....	77
[그림 4-2] 응답자 연령대 .....	78
[그림 4-3] 응답자 학력 .....	79

[그림 4-4] 응답자 주거 형태 .....	80
[그림 4-5] 응답자 혼인상태 .....	81
[그림 4-6] 응답자 가구소득 .....	82
[그림 4-7] 응답자 거주지역 .....	83
[그림 4-8] 응답자 장애 유형 .....	85
[그림 4-9] 응답자 장애등급 .....	86
[그림 4-10] 장애인과의 관계 .....	87
[그림 4-11]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	88
[그림 4-12]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	89
[그림 4-13]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	90
[그림 4-14]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	91
[그림 4-15]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	92
[그림 4-1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	93
[그림 4-17]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	94
[그림 4-18]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	95
[그림 4-19]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	96
[그림 4-20]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	97
[그림 4-21]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	99
[그림 4-22]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	103
[그림 4-23]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	104
[그림 4-24]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	105
[그림 4-25] 시설 밖 거주 경험 및 거주기간 .....	106
[그림 4-26] 시설 밖 거주 이유 .....	107
[그림 4-27]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	108
[그림 4-28] 시설 외부 거주 의사 .....	109
[그림 4-29]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	110
[그림 4-30]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	111
[그림 4-31]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	112

[그림 4-32]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	113
[그림 4-33]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	114
[그림 4-34]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	115
[그림 4-35]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	116
[그림 4-36]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	117
[그림 4-37] 소지 자격증 .....	118
[그림 4-38]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	119
[그림 4-39]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120
[그림 4-40]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121
[그림 4-4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	122
[그림 4-42]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빈도 .....	123
[그림 4-43]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	124
[그림 4-44]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	125
[그림 4-45]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	126
[그림 4-46]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	127
[그림 4-47]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 .....	129
[그림 4-48] 재가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132
[그림 4-49] 시설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133
[그림 4-50] 비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134
[그림 4-5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135
[그림 5-1]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 반영 요소 .....	157
[그림 5-2]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도 .....	163



# 제1장 과업 개요

---

제1절 과업의 추진근거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과업의 내용

제4절 과업의 추진체계



## 제 1 장 과업 개요

### 제1절 과업의 추진근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자치단체의 시행을 명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추진근거 명시
  -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천의 장애인 정책 규모와 종류, 그리고 관련 예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국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법과 제도의 특성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
-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교통), 의료, 고용, 교육, 문화, 권익 옹호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 마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
- 해당 과업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8개 구, 2개 군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이며, 과업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함.

## 제3절 과업의 내용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현황
  -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연령별 장애인 인구 현황 조사
  -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사업, 시설현황을 조사
- 국내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정책의 연관성 및 반영 사항을 비교 분석
  - 장애인복지법,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등 시행 중인 법제를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조사하여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
  - 인천광역시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 장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장애인 차별 정도, 장애인 인권교육 실태, 인권보장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
  -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탈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 장애인 시설 근무자에게 시설의 장애인 인권교육 실태, 인권보장 시스템을 및 보완할 사항 확인
- 집단심층면접(FGI)
  - 설문조사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인천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의견,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인천광역시청의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인권 담당, 모퉁이 재단,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농아인 협회,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시 장애우 인권연구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기관을 방문해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정책 현황,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선사항 등에 관해 인터뷰를 시행
- 계획수립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정책과 실태조사 지표를 개발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방향 제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도별 사업계획과 장애 유형별 세부사업 제안

## 제4절 과업의 추진체계

### ○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수준 조사

- 설문조사를 실시(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 정도, 장애인 인권교육 실태, 인권보장 등을 확인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분석
- 인천시의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FGI를 계획하고 중간 보고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반영

### ○ 인천시 현황분석

- 인천시의 장애인 인구(연령별, 지역별, 정도별)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 인천시에서 시행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제안하고 시행 중인 법과 조례를 검토하여 법적인 시행내용을 반영

### ○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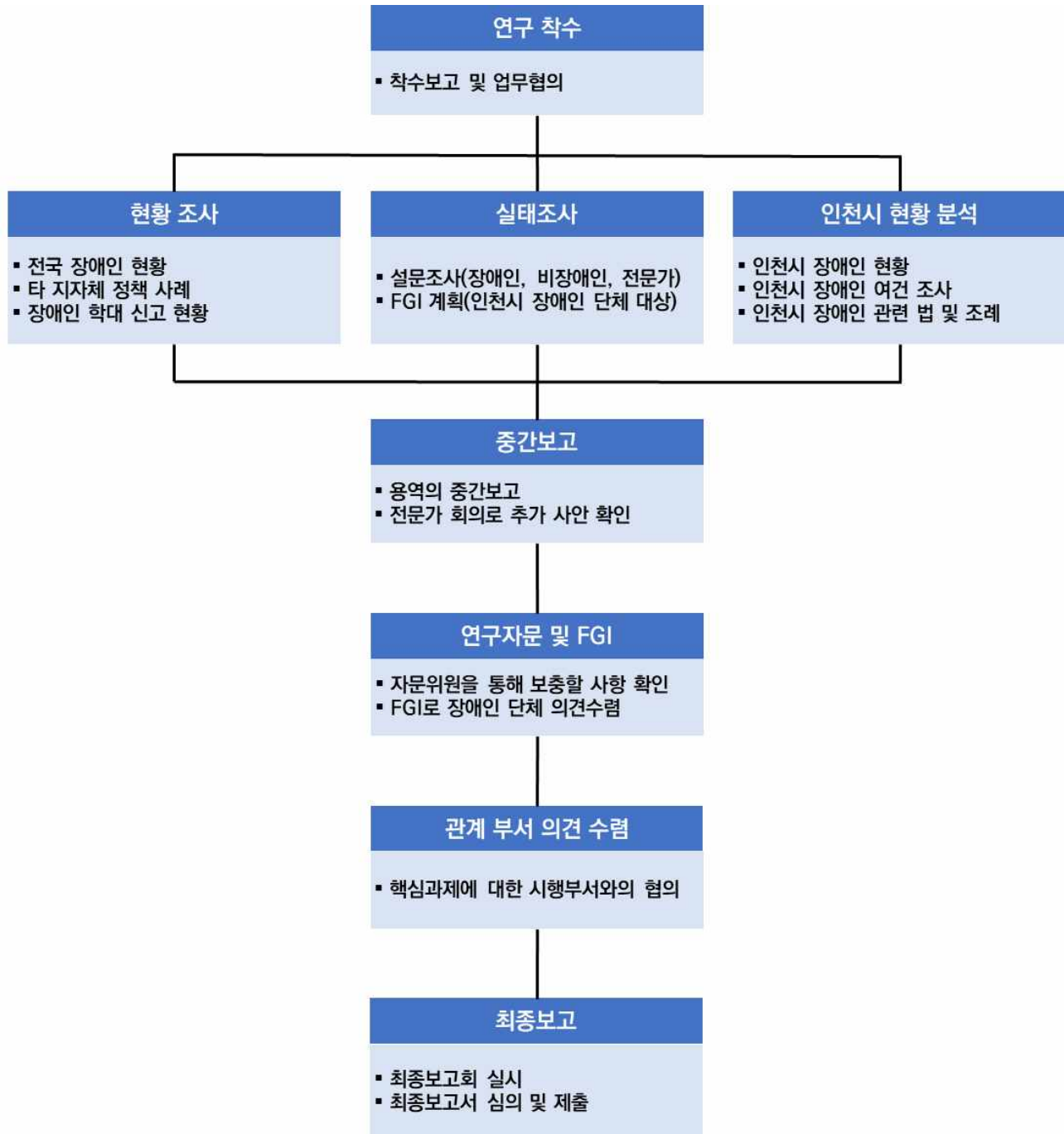
- 전국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을 조사해 전국과 인천시의 특징을 분석
- 상위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장애인 인권정책을 분석해 시사점 도출

### ○ 중간 보고, FGI 및 연구 자문

- 용역의 중간 보고에서 현황분석 결과(전국 및 인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결과를 보고
- 작성된 연구내용에 대해 자문위원을 통해 자문을 시행한 후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FGI(권익옹호기관, 인천광역시 거주 장애인 및 종사자가 바라보는 인천시 장애인복지 의견수렴 및 분석)를 실시하여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에 반영

### ○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최종보고

- 실태조사, 현황 조사, 자문 및 FGI를 분석해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인천시의 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세부 계획 기간 및 예산을 조정
- 최종보고회 개최 시 참석한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 작성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도

## 제2장 주요 현황

---

제1절 전국 장애인 현황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현황

제3절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제4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현황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절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

제7절 관련 법률





## 제 2 장 주요 현황

### 제1절 전국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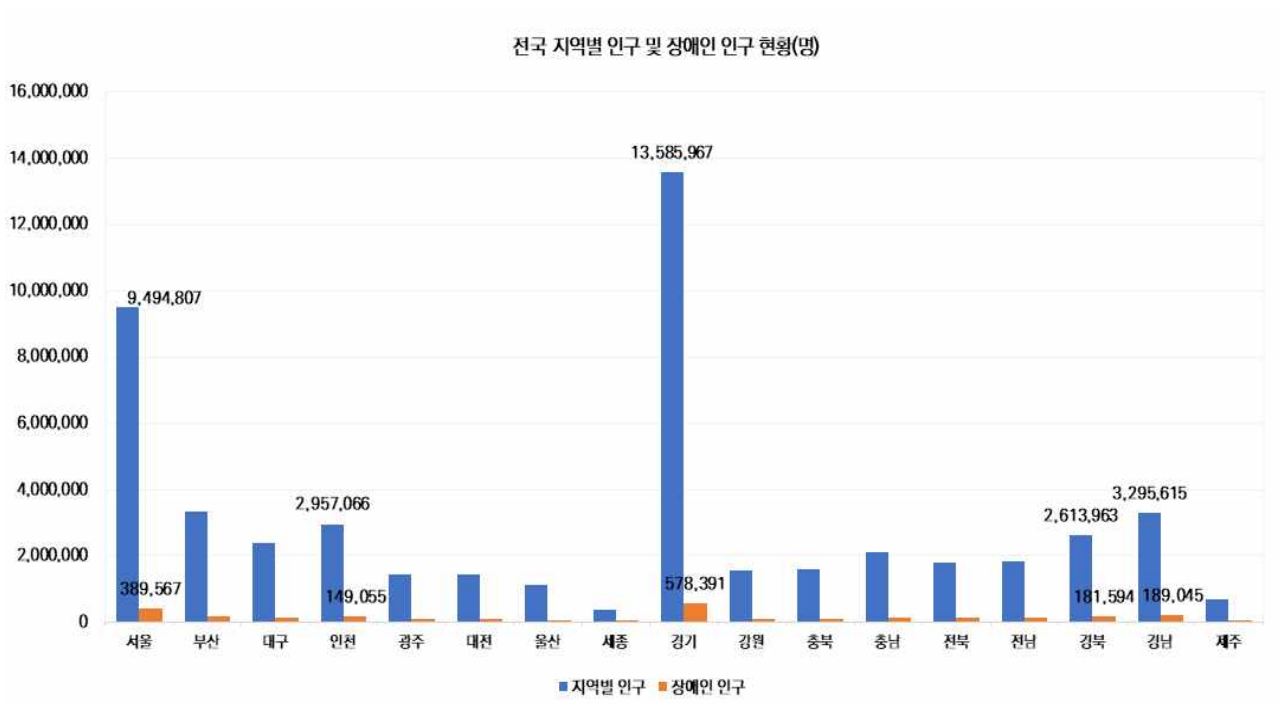
#### 1. 장애인 인구

- 2022. 6월 기준, 전국인구는 51,578,178명이며, 장애인 인구는 2,635,014명으로 전체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순임.
- 각 자치단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중을 비교해보면 수도권보다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진행된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 인구 비중이 높음.
  - 장애 인구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장애인 총인구보다 자치단체 인구 기준 장애인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국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7,426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57,588명으로 나타남.
  -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경기도 >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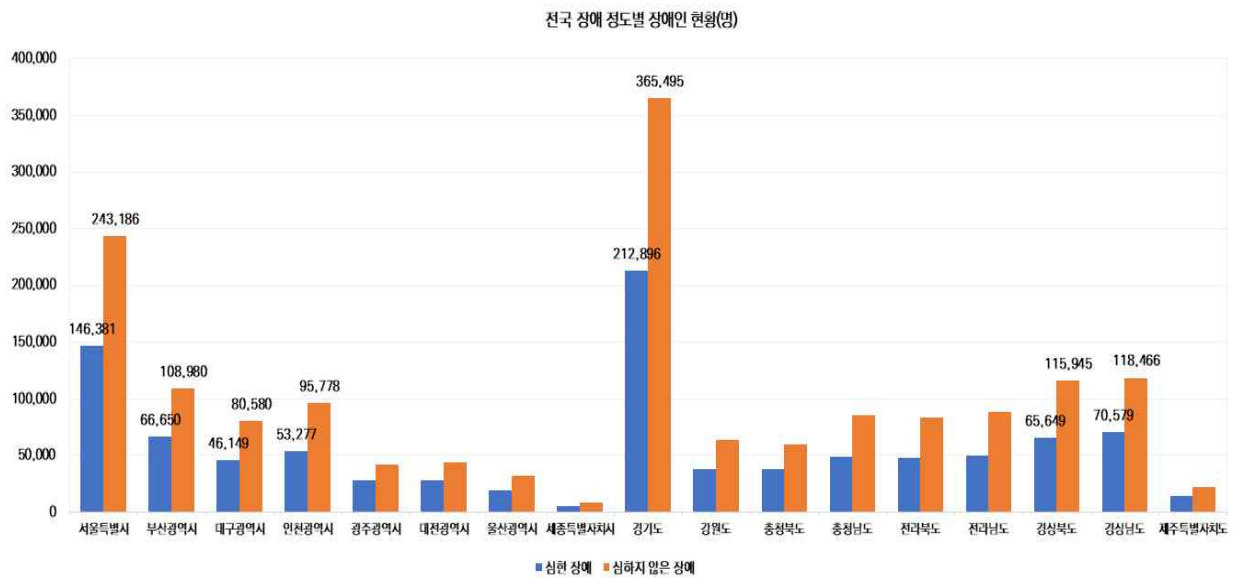
[표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구분	자치단체별 인구(명)	장애인 인구(명)			인구 대비 비중(%)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51,578,178	2,635,014	977,426	1,657,588	5.1
서울특별시	9,494,807	389,567	146,381	243,186	4.1
부산광역시	3,336,737	175,630	66,650	108,980	5.3
대구광역시	2,375,306	126,729	46,149	80,580	5.3
인천광역시	2,957,066	149,055	53,277	95,778	5.0
광주광역시	1,435,378	69,379	27,611	41,768	4.8
대전광역시	1,448,401	71,956	28,104	43,852	5.0
울산광역시	1,115,609	51,134	18,907	32,227	4.6
세종특별자치시	380,215	12,815	4,780	8,035	3.4
경기도	13,585,967	578,391	212,896	365,495	4.3
강원도	1,539,064	101,293	37,900	63,393	6.6
충청북도	1,597,118	97,427	37,374	60,053	6.1
충청남도	2,120,201	134,203	49,022	85,181	6.3
전라북도	1,778,279	131,261	47,809	83,452	7.4
전라남도	1,826,440	138,718	49,988	88,730	7.6
경상북도	2,613,963	181,594	65,649	115,945	6.9
경상남도	3,295,615	189,045	70,579	118,466	5.7
제주특별자치도	678,012	36,817	14,350	22,467	5.4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그림 2-2] 전국 장애 정도별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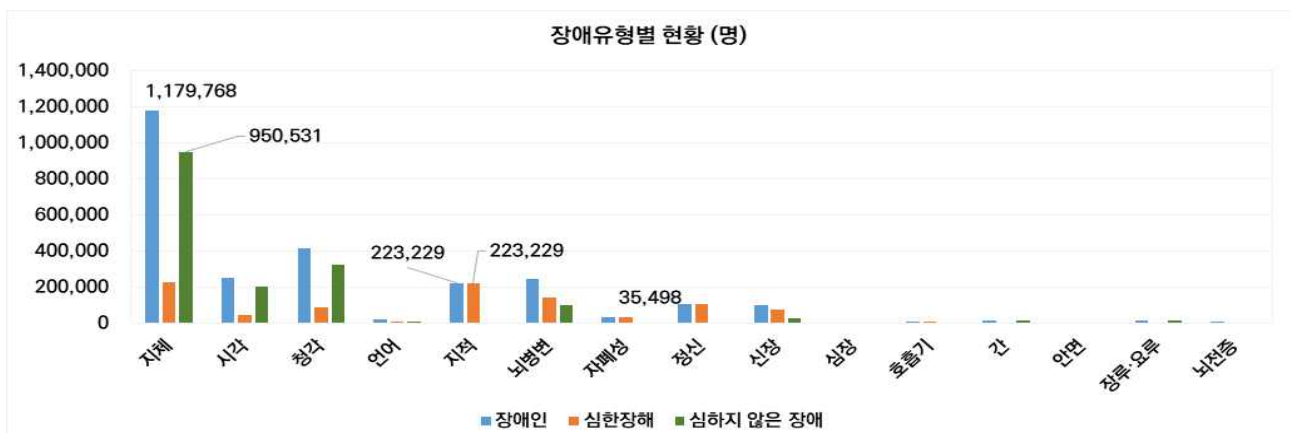
## 2. 전국 장애인 유형별 현황

- 전국 장애인 중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44.8%) > 청각(15.8%)> 시각(9.5%) > 뇌병변(9.3%) 순으로 많으며,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37.1%)보다 심하지 않은 장애(62.9%)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국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비교해보면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 정도별 비중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정책 수립 시 단순히 장애 유형만 고려하기보다는 장애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장애 유형별 분류 시 지체 장애인 비중은 44.8%이며, 장애 정도별 분류 시 심한 장애 19.4%, 심하지 않은 장애는 80.6%인, 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분류 시 비중은 8.5%지만 장애 정도별 분류 시는 심한 장애가 100%임.

[표 2-2]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와 비중

구분	장애인(명)	비중(%)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명)	비중(%)	장애인(명)	비중(%)
합계	2,635,014	100.0	977,426	37.1	1,657,588	62.9
지체	1,179,768	44.8	229,237	19.4	950,531	80.6
시각	250,226	9.5	46,415	18.5	203,811	81.5
청각	415,367	15.8	89,181	21.5	326,186	78.5
언어	23,109	0.9	11,407	49.4	11,702	50.6
지적	223,229	8.5	223,229	100.0	0	0.0
뇌병변	243,798	9.3	142,004	58.2	101,794	41.8
자폐성	35,498	1.3	35,498	100.0	0	0.0
정신	104,068	3.9	103,581	99.5	487	0.5
신장	102,764	3.9	76,556	74.5	26,208	25.5
심장	5,085	0.2	3,920	77.1	1,165	22.9
호흡기	11,263	0.4	10,824	96.1	439	3.9
간	14,740	0.6	717	4.9	14,023	95.1
안면	2,713	0.1	1,389	51.2	1,324	48.8
장루·요루	16,317	0.6	1,575	9.7	14,742	90.3
뇌전증	7,069	0.3	1,893	26.8	5,176	73.2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3]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

##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현황

###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 2022년 6월 기준 인천시 인구는 2,957,066명인데 이 중 장애인 인구는 149,055명으로 전체의 약 5.04%를 차지하고 있음.
- 군·구별로는 부평구 > 남동구 > 서구 > 미추홀구 순으로 많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단위는 장애인 인구가 적음.
- 그러나 해당 군·구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은 구보다는 군의 비중이 높음.
- 한편 인천시 장애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인(45.2%) > 청각장애인(17.4%) > 시각장애인(9.2%) 순으로 많으며, 장애 정도별 분포는 심한 장애(35.7%)보다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중(64.3%)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전국 장애인 현황의 분석 결과처럼 인천시 역시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표 2-3]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군·구별, 유형별)

아홉 분		계	소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류 요류	뇌전증
총계			149,055	67,355	13,722	25,883	1,536	11,232	13,116	1,885	4,884	6,326	257	614	740	145	915	405
계	심한 장애	149,055	53,277	13,409	2,529	5,014	707	11,232	7,678	1,895	4,859	4,866	198	594	43	72	87	94
	심하지 않은 장애		95,778	53,976	11,193	20,869	829	0	5,438	0	25	1,460	59	20	697	73	828	311
중구	심한 장애	6,684	2,170	548	111	229	33	460	311	61	185	189	6	24	5	1	4	3
	심하지 않은 장애		4,514	2,501	565	976	30	0	259	0	5	69	7	1	40	3	44	14
동구	심한 장애	4,657	1,543	473	81	153	16	302	190	30	153	118	6	15	0	1	3	2
	심하지 않은 장애		3,114	1,615	284	960	16	0	166	0	0	24	2	2	11	4	24	6
미추 홀구	심한 장애	23,454	7,873	1,915	422	730	111	1,668	1,133	230	701	787	26	100	9	15	11	15
	심하지 않은 장애		15,581	8,557	1,768	3,737	144	0	864	0	3	197	9	0	85	9	156	52
연수구	심한 장애	13,995	5,229	1,442	230	425	63	1,088	793	239	397	431	27	53	4	5	19	13
	심하지 않은 장애		8,766	5,121	956	1,727	90	0	502	0	0	176	5	3	74	7	73	32
남동구	심한 장애	26,558	9,677	2,589	475	889	129	1,879	1,424	369	828	896	38	106	7	9	19	20
	심하지 않은 장애		16,881	9,446	1,956	3,730	157	0	950	0	3	278	11	4	118	13	16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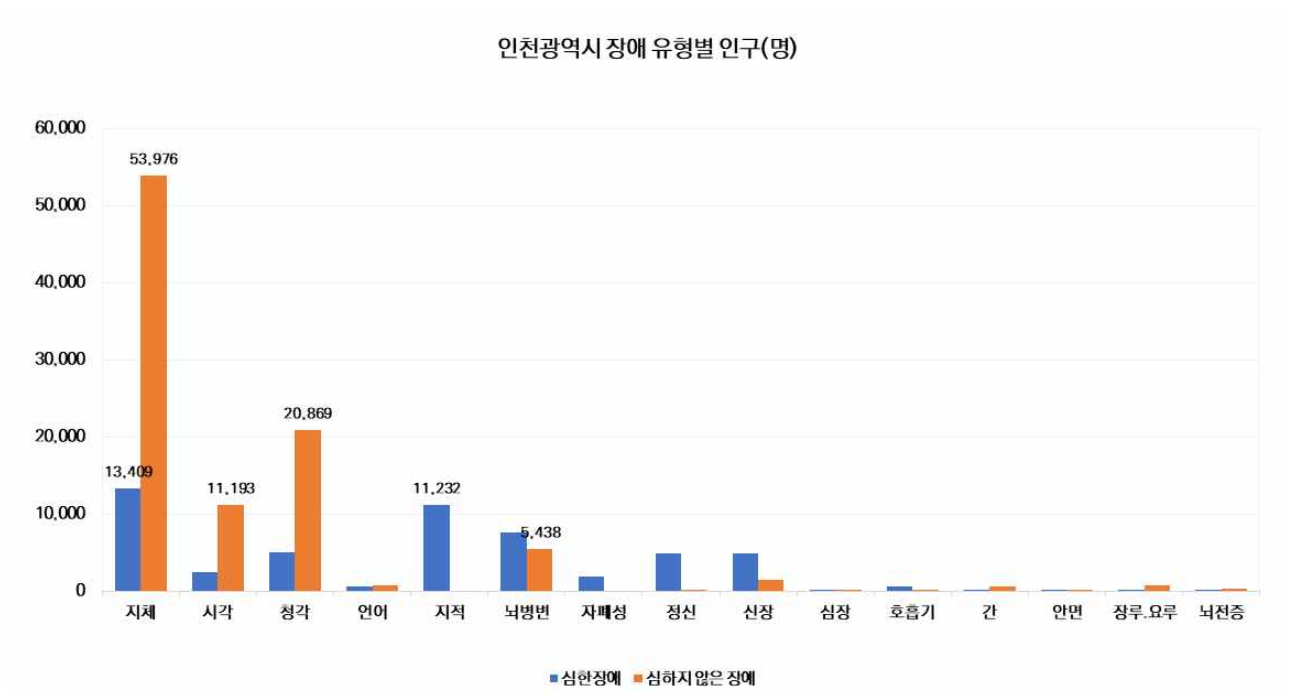
아홉 분		계	소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부평구	심한 장애	27,018	10,109	2,499	530	978	152	2,069	1,473	307	958	960	31	104	8	11	9	20
	심하지 않은 장애		16,909	9,355	2,033	3,792	158	0	997	0	6	235	10	2	123	11	126	61
계양구	심한 장애	14,842	5,267	1,229	208	469	52	1,152	808	236	472	522	17	73	4	8	7	10
	심하지 않은 장애		9,575	5,513	1,193	1,872	66	0	539	0	4	183	6	1	83	7	71	37
서구	심한 장애	24,345	8,634	2,100	348	811	110	1,877	1,203	346	866	796	39	93	4	19	12	10
	심하지 않은 장애		15,711	9,200	1,897	2,988	144	0	917	0	4	237	5	5	129	16	125	44
강화군	심한 장애	5,922	2,243	484	106	270	31	556	282	62	268	147	6	24	1	3	2	1
	심하지 않은 장애		3,679	2,038	416	878	19	0	194	0	0	50	3	1	28	2	38	12
옹진군	심한 장애	1,580	532	130	18	60	10	181	61	15	31	20	2	2	1	0	1	0
	심하지 않은 장애		1,048	630	125	209	5	0	50	0	0	11	1	1	6	1	8	1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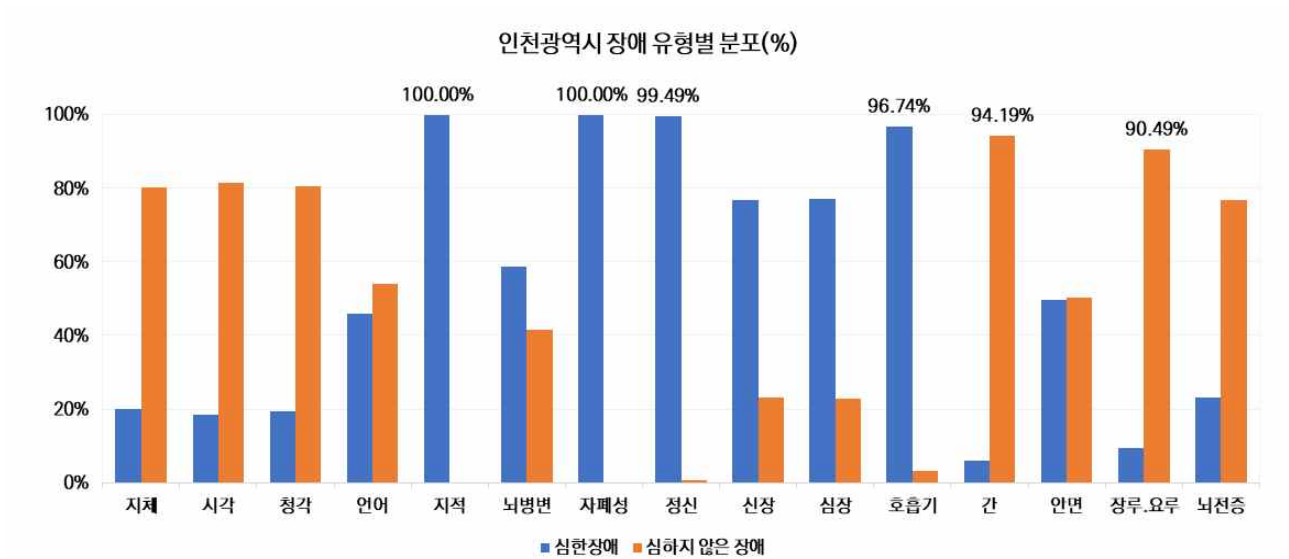
[표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정도별 현황

구 분	장애인(명)	비중(%)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명)	비중(%)	장애인(명)	비중(%)
합계	149,055	100.0	53,277	35.7	95,778	64.3
지체	67,385	45.2	13,409	19.9	53,976	80.1
시각	13,722	9.2	2,529	18.4	11,193	81.6
청각	25,883	17.4	5,014	19.4	20,869	80.6
언어	1,536	1.0	707	46.0	829	54.0
지적	11,232	7.5	11,232	100.0	0	0.0
뇌병변	13,116	8.8	7,678	58.5	5,438	41.5
자폐성	1,895	1.3	1,895	100.0	0	0.0
정신	4,884	3.3	4,859	99.5	25	0.5
신장	6,326	4.2	4,866	76.9	1,460	23.1
심장	257	0.2	198	77.0	59	23.0
호흡기	614	0.4	594	96.7	20	3.3
간	740	0.5	43	5.8	697	94.2
안면	145	0.1	72	49.7	73	50.3
장루.요루	915	0.6	87	9.5	828	90.5
뇌전증	405	0.3	94	23.2	311	76.8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현황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비율

- 장애인에 대한 전국과 인천시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분포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2-5] 전국과 인천시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비교

구 분	전국	인천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비중(%)	비중(%)	전국(%)	인천(%)	전국(%)	인천(%)
합계	100.0	100.0	37.1	35.7	62.9	64.3
지체	44.8	45.2	19.4	19.9	80.6	80.1
시각	9.5	9.2	18.5	18.4	81.5	81.6
청각	15.8	17.4	21.5	19.4	78.5	80.6
언어	0.9	1.0	49.4	46.0	50.6	54.0
지적	8.5	7.5	100.0	100.0	0.0	0.0
뇌병변	9.3	8.8	58.2	58.5	41.8	41.5
자폐성	1.3	1.3	100.0	100.0	0.0	0.0
정신	3.9	3.3	99.5	99.5	0.5	0.5
신장	3.9	4.2	74.5	76.9	25.5	23.1
심장	0.2	0.2	77.1	77.0	22.9	23.0
호흡기	0.4	0.4	96.1	96.7	3.9	3.3
간	0.6	0.5	4.9	5.8	95.1	94.2
안면	0.1	0.1	51.2	49.7	48.8	50.3
장루·요루	0.6	0.6	9.7	9.5	90.3	90.5
뇌전증	0.3	0.3	26.8	23.2	73.2	76.8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 2.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 (1) 장애 유형별 분포

○ 2022. 6월 기준 인천시 장애인 인구 149,055명 중 장애 유형별 분포는 군·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든 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 유형은 인천시 전체 장애 유형 분포와 유사하게 지체, 청각 및 시각 장애로 조사됨.

- 한편 인천시 군·구별 장애 인구 기준 장애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강화군 및 옹진군의 지적장애인 비중이 타 군·구의 비중보다 높아 이에 대한 인천시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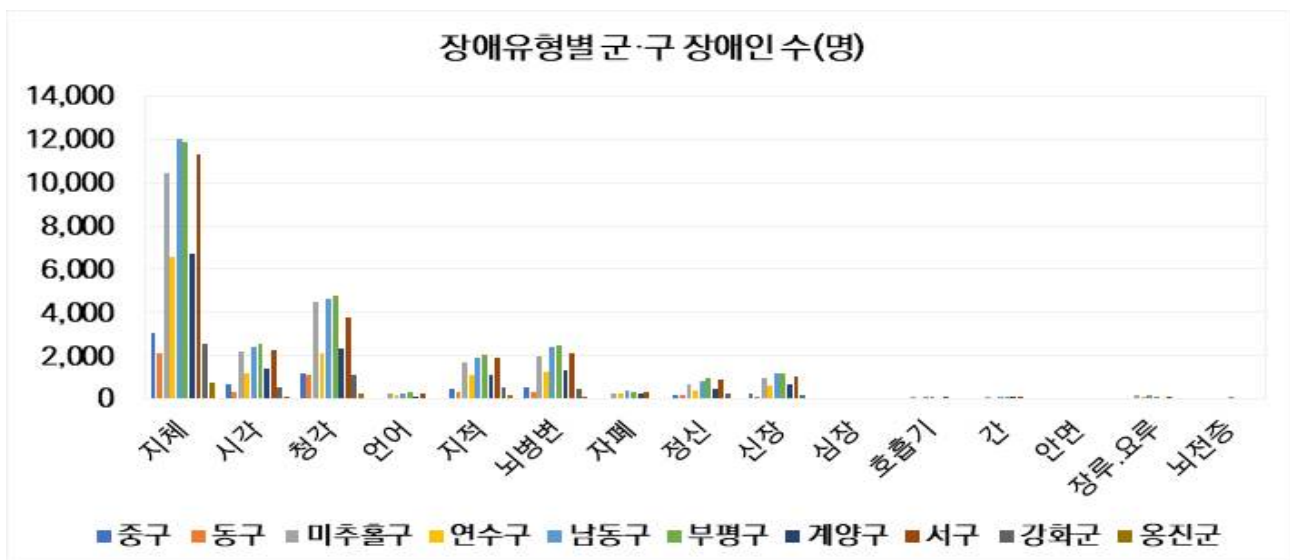
. 인천시 타 군·구 : 6.5 ~ 7.8%, 강화군 9.4%, 옹진군 11.5%

[표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단위 : %)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지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합계	149,055	67,385	13,722	25,883	1,536	11,232	13,116	1,895	4,884	6,326	257	614	740	145	915	405
중구	6,684	3,049	676	1,205	63	460	570	61	190	258	13	25	45	4	48	17
동구	4,657	2,088	365	1,113	32	302	356	30	153	142	8	17	11	5	27	8
미추홀구	23,454	10,472	2,190	4,467	255	1,668	1,997	230	704	984	35	100	94	24	167	67
연수구	13,995	6,563	1,186	2,152	153	1,088	1,295	239	397	607	32	56	78	12	92	45
남동구	26,558	12,035	2,431	4,619	286	1,879	2,374	369	831	1,174	49	110	125	22	182	72
부평구	27,018	11,854	2,563	4,770	310	2,069	2,470	307	964	1,195	41	106	131	22	135	81
계양구	14,842	6,742	1,401	2,341	118	1,152	1,347	236	476	705	23	74	87	15	78	47
서구	24,345	11,300	2,245	3,799	254	1,877	2,120	346	870	1,033	44	98	133	35	137	54
강화군	5,922	2,522	522	1,148	50	556	476	62	268	197	9	25	29	5	40	13
옹진군	1,580	760	143	269	15	181	111	15	31	31	3	3	7	1	9	1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표 2-7]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인구 기준 장애 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지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구	45.6	10.1	18.0	0.9	6.9	8.5	0.9	2.8	3.9	0.2	0.4	0.7	0.1	0.7	0.3
동구	44.8	7.8	23.9	0.7	6.5	7.6	0.6	3.3	3.0	0.2	0.4	0.2	0.1	0.6	0.2
미추홀구	44.6	9.3	19.0	1.1	7.1	8.5	1.0	3.0	4.2	0.1	0.4	0.4	0.1	0.7	0.3
연수구	46.9	8.5	15.4	1.1	7.8	9.3	1.7	2.8	4.3	0.2	0.4	0.6	0.1	0.7	0.3
남동구	45.3	9.2	17.4	1.1	7.1	8.9	1.4	3.1	4.4	0.2	0.4	0.5	0.1	0.7	0.3
부평구	43.9	9.5	17.7	1.1	7.7	9.1	1.1	3.6	4.4	0.2	0.4	0.5	0.1	0.5	0.3
계양구	45.4	9.4	15.8	0.8	7.8	9.1	1.6	3.2	4.8	0.2	0.5	0.6	0.1	0.5	0.3
서구	46.4	9.2	15.6	1.0	7.7	8.7	1.4	3.6	4.2	0.2	0.4	0.5	0.1	0.6	0.2
강화군	42.6	8.8	19.4	0.8	9.4	8.0	1.0	4.5	3.3	0.2	0.4	0.5	0.1	0.7	0.2
옹진군	48.1	9.1	17.0	0.9	11.5	7.0	0.9	2.0	2.0	0.2	0.2	0.4	0.1	0.6	0.1

○ 한편 인천시 장애 유형별 인구 기준 해당 군·구의 장애 유형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장애 유형 분포와 군·구별로 장애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

－ 인천시 장애 유형별 인구 분포는 지체 > 청각 > 시각 순이었으나, 장애 유형 인구 기준 군·구별 장애 유형 인구는 각 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구 - 간, 동구 - 청각, 미추홀구 - 장루·요루, 연수구 - 심장, 남동구 - 장루·요루

． 부평구 - 언어, 계양구 - 호흡기, 서구 - 자폐 및 간, 강화군 - 청각, 옹진군 - 심장

[표 2-8]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 인구 기준 군·구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단위 : %)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지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구	4.5	4.9	4.7	4.1	4.1	4.3	3.2	3.9	4.1	5.1	4.1	6.1	2.8	5.2	4.2
동구	3.1	2.7	4.3	2.1	2.7	2.7	1.6	3.1	2.2	3.1	2.8	1.5	3.4	3.0	2.0
미추홀구	15.5	16.0	17.3	16.6	14.9	15.2	12.1	14.4	15.6	13.6	16.3	12.7	16.6	18.3	16.5
연수구	9.7	8.6	8.3	10.0	9.7	9.9	12.6	8.1	9.6	12.5	9.1	10.5	8.3	10.1	11.1
남동구	17.9	17.7	17.8	18.6	16.7	18.1	19.5	17.0	18.6	19.1	17.9	16.9	15.2	19.9	17.8
부평구	17.6	18.7	18.4	20.2	18.4	18.8	16.2	19.7	18.9	16.0	17.3	17.7	15.2	14.8	20.0
계양구	10.0	10.2	9.0	7.7	10.3	10.3	12.5	9.7	11.1	8.9	12.1	11.8	10.3	8.5	11.6
서구	16.8	16.4	14.7	16.5	16.7	16.2	18.3	17.8	16.3	17.1	16.0	18.0	24.1	15.0	13.3
강화군	3.7	3.8	4.4	3.3	5.0	3.6	3.3	5.5	3.1	3.5	4.1	3.9	3.4	4.4	3.2
옹진군	1.1	1.0	1.0	1.0	1.6	0.8	0.8	0.6	0.5	1.2	0.5	0.9	0.7	1.0	0.2

## (2) 장애 정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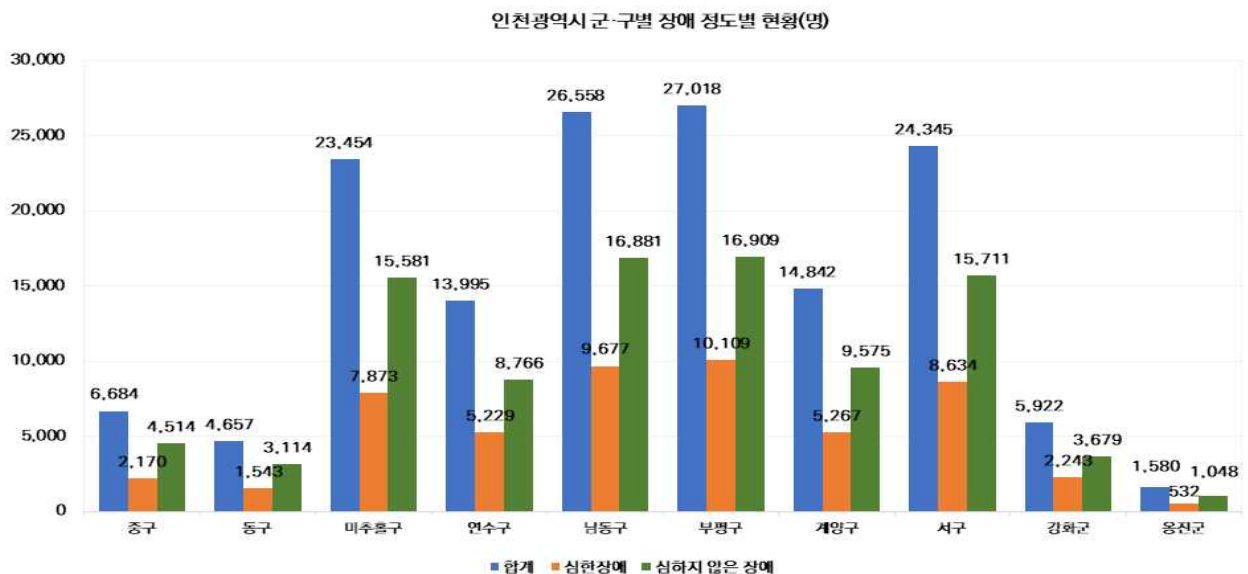
- 인천시 군·구별 장애 정도는 인천시 전체(심한 장애 35.7%, 심하지 않은 장애 (64.3%)와 비교해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심한 장애 : 강화군 > 부평구=연수구, 심하지 않은 장애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순

[표 2-9]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명)	비중(%)	장애인(명)	비중(%)
계	149,055	53,277	35.7	95,778	64.3
중구	6,684	2,170	32.5	4,514	67.5
동구	4,657	1,543	33.1	3,114	66.9
미추홀구	23,454	7,873	33.6	15,581	66.4
연수구	13,995	5,229	37.4	8,766	62.6
남동구	26,558	9,677	36.4	16,881	63.6
부평구	27,018	10,109	37.4	16,909	62.6
계양구	14,842	5,267	35.5	9,575	64.5
서구	24,345	8,634	35.5	15,711	64.5
강화군	5,922	2,243	37.9	3,679	62.1
옹진군	1,580	532	33.7	1,048	66.3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기]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 3.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인 인구

#### (1) 장애 유형별 분포

○ 인천시 장애인 인구 중 연령대별 장애 유형은 만 39세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 80세 이상에서는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만 39세 이하 : 지적 > 지체 > 뇌병변 및 자폐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만 40세 이상 :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지체, 지적, 시각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장애 유형별 증감 속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체 및 시각 장애는 만 30세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청각, 정신, 신장 장애인은 만 40세부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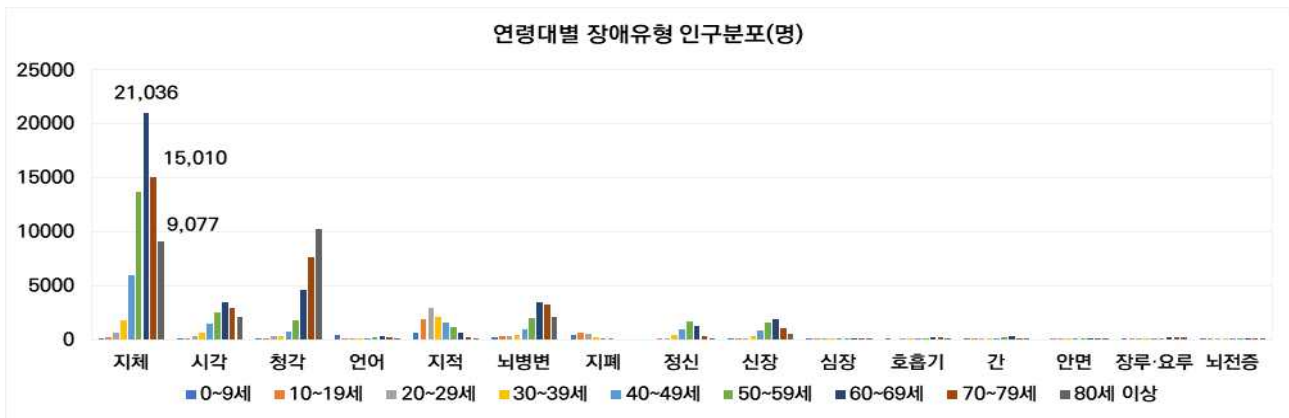
·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만 39세까지 증가하다 만 40세 이상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인천시의 연령대별 장애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로 장애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생 장애의 유전적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장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인천광역시의 연령대별 장애 유형

구분	합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49,055	1,958	3,446	5,420	6,482	12,927	25,346	37,577	31,310	24,589
지체	67,385	44	185	612	<b>1,775</b>	5,980	13,666	21,036	15,010	9,077
시각	13,722	27	122	360	<b>638</b>	1,515	2,551	3,418	2,975	2,116
청각	25,883	95	154	292	348	<b>710</b>	1,822	4,568	7,632	10,262
언어	1,536	409	72	30	51	121	226	326	198	103
지적	11,232	648	1,913	2,930	2,086	1,537	1,183	690	199	46
뇌병변	13,116	259	319	341	445	923	2,037	3,473	3,244	2,075
지폐	1,895	447	619	532	268	27	2	0	0	0
정신	4,884	0	1	146	451	<b>949</b>	1,678	1,265	340	54
신장	6,326	5	9	71	287	<b>889</b>	1,586	1,872	1,073	534
심장	257	7	13	35	23	26	37	58	35	23
호흡기	614	1	0	5	14	24	79	224	202	65
간	740	10	13	16	23	69	207	297	101	4
안면	145	0	1	3	14	21	30	38	29	9
장루·요루	915	3	9	15	13	35	124	240	258	218
뇌전증	405	3	16	32	46	101	118	72	14	3

출처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8]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 (2) 장애 정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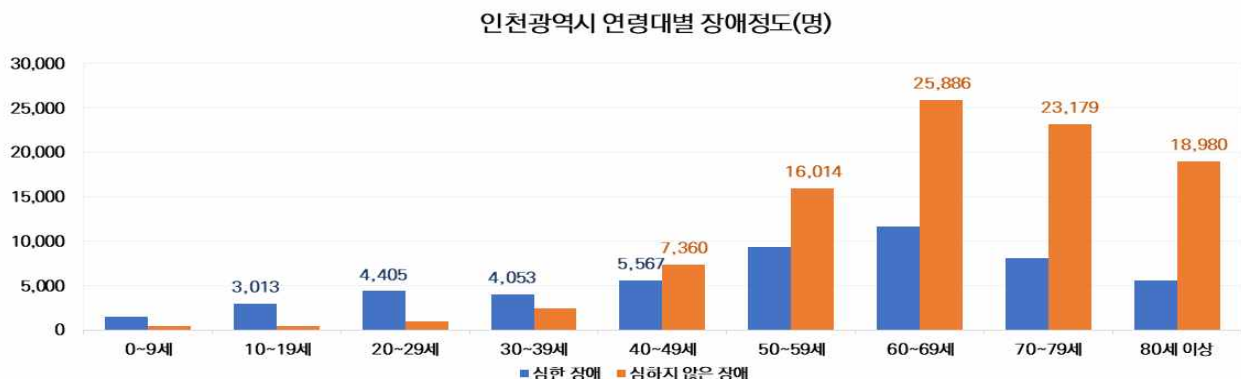
- 2022년 6월 기준 인천시 연령대별 장애인 인구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약 80%로 조사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역전되는 기준은 만 49세 이하 기준으로 나타남.
  - 장애 정도는 고령화에 따라 심한 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단위 : 명)

구분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149,055	53,277	95,778
0~9세	1,958	1,476	482
10~19세	3,446	3,013	433
20~29세	5,420	4,405	1,015
30~39세	6,482	4,053	2,429
40~49세	12,927	5,567	7,360
50~59세	25,346	9,332	16,014
60~69세	37,577	11,691	25,886
70~79세	31,310	8,131	23,179
80세 이상	24,589	5,609	18,980

주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2.06)



[그림 2-9]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 제3절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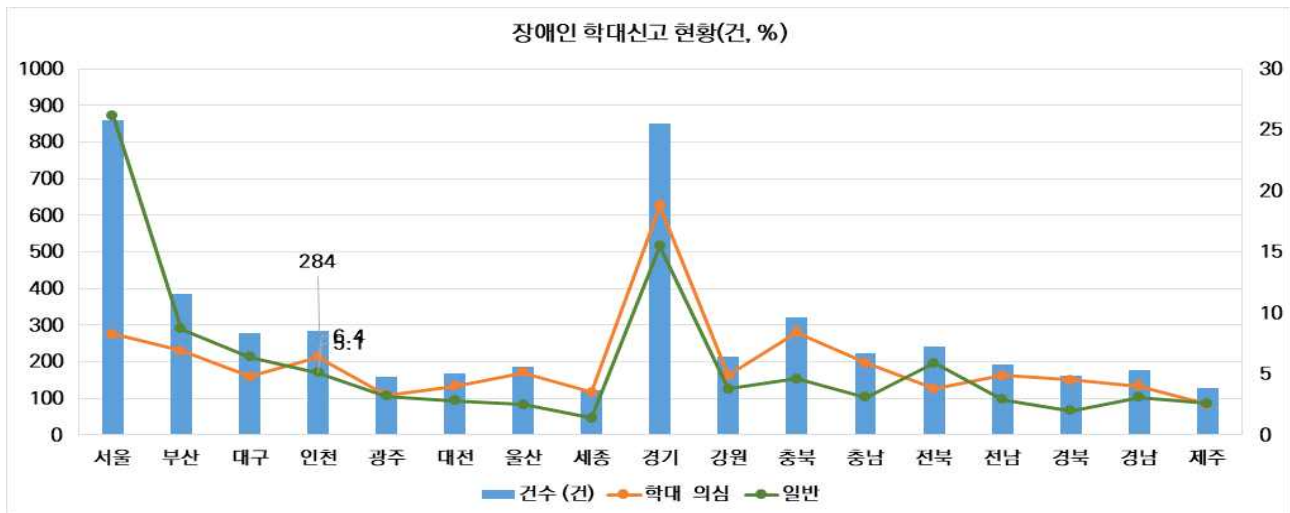
#### 1.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제3항에 제시된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해 전화번호 1644-8295로 신고를 받으며, 신고접수 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학대 의심 사례’로, 장애인 학대를 의심할 여지가 없거나, 단순문의 및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진행하면 ‘일반상담’으로 분류함.
  - 신고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기관방문 등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피해자 및 가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사건의 조사 지원, 학대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선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인천시의 장애인 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전국 신고 건수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학대 의심 사례는 157건, 일반 사례 127건임.

[표 2-12]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구 분	계		학대 의심 사례		일반 사례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계	4,957	100.0	2,461	100.0	2,496	100.0
서울	859	17.3	205	8.3	654	26.2
부산	385	7.8	169	6.9	216	8.7
대구	279	5.6	119	4.8	160	6.4
인천	284	5.7	157	6.4	127	5.1
광주	160	3.2	80	3.3	80	3.2
대전	169	3.4	99	4.0	70	2.8
울산	188	3.8	125	5.1	63	2.5
세종	122	2.5	87	3.5	35	1.4
경기	851	17.2	463	18.8	388	15.5
강원	215	4.3	120	4.9	95	3.8
충북	320	6.5	206	8.4	114	4.6
충남	223	4.5	145	5.9	78	3.1
전북	241	4.9	93	3.8	148	5.9
전남	194	3.9	121	4.9	73	2.9
경북	162	3.3	111	4.5	51	2.0
경남	177	3.6	99	4.0	78	3.1
제주	128	2.6	62	2.5	66	2.6

출처 :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권익옹호기관



[그림 2-10]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 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응급조치 의무 등)

-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바로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장애인 및 학대 행위 의심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장애인 학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함.
- .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통행

### ○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해야 하나,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일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현장에 출동할 필요가 없는 때도 있음.

- 신고자 및 피해장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가 있거나 이미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때도 있음.

### ○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형태의 조사 과정을 ‘학대 조사’라 칭하는데 2021년 기준 인천시 장애인 학대 접수는 2020년 101건, 2021년 157건, 2022년 93건이며 이중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증가추세여서 인천시의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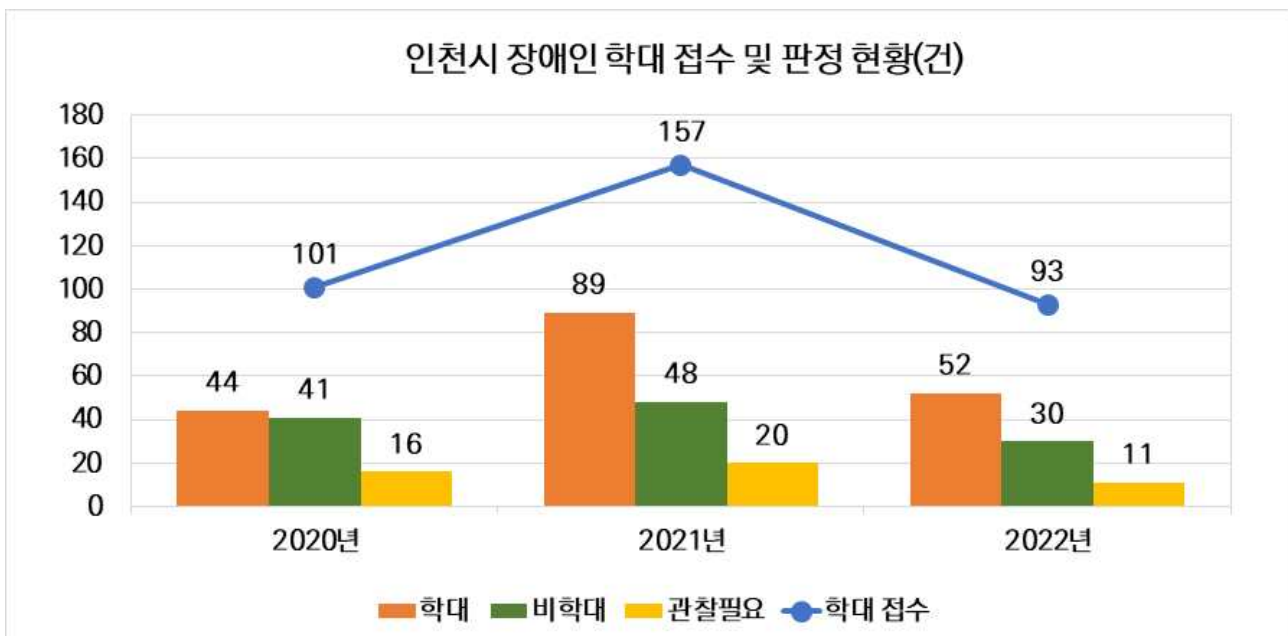
- 학대 접수된 사례 중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시점에서는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향후 학대 피해가 예측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례는 관찰 필요로 분류함.

[표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학대 접수	학대 판정			
		계	학대	비학대	관찰 필요
2020년	101	101	44(43.6%)	41	16
2021년	157	157	89(56.7%)	48	20
2022년	93	93	52(55.9%)	30	11

출처 :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권익옹호기관



[그림 2-11]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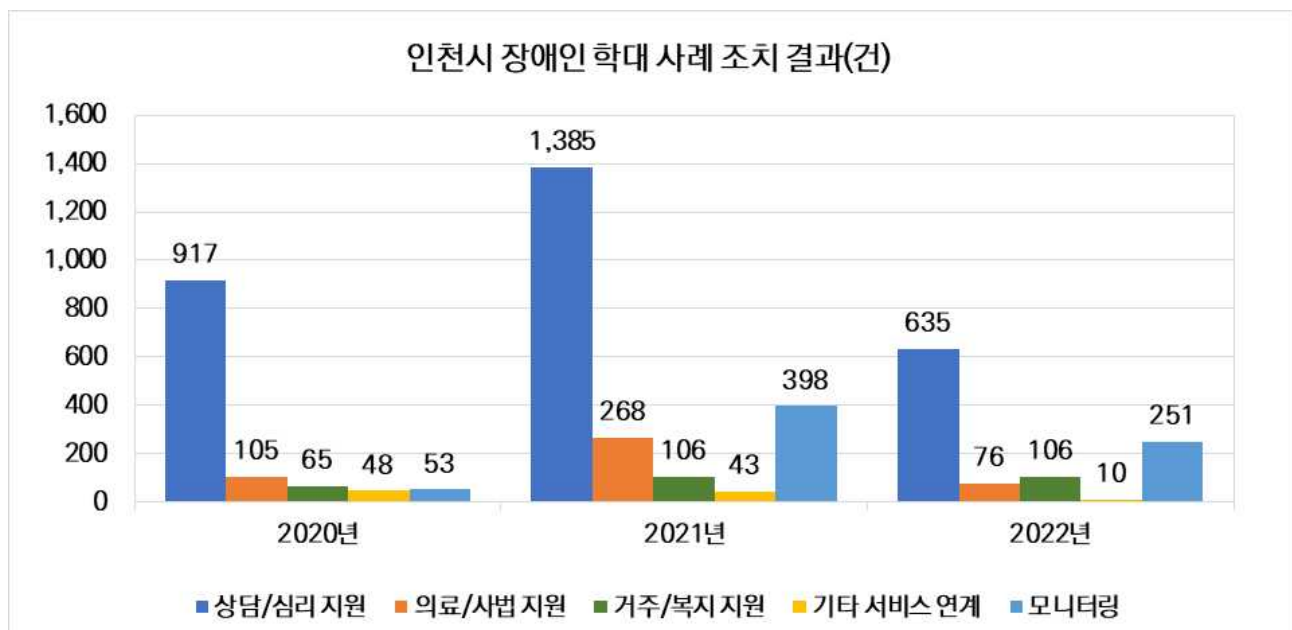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방법은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 및 사법 지원, 거주 및 복지 지원, 기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여 조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 및 심리 지원(2,937건)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모니터링(702건), 의료 및 사법 지원(449건) 순으로 나타남.

[표 2-14]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단위 : 건)

구분	계	상담·심리 지원	의료·사법 지원	거주·복지 지원	기타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2020년	1,188	917	105	65	48	53
2021년	2,200	1,385	268	106	43	398
2022년	1,078	635	76	106	10	251
계	4,466	2,937	449	277	101	702

출처 :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권익옹호기관



[그림 2-1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 제4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현황

### 1. 장애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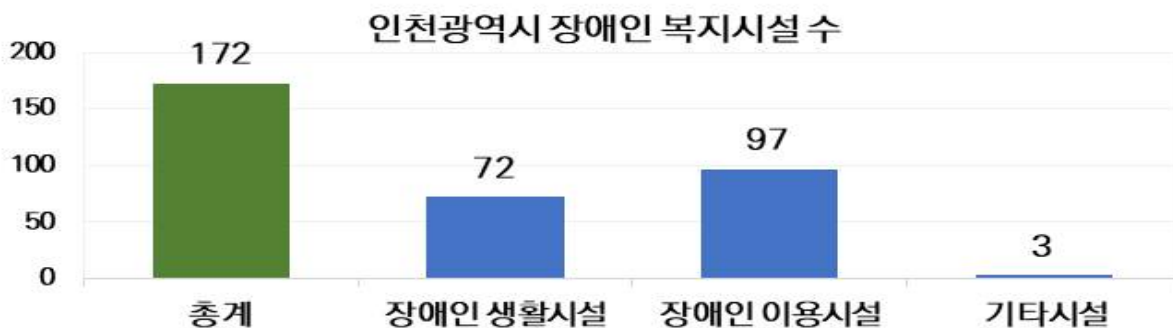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 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022년 9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장애복지시설은 총 172개소인데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 72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97개소, 기타시설 3개소
    - .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은 크게 생활(거주)시설과 쉼터로 구분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단기 거주 시설(5), 거주 시설(20), 개인 거주 운영시설(3) 및 공동생활가정(43)과 피해장애인쉼터(1)로 구분
    - . 장애인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재활 시설(55), 의료재활 시설(2), 직업 재활 시설(38), 생상품 판매시설(2)로 구분
    - . 기타시설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1), 점자도서관(1), 수어 통역센터(1)로 구성
- 한편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복지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구(31) 및 미추홀구(30)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구 및 옹진군은 각각 5개소씩 분포하고 있어 가장 적은 장애인복지시설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시 장애복지시설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인 쉼터와 장애인 이용시설인 의료재활 시설 및 생상품 판매시설은 2~3개소씩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중 거주시설, 개인 운영 거주시설 및 단기 거주시설은 미설치된 군·구가 있어 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5]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기타시설				
		계	생활(거주)시설					쉼터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계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소계	거주시설	개인영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타		소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계	172	72	71	20	3	5	43	1	97	55	10	42	3	2	38	3	35	2	3	1	1	1
중구	9	2	2			1	1		7	5	2	3			2		2					
동구	5	1	1				1		4	2	1	1			2	1	1					
미추홀구	31	12	12	2		2	8		18	9	1	7	1	1	8		8		1		1	
연수구	17	10	9	2	1	1	5	1	7	5	1	4		1	1		1					
남동구	14	3	3	1			2		9	6	1	5			3		3		2	1		1
부평구	32	15	15	6	1	1	7		17	10	1	8	1		7		7					
계양구	16	5	5	1			4		11	7	1	6			4		4					
서구	27	11	11	1	1		9		16	7	1	5	1		7	1	6	2				
강화군	16	10	10	4			6		6	3	1	2			3	1	2					
옹진군	5	3	3	3					2	1		1			1		1					

출처 : 인천시청 내부자료 ('22년 9월 말 기준)



[그림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 다중이용시설 현황

-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5,000㎡ 이상으로 143개소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은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여객 및 운수용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됨.
  - 바닥면적 5,000㎡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은 군·구에서 관리함.
- 다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필요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2018)에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통계를 확인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5년 단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파악은 다음 조사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상설기관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수조사) 실시 예정('23. 6. ~ 10.)

[표 2-16]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현황

구분	총합계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여객 및 운수용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계	143	13	10	2	36	19	63
중구	12	3	2	.	3	2	2
동구	3	.	.	.	.	1	2
미추홀구	17	.	.	1	6	2	8
연수구	20	3	3	.	2	1	11
남동구	21	2	3	.	5	2	9
부평구	22	1	1	.	9	3	8
계양구	19	2	.	.	5	2	10
서구	26	2	1	.	5	5	13
강화군	3	.	.	1	1	1	.
옹진군	.	.	.	.	.	.	.

출처 : 인천시청 내부자료

##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 1. 장애인 현황

-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는 유형별로 **지체 > 청각 > 시각 > 뇌병변 > 지적**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지적, 자폐성, 정신, 호흡기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특정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30대 미만 : 지적장애인
  - 40대 이상 70대 미만 : 지체 장애인
  - 80대 이상 : 청각장애인
- 고령화에 따라 40대 이상의 심한 장애 비율이 높음.
- 군·구별로 장애인이 많은 지역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함.
  - 모든 군·구는 지체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1, 2순위로 가장 많고, 3, 4순위는 지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많으므로 해당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이 필요
  - 장애인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와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신장 장애인이 많으므로, 이들이 관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편리한 정책이 필요
  - 장애인이 자신들이 가진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연령대에 따른 장애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인천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이 50%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정책이 필요
  - 장애 유형별로 대부분 40대 장애인의 비중이 높지만, 지체장애인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 2. 장애인 학대

- 2020년 학대 신고 현황 기준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신고 건수가 높은 수준에 있음.**
  - 학대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학대 신고율이 높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학대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 시설 부족
  - 장애아동(학령기 7~18세 아동) 전용 시설이 없어 성인시설이나 비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문제 발생
- 장애인복지 세부시설의 지역 간 편차 해소 필요
  - 인천재활의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은 각각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위치해 계양구 및 서구 같은 인천시 북쪽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해당 지역에 **의료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4. 시사점

-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대를 고려한 장애인 정책 수립 필요함.
  - 연령대에 따라서 장애의 유형이 많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이동환경 개선 계획이 필요
  - 60세 이상의 장애인이 많으므로 이들을 위해 고령 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이 필요
  - 강화군, 옹진군의 재가 장애인은 수는 적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의료시설 방문이 빈번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점도 고려
- 군·구별로 장애인복지 세부시설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함.
  - 장애인복지 시설이 적은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장애인 시설 증축이 필요

## 제6절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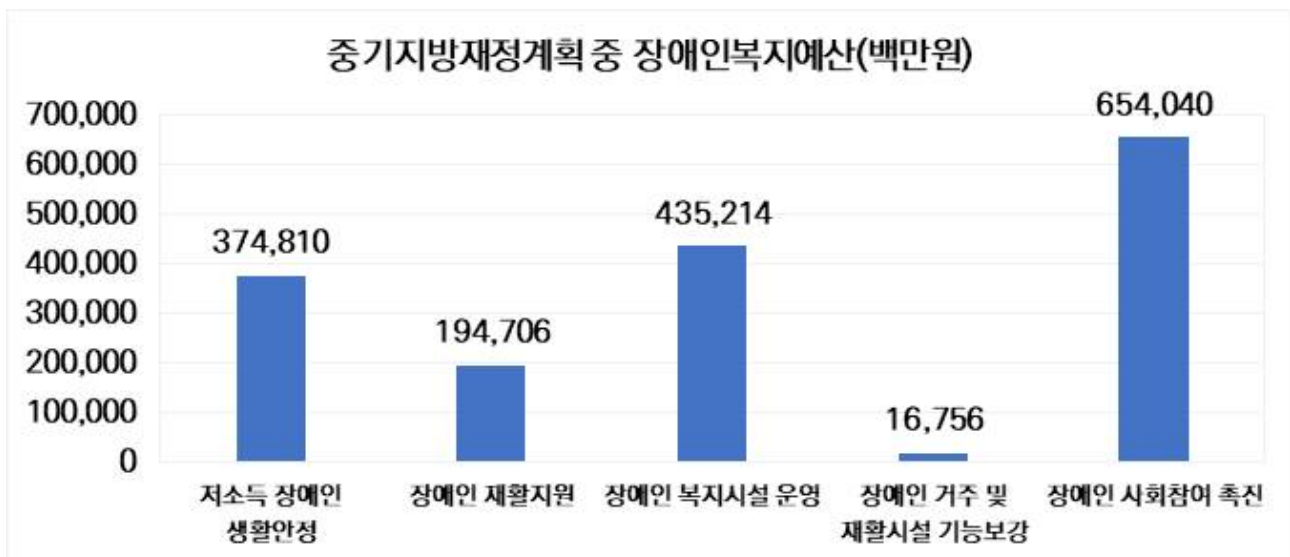
### 1. 단위 사업별 예산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 부문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어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편성됨.
- 단위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등 5가지로 구분됨.
-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5년간 5가지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 인천광역시에서 집중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등의 분야가 다음으로 많은 사업비를 차지함.

[표 2-17]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합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675,526	18	1,675,508	313,021	324,326	334,939	345,938	357,28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374,810	0	374,810	71,418	73,211	74,937	76,711	78,533
장애인 재활지원	194,706	18	194,688	36,715	37,752	38,884	40,059	41,278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35,214	0	435,214	78,501	84,010	87,690	90,893	94,119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16,756	0	16,756	4,765	2,976	2,990	3,005	3,021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654,040	0	654,040	121,622	126,377	130,438	135,270	140,333



[그림 2-14] 인천시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은 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순으로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에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의료에 자원 배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됨.
  - 사례관리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

[표 2-18]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연금	계	284,171	0	284,171	54,606	55,698	56,812	57,948	59,107
	국고보조금	234,023	0	234,023	44,969	45,869	46,786	47,722	48,676
	시도비	50,148	0	50,148	9,636	9,829	10,026	10,226	10,431
	(민자 등)	50,148	0	50,148	9,636	9,829	10,026	10,226	10,431
장애수당 (기초)	계	37,528	0	37,528	6,860	7,168	7,491	7,828	8,180
	국고보조금	28,868	0	28,868	5,277	5,514	5,762	6,022	6,293
	시도비	8,660	0	8,660	1,583	1,654	1,729	1,806	1,888
	(민자 등)	3,712	0	3,712	678	709	741	774	809
장애수당 (차상위 등)	계	25,330	0	25,330	4,630	4,838	5,056	5,284	5,521
	국고보조금	19,484	0	19,484	3,562	3,722	3,889	4,064	4,247
	시도비	5,845	0	5,845	1,068	1,117	1,167	1,219	1,274
	(민자 등)	2,505	0	2,505	458	479	500	523	546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계	15,095	0	15,095	2,947	2,983	3,018	3,055	3,091
	시도비	15,095	0	15,095	2,947	2,983	3,018	3,055	3,091
장애인의료비 지원	계	10,269	0	10,269	1,993	2,023	2,053	2,084	2,115
	국고보조금	8,223	0	8,223	1,596	1,620	1,644	1,669	1,694
	시도비	2,045	0	2,045	397	403	409	415	421
	(민자 등)	11	0	11	2	2	2	2	2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계	302	0	302	59	60	60	61	62
	국고보조금	201	0	201	39	40	40	41	41
	시도비	101	0	101	20	20	20	20	21
	(민자 등)	101	0	101	20	20	20	20	2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	502	0	502	99	100	100	101	102
	국고보조금	446	0	446	88	89	89	90	91
	시도비	56	0	56	11	11	11	11	11
	(민자 등)	56	0	56	11	11	11	11	11
사례관리	계	1,148	0	1,148	224	227	230	232	235
	국고보조금	563	0	563	110	111	113	114	115
	시도비	586	0	586	114	116	117	119	120
지역보조기기 센터 운영 (사례관리 사업 기능보강)	계	465	0	465	0	114	116	117	118
	국고보조금	233	0	233	0	57	58	59	59
	시도비	233	0	233	0	57	58	59	59



### 3. 장애인 재활지원

- 장애인 재활지원은 32개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일자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등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 일부 사업은 2022년까지만 편성되어 있거나 기 투자금을 활용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다양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

[표 2-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재활지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계	2,789	0	2,789	544	551	558	564	571
	시도비	2,789	0	2,789	544	551	558	564	57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계	13,873	0	13,873	2,693	2,733	2,774	2,816	2,858
	국고보조금	9,711	0	9,711	1,885	1,913	1,942	1,971	2,000
	시도비	4,162	0	4,162	808	820	832	845	857
언어발달지원	계	94	0	94	19	19	19	19	19
	국고보조금	78	0	78	16	16	16	16	16
	시도비	17	0	17	3	3	3	3	3
	(민자 등)	17	0	17	3	3	3	3	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계	6,265	0	6,265	1,134	1,190	1,250	1,312	1,378
	국고보조금	5,012	0	5,012	907	952	1,000	1,050	1,102
	시도비	1,253	0	1,253	227	238	250	262	27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계	506	0	506	96	99	101	104	106
	국고보조금	405	0	405	77	79	81	83	85
	시도비	101	0	101	19	20	20	21	2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계	173	0	173	33	34	35	35	36
	국고보조금	121	0	121	23	24	24	25	25
	시도비	52	0	52	10	10	10	11	11
	(민자 등)	52	0	52	10	10	10	11	1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계	268	0	268	51	52	54	55	56
	국고보조금	134	0	134	26	26	27	27	28
	시도비	134	0	134	26	26	27	27	2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계	564	0	564	113	113	113	113	113
	국고보조금	395	0	395	79	79	79	79	79
	시도비	169	0	169	34	34	34	34	34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계	9,150	0	9,150	1,656	1,739	1,826	1,917	2,013
	국고보조금	6,100	0	6,100	1,104	1,159	1,217	1,278	1,342
	시도비	3,050	0	3,050	552	580	609	639	671
	(민자 등)	3,050	0	3,050	552	580	609	639	67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계	49,785	0	49,785	9,471	9,708	9,951	10,200	10,455
	국고보조금	40,999	0	40,999	7,800	7,995	8,195	8,400	8,610
	시도비	8,786	0	8,786	1,671	1,713	1,756	1,800	1,845
	(민자 등)	8,786	0	8,786	1,671	1,713	1,756	1,800	1,845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계	17,386	0	17,386	3,308	3,390	3,475	3,562	3,651
	국고보조금	14,318	0	14,318	2,724	2,792	2,862	2,933	3,007
	시도비	3,068	0	3,068	584	598	613	629	644
	(민자 등)	3,068	0	3,068	584	598	613	629	644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계	2,786	0	2,786	530	543	557	571	585
	국고보조금	1,393	0	1,393	265	272	278	285	293
	시도비	1,393	0	1,393	265	272	278	285	293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계	1,076	0	1,076	205	210	215	221	226
	국고보조금	538	0	538	102	105	108	110	113
	시도비	538	0	538	102	105	108	110	11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계	349	0	349	70	70	70	70	70
	국고보조금	287	0	287	57	57	57	57	57
	시도비	62	0	62	12	12	12	12	12
	(민자 등)	62	0	62	12	12	12	12	12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계	18	18	0	0	0	0	0	0
	시도비	18	18	0	0	0	0	0	0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시도비	1,000	0	1,000	200	200	200	200	2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계	6,433	0	6,433	1,179	1,219	1,280	1,344	1,411
	국고보조금	4,262	0	4,262	786	806	847	889	934
	시도비	2,172	0	2,172	393	413	433	455	478
	(민자 등)	2,172	0	2,172	393	413	433	455	478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계	2,220	0	2,220	300	480	480	480	480
	시도비	2,220	0	2,220	300	480	480	480	480
	(민자 등)	2,220	0	2,220	300	480	480	480	480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계	2,300	0	2,300	447	456	461	465	470
	시도비	2,300	0	2,300	447	456	461	465	47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계	35,458	0	35,458	6,417	6,738	7,075	7,429	7,800
	국고보조금	23,639	0	23,639	4,278	4,492	4,717	4,952	5,200
	시도비	11,819	0	11,819	2,139	2,246	2,358	2,476	2,600
	(민자 등)	11,819	0	11,819	2,139	2,246	2,358	2,476	2,600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계	9,034	0	9,034	1,635	1,717	1,803	1,893	1,987
	국고보조금	6,023	0	6,023	1,090	1,145	1,202	1,262	1,325
	시도비	3,011	0	3,011	545	572	601	631	662
	(민자 등)	3,011	0	3,011	545	572	601	631	66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	170	0	170	34	34	34	34	34
	시도비	170	0	170	34	34	34	34	34
	(민자 등)	170	0	170	34	34	34	34	3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계	1,173	0	1,173	214	235	238	241	244
	국고보조금	821	0	821	150	165	167	169	171
	시도비	351	0	351	64	71	71	72	73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운영	계	1,040	0	1,040	202	205	208	211	214
	시도비	1,040	0	1,040	202	205	208	211	214
장애인 수중재활 치료사업	계	284	0	284	55	56	57	57	58
	시도비	284	0	284	55	56	57	57	58
	(민자 등)	242	0	242	47	48	48	49	50
발달재활서비스	계	29,892	0	29,892	5,802	5,889	5,977	6,067	6,158
	국고보조금	24,617	0	24,617	4,778	4,850	4,922	4,996	5,071
	시도비	5,275	0	5,275	1,024	1,039	1,055	1,071	1,087
	(민자 등)	5,275	0	5,275	1,024	1,039	1,055	1,071	1,087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계	382	0	382	69	73	76	80	84
	시도비	382	0	382	69	73	76	80	84
	(민자 등)	382	0	382	69	73	76	80	84
장애인가정 실태조사	계	20	0	20	20	0	0	0	0
	시도비	20	0	20	20	0	0	0	0
AAC ZONE 소통마을 (참여예산)	계	3	0	3	3	0	0	0	0
	시도비	3	0	3	3	0	0	0	0
발달장애와 중증장애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참여예산)	계	113	0	113	113	0	0	0	0
	시도비	113	0	113	113	0	0	0	0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참여예산)	계	24	0	24	24	0	0	0	0
	시도비	24	0	24	24	0	0	0	0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	78	0	78	78	0	0	0	0
	시도비	78	0	78	78	0	0	0	0

####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32개의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공공시설 운영에 많은 예산이 편성됨.
- 인천광역시의 청각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예산을 증액하여 수어 통역사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음

[표 2-2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	82,002	0	82,002	15,916	16,154	16,397	16,643	16,892
	시도비	82,002	0	82,002	15,916	16,154	16,397	16,643	16,892
	(민자 등)	1,256	0	1,256	185	260	265	270	276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	7,266	0	7,266	1,413	1,433	1,453	1,473	1,494
	시도비	7,266	0	7,266	1,413	1,433	1,453	1,473	1,494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계	6,012	0	6,012	1,167	1,184	1,202	1,220	1,238
	시도비	6,012	0	6,012	1,167	1,184	1,202	1,220	1,238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노후차량교체	계	96	0	96	96	0	0	0	0
	시도비	96	0	96	96	0	0	0	0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계	2,515	0	2,515	488	495	503	510	518
	시도비	2,515	0	2,515	488	495	503	510	518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계	2,429	0	2,429	156	1,667	183	202	222
	시도비	2,429	0	2,429	156	1,667	183	202	22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계	842	0	842	164	166	168	171	173
	시도비	842	0	842	164	166	168	171	173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계	67,775	0	67,775	7,595	10,545	14,545	16,545	18,545
	시도비	67,775	0	67,775	7,595	10,545	14,545	16,545	18,545
	(민자 등)	67,775	0	67,775	7,595	10,545	14,545	16,545	18,545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계	2,020	0	2,020	402	403	404	405	406
	국고보조금	1,414	0	1,414	282	282	283	283	284
	시도비	606	0	606	121	121	121	121	122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계	676	0	676	135	135	135	135	135
	국고보조금	473	0	473	95	95	95	95	95
	시도비	203	0	203	41	41	41	41	41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계	141	0	141	28	28	28	28	28
	국고보조금	85	0	85	17	17	17	17	17
	시도비	56	0	56	11	11	11	11	1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	157,266	0	157,266	30,524	30,981	31,446	31,918	32,397
	국고보조금	106,361	0	106,361	20,644	20,953	21,268	21,587	21,910
	시도비	50,905	0	50,905	9,880	10,028	10,179	10,331	10,486
장애인거주시설 오페수 관리비 지원	계	76	0	76	15	15	15	15	15
	시도비	76	0	76	15	15	15	15	15
	(민자 등)	76	0	76	15	15	15	15	15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	500	0	500	100	100	100	100	100
	시도비	500	0	500	100	100	100	100	100
	(민자 등)	500	0	500	100	100	100	100	100
개인운영 장애인거주 신고시설 운영 지원	계	837	0	837	167	167	167	168	168
	시도비	837	0	837	167	167	167	168	168
	(민자 등)	837	0	837	167	167	167	168	168
미추홀 푸르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	2,039	0	2,039	388	398	408	418	428
	시도비	2,039	0	2,039	388	398	408	418	428
	(민자 등)	2,039	0	2,039	388	398	408	418	428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계	300	0	300	60	60	60	60	60
	시도비	300	0	300	60	60	60	60	60
	(민자 등)	300	0	300	60	60	60	60	6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계	333	0	333	67	67	67	67	67
	시도비	333	0	333	67	67	67	67	6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접수 및 종합검진비 지원	계	899	0	899	180	180	180	180	180
	시도비	899	0	899	180	180	180	180	180
경인의료 재활센터병원 운영	계	10,151	0	10,151	1,990	2,010	2,030	2,050	2,071
	시도비	10,151	0	10,151	1,990	2,010	2,030	2,050	2,071
인천재활의원 운영	계	4,054	0	4,054	787	799	811	823	835
	시도비	4,054	0	4,054	787	799	811	823	835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운영	계	41	0	41	8	8	8	8	8
	시도비	41	0	41	8	8	8	8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계	39,394	0	39,394	7,420	7,643	7,872	8,108	8,351
	시도비	39,394	0	39,394	7,420	7,643	7,872	8,108	8,351
	(민자 등)	34,042	0	34,042	6,412	6,604	6,802	7,007	7,217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	계	218	0	218	44	44	44	44	44
	시도비	218	0	218	44	44	44	44	44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계	719	0	719	140	142	144	146	148
	기금보조금	576	0	576	112	113	115	117	119
	시도비	144	0	144	28	28	29	29	30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계	1,357	0	1,357	263	267	271	275	280
	국고보조금	440	0	440	85	87	88	89	91
	시도비	918	0	918	178	181	183	186	189
장애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계	196	0	196	37	38	39	40	41
	시도비	196	0	196	37	38	39	40	4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계	1,257	0	1,257	251	251	251	251	251
	국고보조금	345	0	345	69	69	69	69	69
	시도비	912	0	912	182	182	182	182	182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계	5,291	0	5,291	1,027	1,042	1,058	1,074	1,090
	시도비	5,291	0	5,291	1,027	1,042	1,058	1,074	1,090
	(민자 등)	3,382	0	3,382	656	666	676	686	69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계	27,378	0	27,378	5,314	5,393	5,474	5,556	5,640
	시도비	27,378	0	27,378	5,314	5,393	5,474	5,556	5,640
	(민자 등)	24,594	0	24,594	4,773	4,845	4,918	4,991	5,06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계	4,151	0	4,151	806	818	830	842	855
	시도비	4,151	0	4,151	806	818	830	842	855
	(민자 등)	4,013	0	4,013	779	790	802	814	82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	6,982	0	6,982	1,355	1,375	1,396	1,417	1,438
	시도비	6,982	0	6,982	1,355	1,375	1,396	1,417	1,438
	(민자 등)	6,802	0	6,802	1,320	1,340	1,360	1,381	1,401

## 5.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5개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필요한 예산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많은 예산이 편성됨.

[표 2-2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계	4,764	0	4,764	925	939	953	967	981
	국고보조금	2,382	0	2,382	462	469	476	483	491
	시도비	2,382	0	2,382	462	469	476	483	49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계	10,182	0	10,182	2,352	1,958	1,958	1,958	1,958
	국고보조금	4,758	0	4,758	843	979	979	979	979
	시도비	5,424	0	5,424	1,509	979	979	979	979
명품관(연금매점) 건물 유지·보수	계	49	0	49	10	10	10	10	10
	시도비	49	0	49	10	10	10	10	10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	계	351	0	351	69	70	70	71	72
	국고보조금	105	0	105	21	21	21	21	22
	시도비	246	0	246	48	49	49	50	5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계	1,410	0	1,410	1,410	0	0	0	0
	시도비	1,410	0	1,410	1,410	0	0	0	0
	(민자 등)	541	0	541	541	0	0	0	0

## 6.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32개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함.
- 탈시설 및 자립을 돕는 사업이 많고, 활동지원급여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지만,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사업에도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표 2-22]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계	615,472	0	615,472	113,964	118,964	122,790	127,456	132,299
	국고보조금	506,742	0	506,742	93,853	97,853	101,121	104,964	108,952
	시도비	108,730	0	108,730	20,111	21,111	21,669	22,492	23,347
	(민자 등)	108,730	0	108,730	20,111	21,111	21,669	22,492	23,347
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지원(보조)	계	3,688	0	3,688	738	738	738	738	738
	국고보조금	1,585	0	1,585	317	317	317	317	317
	시도비	2,102	0	2,102	420	420	420	420	420
	(민자 등)	2,012	0	2,012	402	402	402	402	402
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지원(자체)	계	3,474	0	3,474	695	695	695	695	695
	시도비	3,474	0	3,474	695	695	695	695	695
	(민자 등)	3,366	0	3,366	673	673	673	673	673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사업 운영	계	133	0	133	32	33	33	34	0
	시도비	133	0	133	32	33	33	34	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계	508	0	508	108	100	100	100	100
	시도비	508	0	508	108	100	100	100	10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	1,138	0	1,138	228	228	228	228	228
	시도비	1,138	0	1,138	228	228	228	228	228
	(민자 등)	1,111	0	1,111	222	222	222	222	222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계	367	0	367	89	50	89	50	89
	시도비	367	0	367	89	50	89	50	89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계	90	0	90	18	18	18	18	18
	시도비	90	0	90	18	18	18	18	18
	(민자 등)	90	0	90	18	18	18	18	18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	200	0	200	40	40	40	40	40
	시도비	200	0	200	40	40	40	40	40
	(민자 등)	200	0	200	40	40	40	40	40
시비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바우처시스템 운영	계	165	0	165	31	32	33	34	35
	시도비	165	0	165	31	32	33	34	35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계	1,851	0	1,851	359	365	370	376	381
	국고보조금	532	0	532	103	105	106	108	110
	시도비	1,319	0	1,319	256	260	264	268	272
활동보조 가산급여	계	3,593	0	3,593	638	679	718	758	798
	국고보조금	2,825	0	2,825	526	546	565	585	605
	시도비	767	0	767	113	134	154	174	194
	(민자 등)	767	0	767	113	134	154	174	194
탈시설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계	1,197	0	1,197	239	239	239	239	239
	시도비	1,197	0	1,197	239	239	239	239	239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계	122	0	122	24	24	24	24	24
	시도비	122	0	122	24	24	24	24	24
민간건축물 BF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계	100	0	100	20	20	20	20	20
	시도비	100	0	100	20	20	20	20	20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계	768	0	768	139	146	153	161	169
	기금보조금	387	0	387	70	74	77	81	85
	시도비	381	0	381	69	72	76	80	84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지원사업	계	1,669	0	1,669	324	329	334	339	344
	시도비	1,669	0	1,669	324	329	334	339	344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지원	계	550	0	550	110	110	110	110	110
	시도비	550	0	550	110	110	110	110	110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계	307	0	307	60	61	61	62	63
	시도비	307	0	307	60	61	61	62	63
	(민자 등)	307	0	307	60	61	61	62	63

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천장애인 인권영화제	계	100	0	100	20	20	20	20	20
	시도비	100	0	100	20	20	20	20	20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	2,379	0	2,379	476	476	476	476	476
	시도비	2,379	0	2,379	476	476	476	476	476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계	2,659	0	2,659	516	524	532	540	548
	시도비	2,659	0	2,659	516	524	532	540	548
	(민자 등)	2,553	0	2,553	496	503	511	518	526
장애인편의시설설 치 시민축진단 운영	계	346	0	346	67	68	69	70	71
	시도비	346	0	346	67	68	69	70	71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계	2,665	0	2,665	517	525	533	541	549
	시도비	2,665	0	2,665	517	525	533	541	549
	(민자 등)	1,376	0	1,376	267	271	275	279	283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계	1,803	0	1,803	326	343	360	378	397
	시도비	1,803	0	1,803	326	343	360	378	397
	(민자 등)	1,243	0	1,243	225	236	248	260	273
장애인단체 활성화	계	7,905	0	7,905	1,375	1,471	1,574	1,684	1,802
	시도비	7,905	0	7,905	1,375	1,471	1,574	1,684	1,802
장애인복지 홍보사업	계	255	0	255	51	51	51	51	51
	시도비	255	0	255	51	51	51	51	51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계	25	0	25	25	0	0	0	0
	시도비	25	0	25	25	0	0	0	0
장애인자립 유사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지원	계	72	0	72	14	14	14	14	14
	시도비	72	0	72	14	14	14	14	1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계	75	0	75	15	15	15	15	15
	시도비	75	0	75	15	15	15	15	15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계	300	0	300	300	0	0	0	0
	시도비	300	0	300	300	0	0	0	0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	63	0	63	63	0	0	0	0
	시도비	63	0	63	63	0	0	0	0

## 제7절 관련 법률

### 1.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 장애인 인권 관련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크게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로 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률은 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차별금지, 편의시설 및 편의 제공, 권리규제, 학대 행위 및 학대 신고,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제공 및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표 2-23]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편의 제공과 권리규제 등을 규정하는 장애 인권정책의 기본	보건복지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	
3. 장애인복지법	•장애 학대 행위, 학대 신고 의무, 장애인 인권보호기관, 쉼터 등 학대 대응 관련 규정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대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보건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7. 국가인권위원회법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전담 국가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동 수단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

-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사례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 2021년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 차원 총괄법으로 개편

### 3.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천시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48개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군·구 모두가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4개 지역을 제외한 본청 포함 7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본청에서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광주, 대전 3곳이며,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조례를 미제정한 자치구가 상당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조례 제정 수준이 미흡한 것은 아니나 전체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미제정된 지역의 조례 제정이 시급함.

[표 2-24]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구분	제정	미제정
1. 서울특별시(25개)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16개)	• 본청,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종로구, 동작구, 구로구, 성동구, 강남구, 서대문구(9개, 본청 제외)
2. 부산광역시(16개)	• 강서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9개)	• 본청, 기장군, 금정구, 수영구, 서구, 남구, 북구, 부산진구(7개, 본청 제외)
3. 대구광역시(8개)	•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8개)	• 본청
4. 인천광역시(10개)	• 본청,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6개)	• 강화군, 옹진군, 동구, 남동구,
5. 광주광역시(6개)	• 본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6개)	
6. 대전광역시(5개)	• 본청,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5개)	
7. 울산광역시(5개)	•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4개)	• 본청, 동구(1개, 본청 제외)

주 :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본청 중심 조례(인천, 광주, 대전)를 비교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미흡한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실태조사 조항 중 장애 유형 및 성별 조사내용 추가
-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내용 추가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추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명기 및 사업비 확보 내용 추가
-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등 포상내용 추가

[표 2-25] 광역자치단체(본청)별 조례 비교

구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공통조항	목적, 정의, 책무, 정책개발,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실태조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업무의 위탁, 회의, 간사 및 서기, 관계 기관 협조, 수당, 시행규칙 제정		
미흡조항	실태조사 조항에 추가 필요	실태조사 내용에 장애유형 및 성별 조사 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신 장애인인권센터로 명칭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추가 필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운영	
	수당만 명기되어 있어 여비 지급 조항 추가 필요	수당과 여비 지급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확보 내용 추가 필요	사업예산확보 명기	지원사업 명기
	포상 내용 추가 필요	기관, 단체, 개인 포상	

○ 아울러 인천광역시 본청의 조례와 군·구의 조례를 비교한 결과, 군·구의 조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정의, 보고, 계획, 교육 및 홍보, 위원회 구성, 사업위탁 여부, 예산 확보, 관계 기관의 협조 및 포상 관련 조항에 차이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 조례의 정의 중 인권보장 및 학대 내용 추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조례에 대한 제반 내용을 본청 및 군·구 의회보고 내용 추가
-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세부 내용 추가
- 서구 조례에 교육 및 홍보내용 추가
- 서구의 장애인 관련 위원회 내용 추가
- 장애인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 내용 추가
- 조례에 관계기관의 협조 의뢰 및 수당 내용 추가
- 필요시 포상이 가능토록 내용 추가

[표 2-26] 인천광역시 조례 비교

구 분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정의	장애인 학대내용 없음.	인권보장 및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 없음
보고	구청장 책무 중 의회에 대한 보고내용 없음	구청장 책무 중 의회에 대한 보고내용 없음	구청장 책무 중 의회보고에 대한 내용 없음			구청장 책무 중 의회에 대한 보고내용 없음
계획		정책개발과 실태조사 내용 없음.	정책개발 없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절차, 시행계획 내용 없음
교육 홍보						교육 및 홍보 내용 없음
위원회						위원회 설치내용 없음
위탁	교육위탁만 가능(사업위탁 없음)	교육위탁만 가능(사업위탁 없음)	교육위탁만 가능(사업위탁 없음)	교육위탁만 가능(사업위탁 없음)	교육만 가능(사업위탁 없음)	
예산	예산확보내용 보칙에 있음.					
협조 및 수당		관계기관 협조 및 수당 지급 내용 없음	관계기관 협조 및 수당 지급 내용 없음	관계기관 협조 및 수당 지급 내용 없음		관계기관 협조 내용 없음
비고	포상 규정 있음.		포상 규정 있음.			

#### 4.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는 총 28개이며, 세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22개, 인천광역시교육청 6개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임.
  - 인천광역시에서 공표한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공공시설 편의 지원, 권리보장, 생활 지원, 고용 촉진,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 지원,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장애인연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재활용품 수집 장애인 지원 등이 시행 중임.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공표한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및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등이 시행 중임.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이란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인천광역시의 조례 중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장애인 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개정 또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가 미흡한데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내용 미흡
  - 장애인의 근거리 이동이 아닌 시내권 이동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미흡

[표 2-27]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공표 일자	제정·개정 구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22. 2. 2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2019. 9. 23.	제정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4.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9. 6.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21. 12. 30.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	2021. 9.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7. 1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20. 10. 7.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20. 10. 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9.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0.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21. 4. 9.	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20. 10. 7.	제정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17.	제정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5. 11. 16.	전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20. 1. 2.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2021. 2. 22.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2020. 1. 2.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20. 1.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2021. 2. 22.	타법개정



## 제3장 사례 및 관련 계획

---

제1절 상위계획 및 타 지역 장애인 인권정책 사례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제3절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제 3 장 사례 및 관련 계획

### 제1절 상위계획 및 타 지역 장애인 인권정책 사례

#### 1.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8 ~ 2022)



[그림 3-1] 보건복지부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1) 추진 배경 및 방향

### ○ 추진 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 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96.12)
  - .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 정립 필요
  - .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 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계획 수립 추진 필요

### ○ 추진 방향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할 수 있도록 추진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비장애인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
- 장애인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
  - .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계의 제안 과제 적극 수용
  - . 주요 장애인 정책 분야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2) 분야별 추진전략

-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추진전략 5개, 중점 과제 22개, 세부 과제 70개로 계획함.
- 전략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시설 거주 및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보호와 인프라 강화, 다양해진 복지서비스 충족, 어린이의 재활치료와 늘어나는 재활 수요를 위한 지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5개의 중점 과제를 계획함.
    - .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
    - . 활동 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 재활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 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략 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영유아 시기부터 장애인 특수교육 강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특수교사 확보 및 교육 내실화, 청소년의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교육 및 지원, 문화·예술·체육의 향유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5개의 중점 과제를 계획함.
    - .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 강화
    - .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 . 장애인체육 향유 기회 보장
- 전략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 기반 강화
  - 낮은 장애인연금 및 급여 수준 개선,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고용소득 사각지대 개선, 의무 고용률 상승 및 직장 내 처우개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4개의 중점 과제를 계획함.
    - .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 .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 .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 전략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리보장,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책 및 복지서비스 및 지원체계 강화, 여성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4개 중점 과제를 계획함.

- .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 .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전략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활성화

-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환경 및 이동권 보장, 편의 증진 및 의사소통을 위한 인프라 개선, 장애 관련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5개의 중점과 제를 계획함.

- .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 편의 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 .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 (3) 추진체계

○ (성과목표) 정책성과 평가할 때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결과(Outcome) 측면에서 평가

- 5대 정책 분야별로 장애인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지표(생활 만족도, 빈곤율, 고용률 등)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
- 과제별 목표, 지표 등 성과목표 변경 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 (평가체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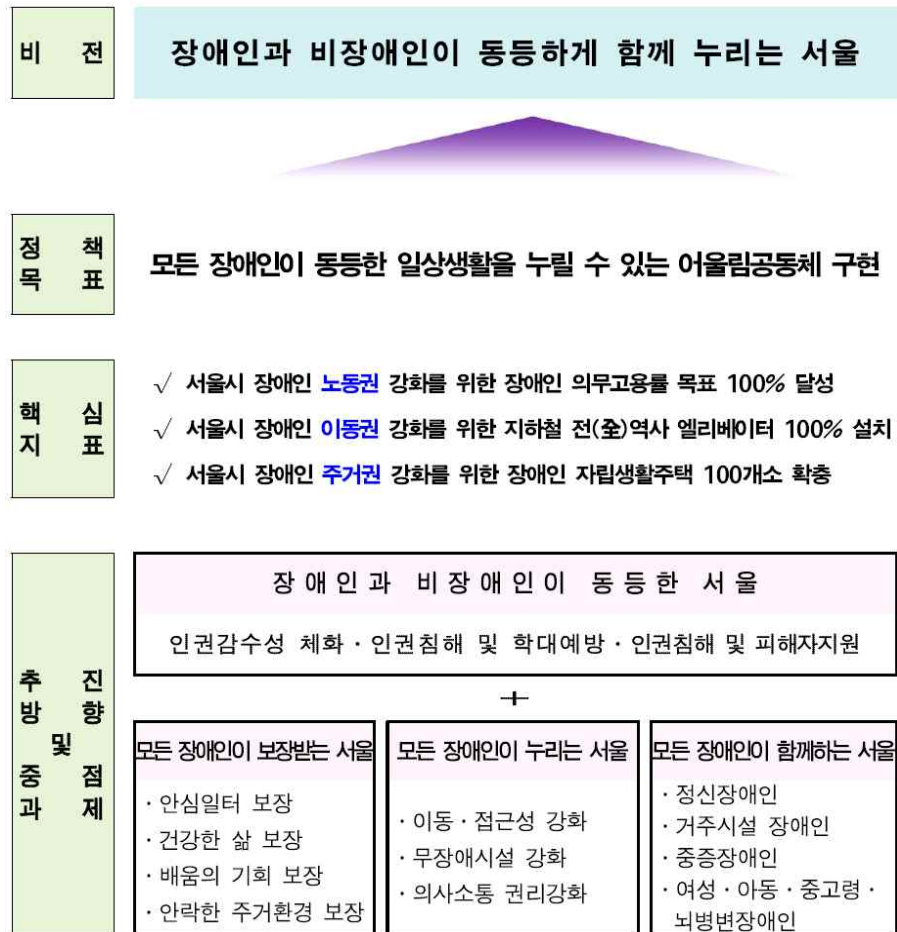
- 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종합계획 실행 정도를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해당 부처로 피드백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
- 종합계획 추진 2차 연도 종료 시점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획 보완

○ (소통·환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기적 환류 및 성과관리 체계화

- 관계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로 조정위원회 산하 2개의 전문위원회\*구성(주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반기별 개최(\* 1분과 복지·건강·권익 분야 2개 분과 교육·문화·경제·사회참여 분야)

○ (통계개발) 정책 수립 및 평가 지표의 발굴·개선을 위해 장애인 관련 부처 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장애인 분야 통계 생산 및 보완 추진

## 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 (2019~2023)



[그림 3-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

## ○ 수립 방향

- 시설, 기관 중심 서비스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 자립·독립생활 강화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인권도 시 구현
- 정신 장애인, 중·고령 장애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 과제 선정

○ 비전 및 정책목표: 차별과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장애인 인권의 주요 이슈인 일상생활 영위를 기반으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동체 구현하는 것으로 제시

○ 핵심 지표 :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인권 수준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노동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주거권 강화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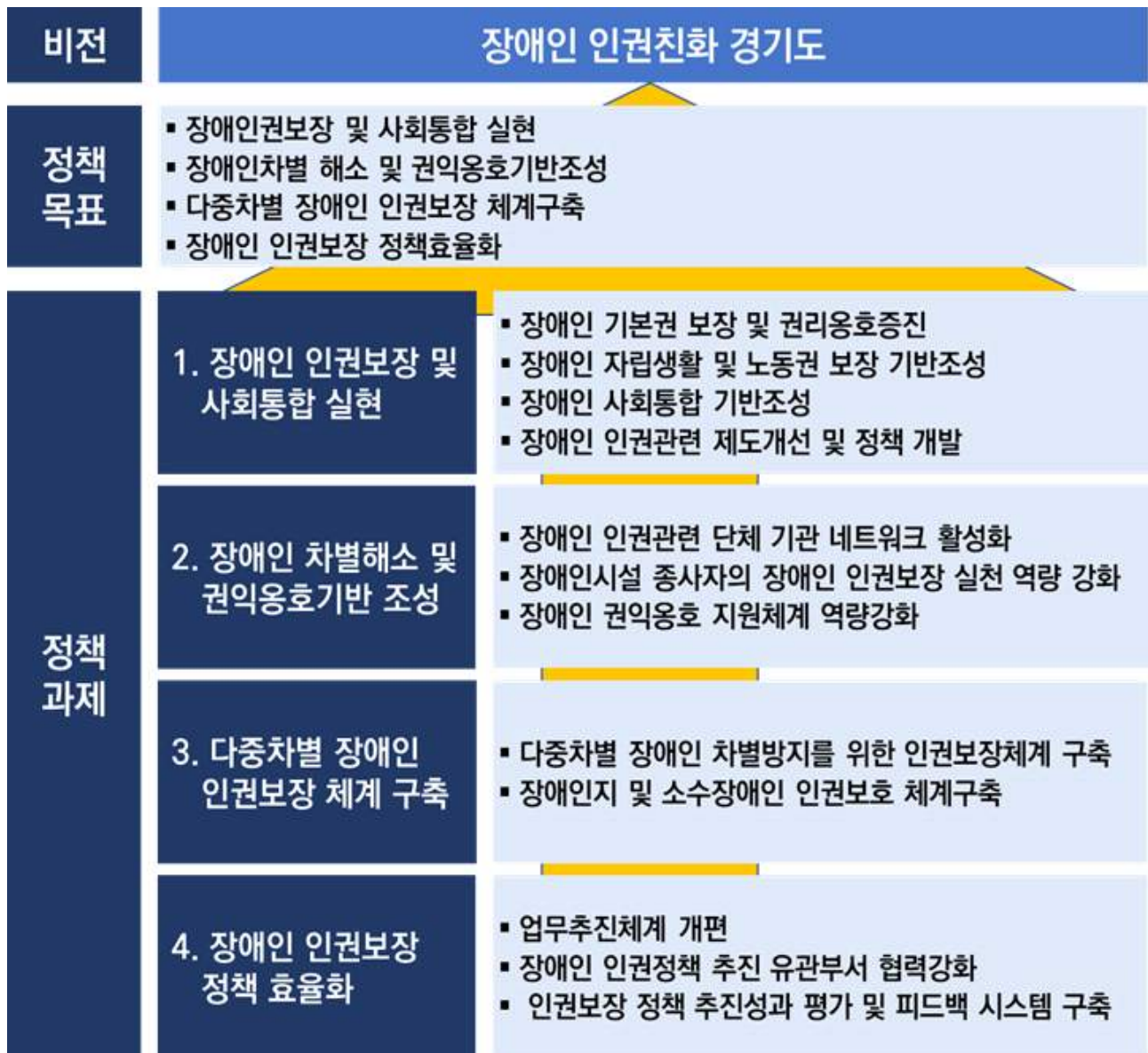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인권증진 계획의 주요 사업은 14개의 중점사업과 40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 제2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구 분	중점 과제	세부사업	비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 인권 감수성 체화	- 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인권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	
	· 인권침해 학대 예방	-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지원사업 - 학대 예방 교육사업 - 장애인 인권 옹호 시민 활동가 육성 사업	
	· 인권침해 및 피해자 지원	-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 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 안심 일터 보장	- 장애인의무고용률 강화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 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 건강한 삶 보장	-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어울림 플라자 건립	
	· 배움의 기회 보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 확대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 이동·접근성 강화	- 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 무장애 시설 강화	- 다중이용시설 편의 지원 강화	
	· 의사소통 권리 강화	- 의사소통 지원 -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지원사업	
모든 장애인이 함께 하는 서울	· 정신 장애인	- 정신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사업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거주시설 장애인	-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확충	
	· 중증장애인	-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 - 서울형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추가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 장애인	-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장애 여성 홈헬퍼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 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 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그림 3-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비전 : 장애인 인권친화 경기도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 정책목표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사회통합 실현
  - .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 및 인권보장 정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에서 자립생활 및 노동권을 보장하며 근로 현장과 도민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체계화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권익옹호기반 조성
  - . 장애인인권센터(2개소) 운영 지원, 관리 감독, 권익 옹호, 운영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필수사업, 교육, 홍보사업 등 권익지원팀 업무를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2명 이상 확보, 산하 인권기관 평가 정례화, 인권지킴이단 관리 등 업무추진체계를 개편
- 다중 차별장애인 인권보장 체계구축
  - . 여성장애인, 노인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 다중 차별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대책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인권보장체계의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와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업무의 효율화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효율화
  - . 제2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FGI 결과와 연계하여 장애 유형별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 종사자 인권교육을 확대, 장애 유형별 인권 지침 및 인권 침해 판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메뉴얼을 보급·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운영 지원 및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의 환경을 조성

○ 정책과제

- 추진근거
  - .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앙정부 장애인 인권정책, 복지부령,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관련 법, 정책,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6년도 개정).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 중점 과제
  -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사회통합 실현
  -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권익옹호기반 조성
  - . 다중 차별장애인 인권보장 체계구축
  - .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효율화

##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2019 ~ 2023)



[그림 3-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비전 : 인권기반의 장애친화도시 대전
  - 대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
- 핵심 가치
  - 행복 :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및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주관적·객관적 삶의 질 향상
  - 평등 :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
  - 기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완전한 접근성 보장
  - 자립 :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
  - 장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도시 조성, 인권 실현을 통해 자유, 평등, 인간 존중이 보장하고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 성장, 차별 없는 사회,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행복한 지역사회를 목표
  - 이를 위해 16개 추진전략, 46개의 핵심과제를 6개 추진 분야로 진행

## ○ 추진 분야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추진 분야는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 내용 중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추진 분야를 설정하기보다는 권익 옹호, 근로·기본 소득, 건강, 교육문화, 사회참여 및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6개 분야로 구별하여 세부사업을 제시함.
-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익 옹호 분야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이며, 근로·기본 소득 분야는 일자리, 고용지원 및 장애에 대한 추가지원, 건강 분야는 건강 관련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교육문화 분야는 평생교육,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사회참여 분야는 정보 접근성,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등, 거주 시설의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는 거주시설 환경 구축 및 자립시설 지원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추진 분야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권익 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 기반 인프라 구축</li> <li>·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li> </ul>	
근로·기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일자리 창출</li> <li>·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li> <li>·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li> <li>· 건강권 보장 인프라 확충</li> </ul>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li> <li>·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향유 기회 확대</li> <li>·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li> </ul>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li> <li>· 장애인 이동권 보장</li> <li>·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강화</li> <li>· 일상생활 지원 강화</li> </ul>	
거주 시설장애인의 권익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기반 거주시설 환경 구축</li> <li>· 자립생활 지원 강화</li> </ul>	

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019 ~ 2023)



[그림 3-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핵심 분야 및 핵심 전략 선정

- 전라북도 관련 계획, 차별 및 인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다음 가장 중복도가 높은 단어를 핵심 분야로 선정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핵심 전략을 도출하였음.
- 첫째, 기본권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
- 둘째,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신고체계, 관련 기관 운영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층들의 노력
- 셋째, 다중적 차별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중요성을 부각

○ 비전 :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장애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담고,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설정

○ 정책목표 및 과제

-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 기본권보장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 과제로서 이동권 보장 확대, 취업 및 근로환경 개선, 편의 증진 및 문화 여가권 보장, 건강권 보장, 교육권 보장, 정보 접근성 강화,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을 계획함.
-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 신고체계, 기관 운영개선,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목표로 설정하여 세부 과제로 실효적 상담·조사·권리 구제 체계 확립, 도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확대,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구축을 계획함.
- 다중적 차별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 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중요성 부각하기 위해 다중적 차별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세부 과제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아동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정신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계획함.

##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2022 ~ 2026)

비 전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인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안심하는 지역사회 주거 보장</li> <li>▪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과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li> <li>▪ 장애인 건강보장 체계 강화</li> <li>▪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보장 체계 구축</li> <li>▪ 장애인 친화도시 기반 마련</li> <li>▪ 장애인 인권보장과 인식개선 연계 강화</li> <li>▪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체계 구축</li> </ul>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거 : 중점 2, 세부 12</li> <li>▪ 돌봄/자립 : 중점 5, 세부 32</li> <li>▪ 건 강 : 중점 2, 세부 12</li> <li>▪ 소득/일자리 : 중점 3, 세부 17</li> <li>▪ 접 근 성 : 중점 3, 세부 18</li> <li>▪ 권익옹호 등 인식개선 : 중점 2, 세부 6</li> <li>▪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 중점 2, 세부 20</li> </ul>

[그림 3-6]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2022 ~ 2026)

## ○ 비전 :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 도시 인천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함께 만드는 인천의 모습을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장애인친화도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 ○ 목표

- 모두가 안심하는 지역사회 주거 보장,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및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건강보장 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보장 체계구축, 장애인친화도시 기반 마련, 장애인 인권보장과 인식개선 연계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체계 구축

## ○ 중점 과제

- 모두가 안심하는 지역사회 주거 보장
  - .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제공이 목표
  - . 지역사회 중심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걱정 없는 탈시설을 위한 토대 마련 등 2개 중점 과제 제시
-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 및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
  -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이 목표
  -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제공, 장애 아동 및 가족 지원, 지역사회 중심 교육/문화/체육 서비스 제공 등 5개 중점 과제 제시

- 장애인의 건강보장 체계 강화
  - .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목표
  - . 건강증진 및 관리체계 운영, 건강증진 및 관리 지원 등 2개 중점 과제 제시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보장 체계구축
  - .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소득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장이 목표
  -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소득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보장,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3개 중점 과제 제시
- 장애인친화도시 기반 마련
  - . 장애인 친화 도시를 위한 물리적 접근권을 통해 기반 마련
  - . 정보 접근권 보장, 편의시설 지원, 이동권 보장 등 2개 중점 과제 제시
- 장애인 인권보장과 인식개선 연계 강화
  -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 인식개선이 목표
  - . 권익 옹호 및 활동 지원, 장애인 인권 문제 개선 등 2개 중점 과제 제시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체계 구축
  - .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
  - . 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등 2개 중점 과제 제시



## 2. 2022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그림 3-7]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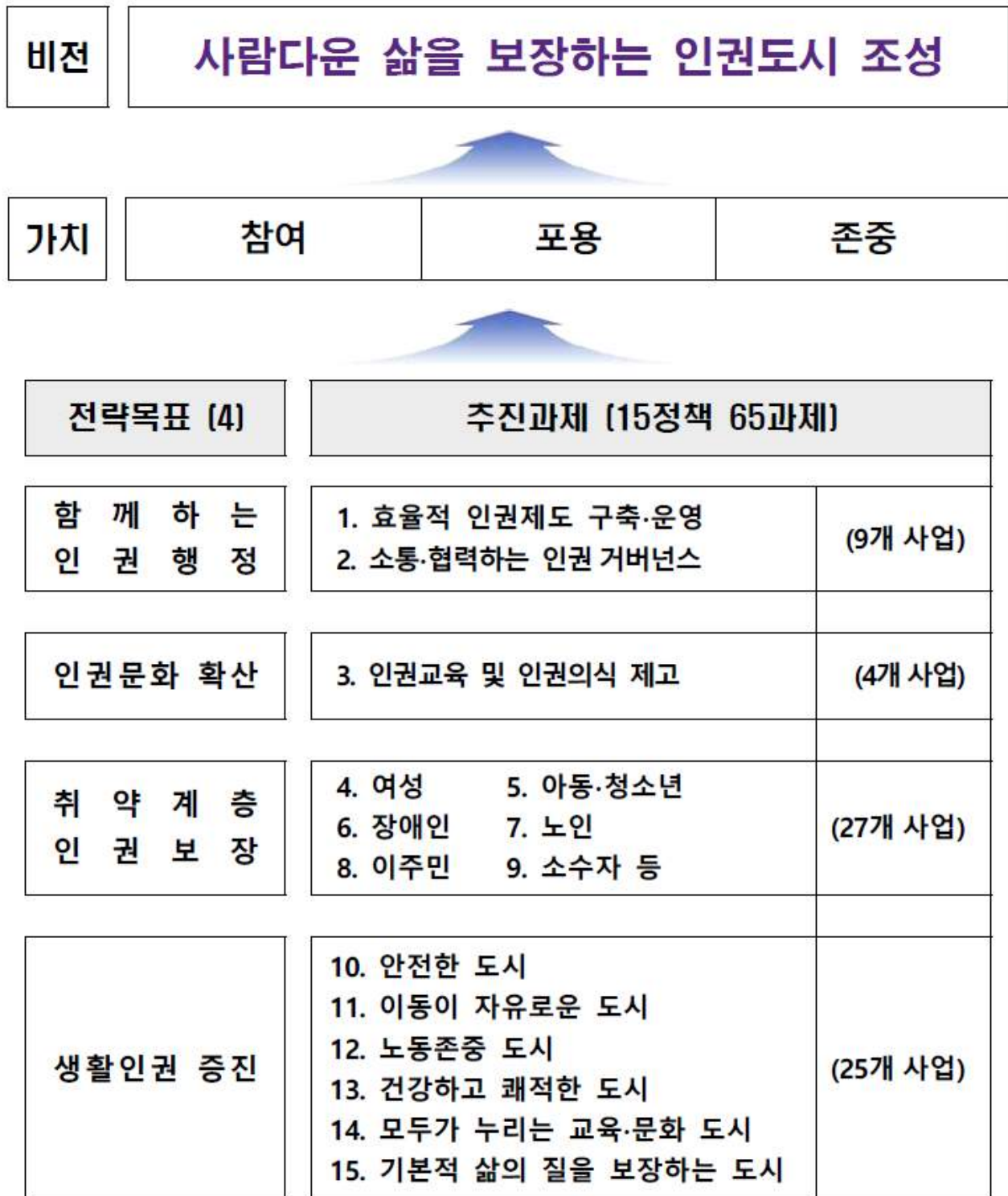
○ 정책목표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 권익증진
  - .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생활 환경조성
  - .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추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
- 수요자 중심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 가족의 돌봄 기능 강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 중점 추진과제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셔틀 운행 및 이동 지원(26대), 장애인콜택시(169대), 장애인 바우처 택시(300대), 저상버스 교체 및 증차(73대)
-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1개소),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1개 단체)

## 3.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그림 3-8]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 비전 :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 도시 조성

- 장애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을 보장해 상호 존중, 포용,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함

○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 함께하는 인권 행정

- . 인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체계,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인권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과제로 구성
- . 효율적 인권 제도 구축 운영을 통한 인권 보호 업무 전문화 및 시민 인권상담실 운영
- . 소통·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활동, 시민 소통, 포럼 및 콘퍼런스 참석 등의 활동을 진행

- 인권문화 확산

- . 인권교육 및 인권 의식 제고를 목표로 인권교육과 인식개선을 시행

- 취약계층 인권보장

- .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친화 도시 및 학대 예방,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

- 생활 인권증진

- .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자살 예방 및 피해 주민 지원, 범죄예방을 추진
- .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 및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확대를 추진
- . 노동 존중 도시를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 차별 사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과제를 시행
- .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목표로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건강 클리닉 운영, 유해환경 제거를 진행
- .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원,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 공간 확충,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지원 등을 시행
- .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를 위해 복지서비스 강화를 시행

## 제3절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 주요 내용

[표 3-3]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li> <li>-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권익, 안전,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정책계획을 세움</li> </ul>
서울특별시 제2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과제를 제시</li> <li>-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 장애인 인권보장 및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정책사업 등 인권의 동등함을 보장함</li> </ul>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li> <li>- 장애인의 기본권, 권리 옹호, 자립 생활, 사회통합 추진 및 지원체계,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li> </ul>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계획을 법률에 제시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제시</li> <li>- 권익 옹호, 근로, 소득, 건강, 교육, 문화,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li> </ul>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에 제시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li> <li>-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 경기도 및 대전광역시와 혼합한 형태로 기본권보장, 피해자 권리회복, 계층별(여성, 아동, 발달) 계획을 제시</li> </ul>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복지 중심 관점에서 분야별로 제시</li> <li>- 주거, 돌봄/자립/ 건강, 소득/일자리, 접근성, 권익 옹호, 복지서비스, 이동권 보장, 인식개선 등 장애인의 인권향상 정책이 많음</li> </ul>
2022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인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제시</li> <li>- 장애인의 소득보장, 권익증진, 자립환경 조성, 돌봄서비스 지원, 이동권 보장</li> </ul>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하여 인권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과제를 제시</li> <li>-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소수자의 생활 인권증진을 목표로 함.</li> </ul>

## 2. 시사점

-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은 분야별 비장애인과 장애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야별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점을 가질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한 사업을 제시
- 서울특별시 제2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
-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장애인 인권 친화를 비전으로 삼아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 포괄적인 추진사업을 제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제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은 장애인 친화 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체적인 복지관점의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특성별 복지시설 및 복지정책에 대한 강화가 필요
-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해 나가기 좋은 도시에 대해 제시했지만, 더욱 강화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계획이 필요
-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은 장애인 외에도 취약계층도 포함하는 정책으로 참여, 포용, 존중의 가치를 내세우는 인권도시를 목표로 인권 중심의 과제 제시
- 따라서 시사점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은 복지서비스 제공보다 장애인 인권 및 권익증진에 더 중심을 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권 또는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표 3-4]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시사점

구분	시사점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분야별 차별금지 사항과 권익 관련 사항 반영 필요
서울특별시 제2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 인권보장 분야의 사업은 반영이 필요하나, 차별금지에 대한 사업은 별도 발굴 필요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구체적인 사업제시보다는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 포괄적인 추진사업을 제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으로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나, 너무나 많은 세부 과제를 제시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관련 자료,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제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복지관점의 계획을 제시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해 나가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 제시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 장애인 역시 취약계층에 포함되기는 하나 인권 중심의 과제 제시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 필요





## 제4장 실태조사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제 4 장 실태조사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장애인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 전문가 회의,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FGI(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인천시민,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 전문가 회의 : 장애인 전문가에게 조사 및 분석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실시
- FGI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방문해 인터뷰 시행(인천시 권익옹호기관, 단체에서 생각하는 장애인 정책의 현황 및 의견을 취함).

###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 조사목적
  - 인천광역시 장애인 대상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실태 파악을 위해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중요도 및 시급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 시설의 개선방안 도출,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욕구 및 문제점,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등을 설문조사 목적으로 함.
-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QR 설문지 또는 종이 설문지를 배포하였지만, 장애인의 응답 상황은 파악이 어려움.
  - 시설장애인은 장애인 의사를 보호자가 수렴하여 설문지에 응답 표기했을 것으로 판단함.
- 표본설계
  - 분류는 크게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4개의 분류로 나눠서 설문을 진행하였고, 장애인은 5가지(지체, 청각/언어, 시각, 뇌병변, 기타)로 나누어 지역별 장애인 인구를 고려해 설문지를 배포함
  - 재가 장애인은 300부 중 303부를 회수하였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200부를 배포해 225부를 회수함.
  - . 설문지와 QR코드를 활용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안보다 많은 응답이 수집되었고 초과분에 대해 누락 없이 결과를 도출함.
  - 비장애인은 군·구별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총 300부를 배포해 298부를 회수함.
  - 장애인 전문가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은 각 군·구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00부 중 170부를 회수함.
  -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pm 3.1\%$ 임.

[표 4-1] 설문조사 표본설계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계		1,000	43	27	140	103	151	209	89	139	66	33
재가장애인	소계	300	12	11	44	31	52	55	30	50	12	3
	지체	141	6	5	22	13	25	26	14	23	6	1
	청각/언어	51	2	2	8	5	9	9	5	8	2	1
	시각	25	1	1	2	4	3	5	3	5	1	0
	뇌병변	29	1	1	4	4	5	5	3	5	1	0
	기타	54	2	2	8	5	10	10	5	9	2	1
시설거주장애인	소계	200	9	0	18	25	9	62	9	9	34	25
	지체	93	4	0	8	12	4	29	4	4	16	12
	청각/언어	31	1	0	3	4	1	10	1	1	6	4
	시각	19	1	0	2	2	1	6	1	1	3	2
	뇌병변	19	1	0	2	2	1	6	1	1	3	2
	기타	38	2	0	3	5	2	11	2	2	6	5
비장애인		300	13	10	47	28	54	55	30	48	12	3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200	9	6	31	19	36	37	20	32	8	2

[표 4-2] 설문조사 응답 결과

구분	QR용	설문지	합계	설계(안)
합계	546	450	996	1,000
재가 장애인	195	108	303	300
시설거주 장애인	122	103	225	200
비장애인	124	174	298	300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105	65	170	200

## ○ 설문 분석 방법

- 응답 설문에 대한 통계분석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요인별 특성을 분석함.
  - . 빈도분석 : 설문 문항별 단순 빈도 측정
  - . 교차분석 : 설문 문항별 일반사항(연령대, 성별 등)을 요인으로 삼아서 응답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

## (1)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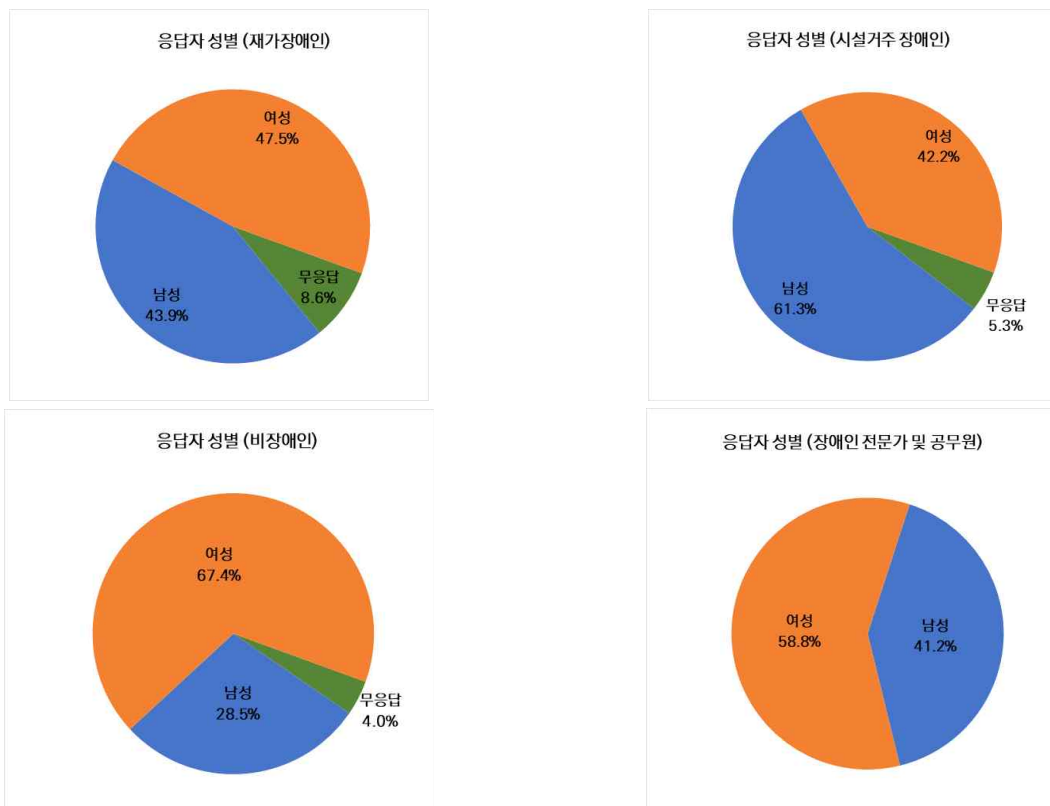
## 가) 설문 응답자 통계

## ○ 성별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성별, 연령, 학력까지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에서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답변이 더 많았음.
- 재가장애인 응답자 여성 43.9%, 남성 8.6%, 시설거주 장애인은 여성 61.3%, 남성 5.3%, 비장애인은 여성 28.5%, 남성 4.0%임.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응답자는 여성 58.8%, 남성 41.2%임.

[표 4-3] 응답자 성별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남성	26	8.6	138	61.3	85	28.5	70	41.2
여성	133	43.9	95	42.2	201	67.4	100	58.8
무응답	144	47.5	12	5.3	12	4.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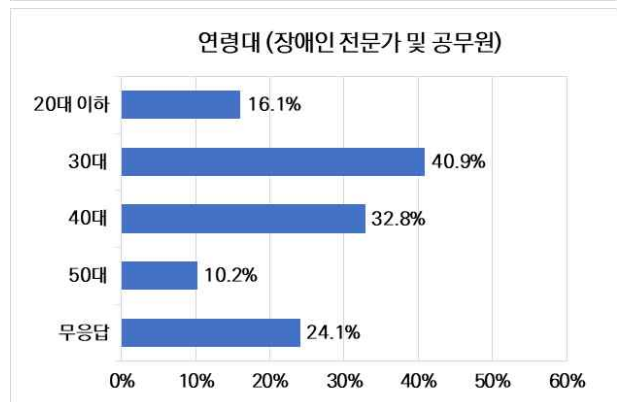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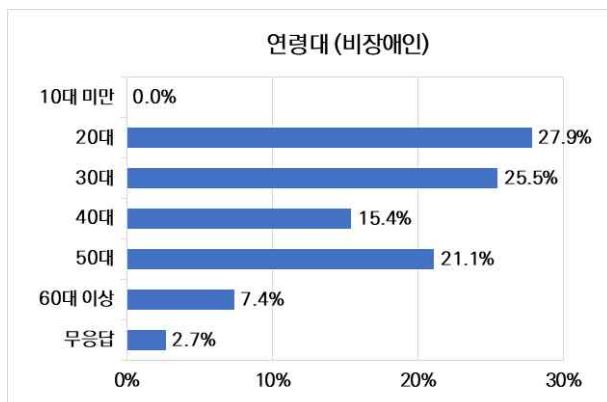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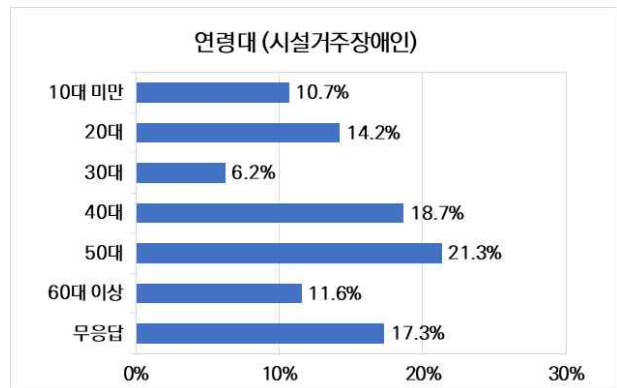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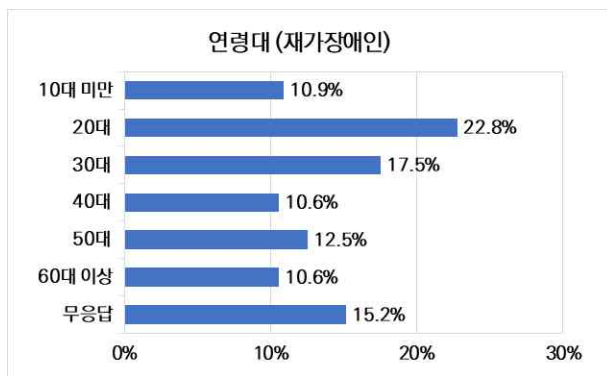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자 성별

### ○ 연령대

- 재가장애인은 20대(22.8%) > 30대(17.5%) > 50대(12.5%) 순으로 응답자가 많음.
- 시설거주 장애인은 50대(21.3%) > 40대(18.7%) > 20대(1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비장애인은 20대(27.9%) > 30대(25.5%) > 50대(21.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음.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30대(40.9%) > 40대(32.9%) > 20대(16.1%) 순임.

[표 4-4] 응답자 연령대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10대 미만	33	10.9	24	10.7	0	0.0	0	0.0
20대	69	22.8	32	14.2	83	27.9	22	12.9
30대	53	17.5	14	6.2	76	25.5	56	32.9
40대	32	10.6	42	18.7	46	15.4	45	26.5
50대	38	12.5	48	21.3	63	21.1	14	8.2
60대 이상	32	10.6	26	11.6	22	7.4	0	0.0
무응답	46	15.2	39	17.3	8	2.7	33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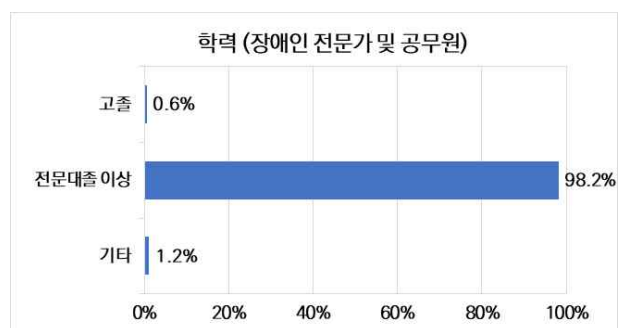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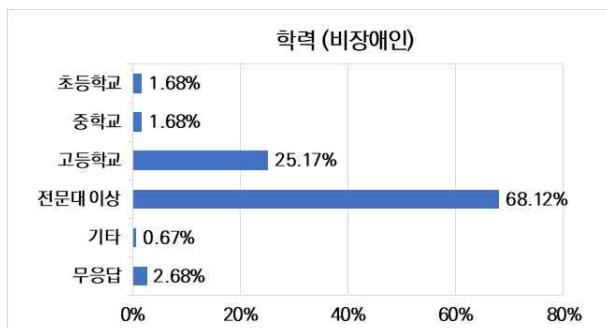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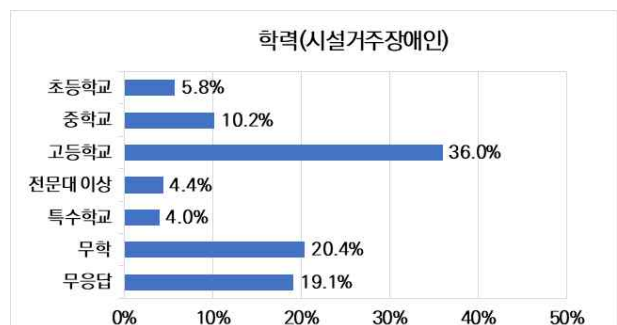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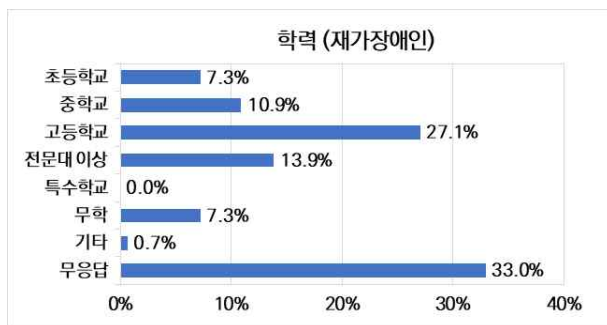
[그림 4-2] 응답자 연령대

## ○ 학력

- 재가장애인의 학력은 고등학교(27.1%) > 중학교(10.9%) > 초등학교(7.3%) 순임.
- 시설거주 장애인의 학력은 고등학교(36.0%) > 무학(20.4%) > 중학교(10.2%) 순임.
- 비장애인 학력은 전문대 이상(68.1%) > 고등학교(25.2%) > 초·중학교(1.7%) 순임.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학력은 전문대 이상(98.2%) > 고등학교(0.6%) 기타(1.2%) 순임.

[표 4-5] 응답자 학력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초등학교	22	7.3	13	5.8	5	1.7	0	0.0
중학교	33	10.9	23	10.2	5	1.7	0	0.0
고등학교	82	27.1	81	36.0	75	25.2	2	1.2
전문대 이상	42	13.9	10	4.4	203	68.1	167	98.2
특수학교	0	0.0	9	4.0	0	0.0	0	0.0
무학	22	7.3	46	20.4	0	0.0	0	0.0
기타	2	0.7	0	0.0	2	0.7	2	1.2
무응답	100	33.0	43	19.1	8	2.7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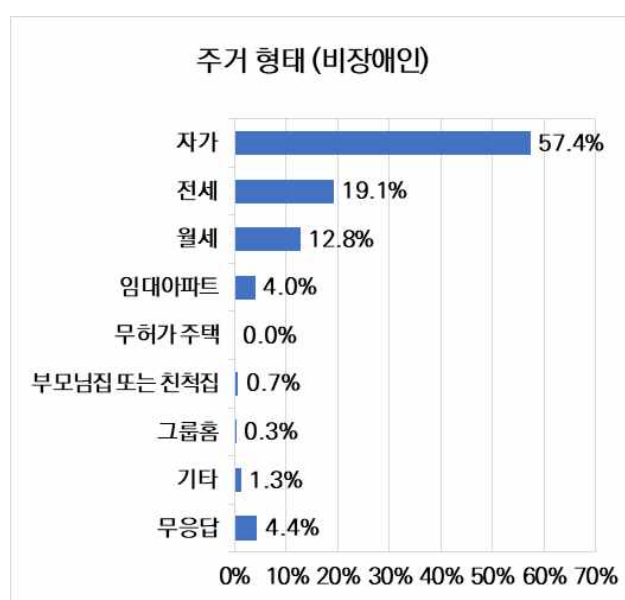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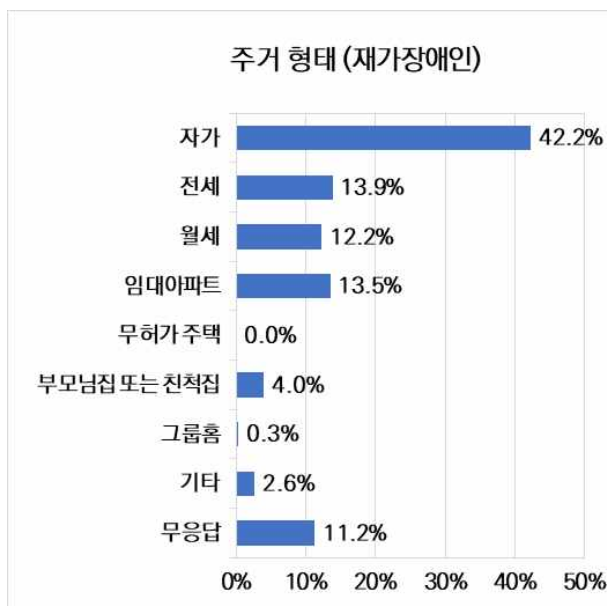
[그림 4-3] 응답자 학력

### ○ 주거 형태

- 재가장애인 대부분은 자가(42.2%) > 전세(13.9%) 임대아파트(13.5%)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부모님 집, 그룹홈 및 기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장애인은 자가(57.7%) > 전세(19.1%) > 월세(12.8%) 순으로 조사됨.

[표 4-6] 응답자 주거 형태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자가	128	42.2	172	57.7
전세	42	13.9	57	19.1
월세	37	12.2	38	12.8
임대아파트	41	13.5	12	4.0
무허가 주택	0	0.0	0	0.0
부모님 집 또는 친척 집	12	4.0	2	0.7
그룹홈	1	0.3	0	0.0
기타	8	2.6	4	1.3
무응답	34	33.0	13	4.4



[그림 4-4] 응답자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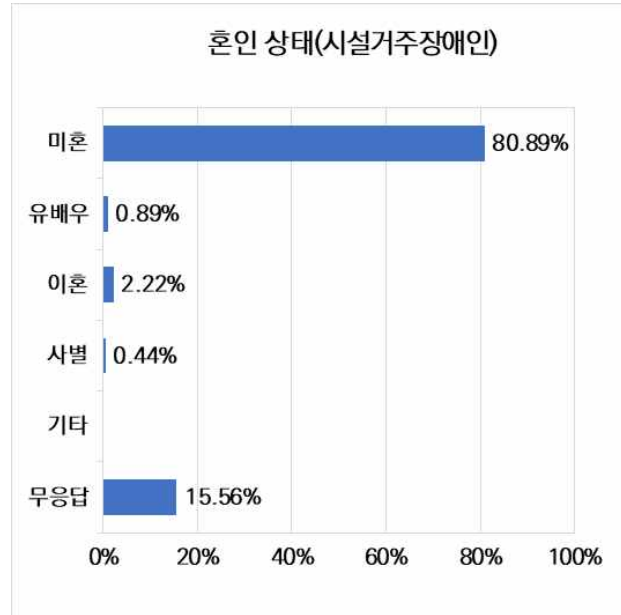


## ○ 혼인상태

- 응답자의 대다수가 미혼(재가 장애인 65.0%, 시설 거주 장애인 80.89%)으로 조사됨.
- . 재가 장애인 대비 시설 거주 장애인의 혼인율이 낮은 것은 거주 및 이동의 제한요인으로 배우자 선택이 손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4-7] 응답자 혼인상태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미혼	197	65.0	182	80.9
유배우	42	13.9	2	0.9
이혼	19	6.3	5	2.2
사별	7	2.3	1	0.4
기타	2	0.7	0	0.0
무응답	36	11.9	35	15.6



[그림 4-5] 응답자 혼인상태

## ○ 가구소득

- 재가장애인의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 (26.4%) > 일정 소득 없음(17.5%) > 100만원 미만(11.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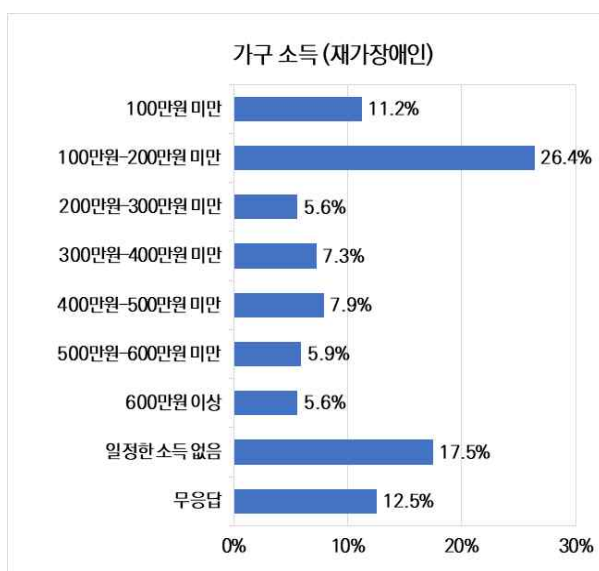
. 연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재가장애인의 분포는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평균 6.3% 정도임.

- 비장애인의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17.4%) > 200만원~300만원 미만(17.1%) > 600만원 이상(16.1%) 순임.

. 비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비교 시 재가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응답자 가구소득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100만원 미만	34	11.2	22	7.4
100만원~200만원 미만	80	26.4	52	17.4
200만원~300만원 미만	17	5.6	51	17.1
300만원~400만원 미만	22	7.3	37	12.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	7.9	22	7.4
500만원~600만원 미만	18	5.9	28	9.4
600만원 이상	17	5.6	48	16.1
일정한 소득 없음	53	17.5	17	5.7
무응답	38	12.5	21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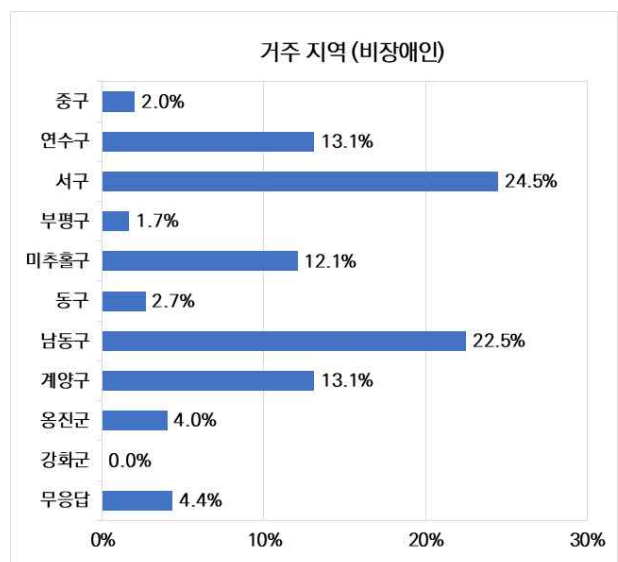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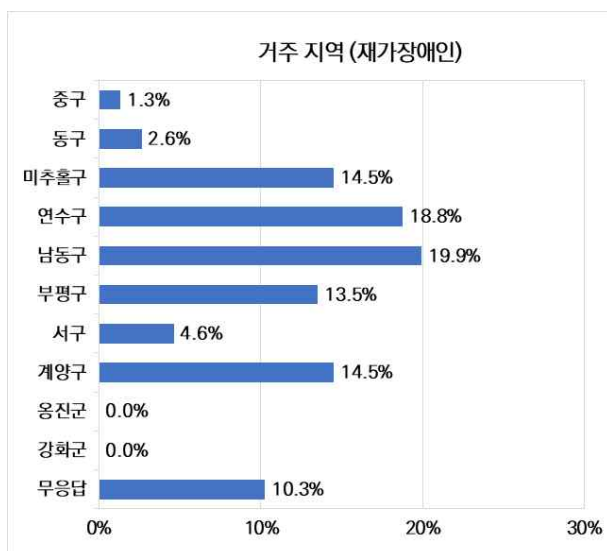
[그림 4-6] 응답자 가구소득

## ○ 거주지역

- 재가장애인의 거주지역은 남동구(19.9%) > 연수구(18.9%) > 계양구/미추홀구(14.6%) > 부평구(13.6%) 순임.
- 비장애인의 거주지역은 미추홀구(24.5%) > 서구(22.5%) > 계양구(13.1%) > 남동구(12.1%) 순임.

[표 4-9] 응답자 거주지역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강화군	0	0.0	0	0.0
옹진군	0	0.0	12	4.0
계양구	44	14.5	39	13.1
서구	14	4.6	67	22.5
부평구	41	13.5	8	2.7
남동구	60	19.9	36	12.1
연수구	57	18.8	5	1.7
미추홀구	44	14.5	73	24.5
동구	8	2.6	39	13.1
중구	4	1.3	6	2.0
무응답	31	10.3	1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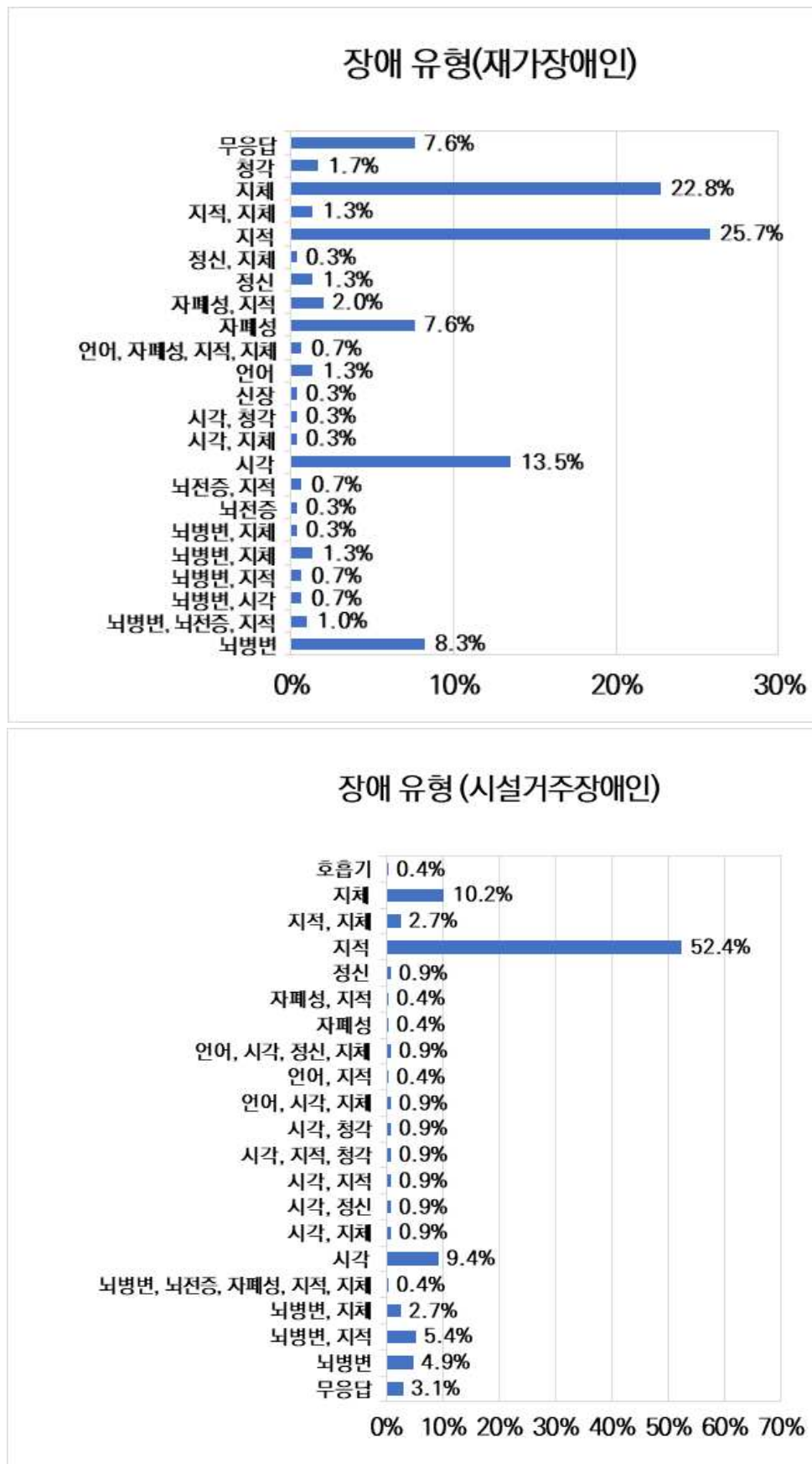
[그림 4-7] 응답자 거주지역

## ○ 장애 유형 (장애인 대상, 장애유형에 대해 중복 표기)

- 재가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34.0%) > 지체 장애(25.1%) > 뇌병변(12.2%) 순임.
  - 시설거주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48.8%) > 지체 장애(16.9%) > 뇌병변(14.9%) 순임.
- . 설문지는 각 군·구의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배포했으므로, 재가장애인 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0] 응답자 장애 유형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뇌병변	25	8.3	11	4.9
뇌병변, 뇌전증, 지적	3	1.0		
뇌병변, 시각	2	0.7		
뇌병변, 지적	2	0.7	12	5.4
뇌병변, 지체	4	1.3	6	2.7
뇌병변, 지체	1	0.3		
뇌전증	1	0.3		
뇌병변, 뇌전증, 자폐성, 지적, 지체			1	0.4
뇌전증, 지적	2	0.7		
시각	41	13.5	21	9.4
시각, 지체	1	0.3	2	0.9
시각, 정신			2	0.9
시각, 지적			2	0.9
시각, 지적, 청각			2	0.9
시각, 청각	1	0.3	2	0.9
신장	1	0.3		
언어	4	1.3		
언어, 시각, 지체			2	0.9
언어, 지적			1	0.4
언어, 자폐성, 지적, 지체	2	0.7		
언어, 시각, 정신, 지체			2	0.9
자폐성	23	7.6	1	0.4
자폐성, 지적	6	2.0	1	0.4
정신	4	1.3	2	0.9
정신, 지체	1	0.3		
지적	78	25.7	118	52.4
지적, 지체	4	1.3	6	2.7
지체	69	22.8	23	10.2
청각	5	1.7		
호흡기			1	0.4
무응답	23	7.6	7	3.1



[그림 4-8] 응답자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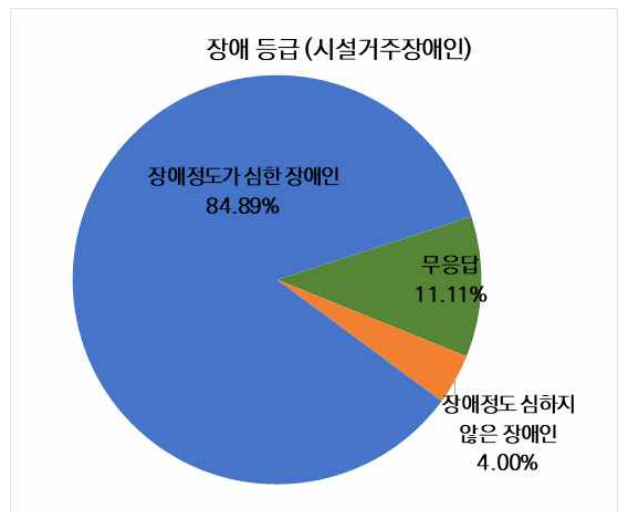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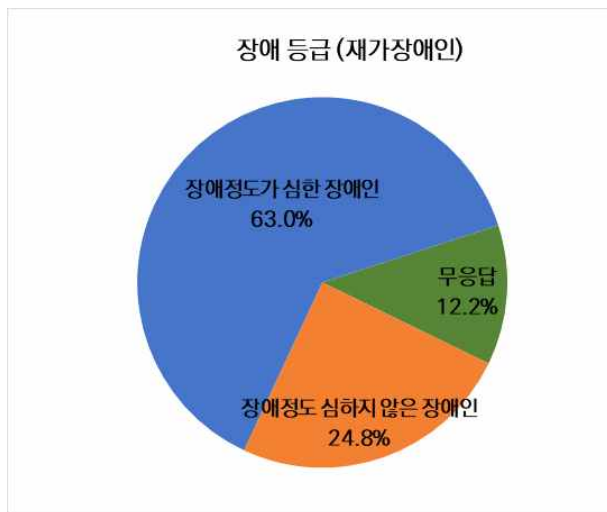
○ 장애등급 (장애인 대상)

- 재가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가 63.0%, 심하지 않은 장애 24.9%이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 84.9%, 심하지 않은 장애가 4.0%로 조사됨.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심한 장애 비중이 높은 것은 장애인의 이동성의 차이로 판단됨.

[표 4-11] 응답자 장애등급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1	63.0	191	84.9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5	24.9	9	4.0
무응답	37	12.2	2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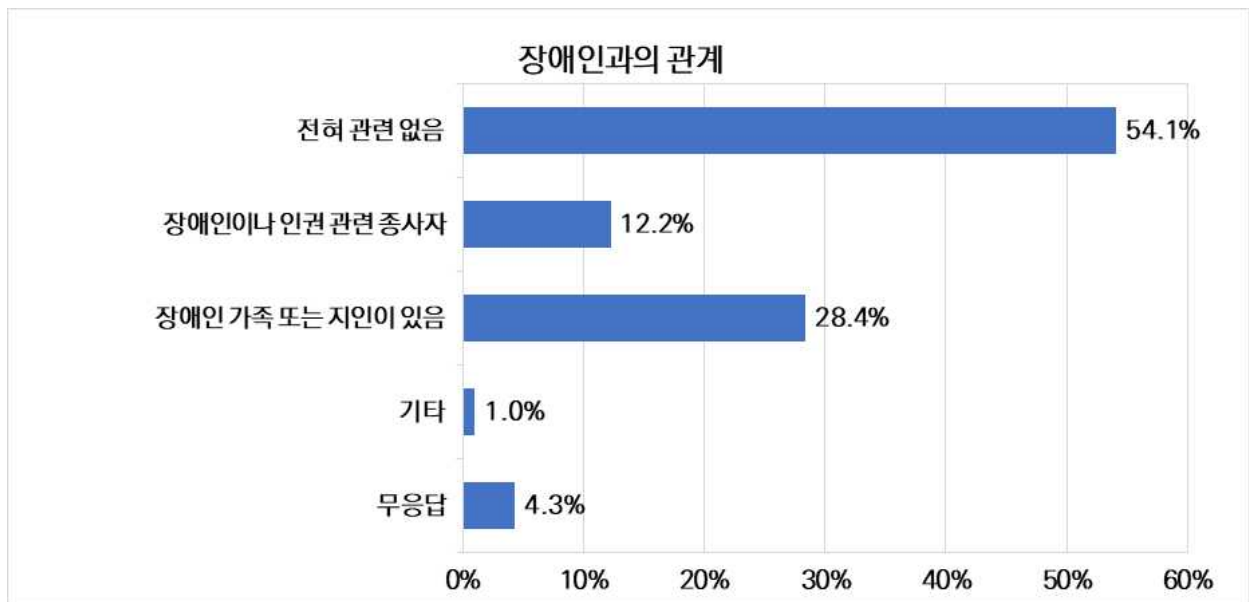
[그림 4-9] 응답자 장애등급

## ○ 장애인과 관련성 (비장애인 대상)

- 응답한 비장애인 중 장애인과 전혀 관련 없음(54.1%) > 가족 또는 지인이 장애인(28.4%) > 관련 종사자(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2] 장애인과의 관계

구분	비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전혀 관련 없음	164	54.1
장애인이나 인권 관련 종사자	37	12.2
장애인 가족 또는 지인이 있음	86	28.4
기타	3	1.0
무응답	13	4.3



[그림 4-10] 장애인과의 관계

## 나) 공통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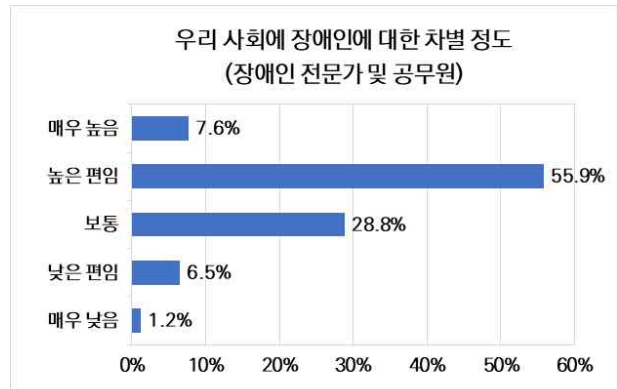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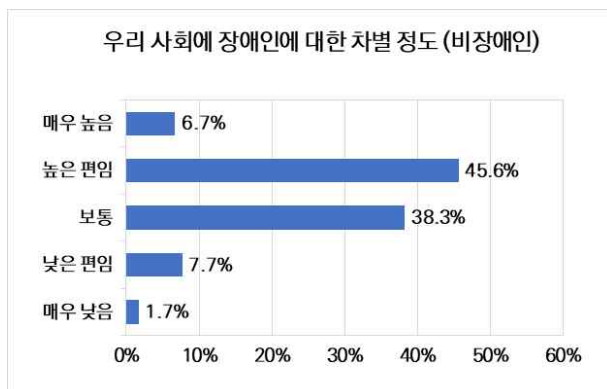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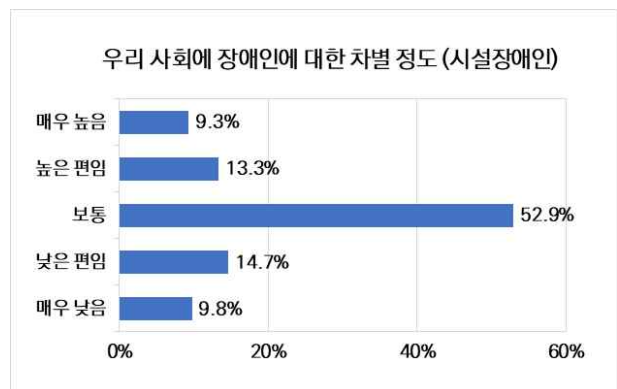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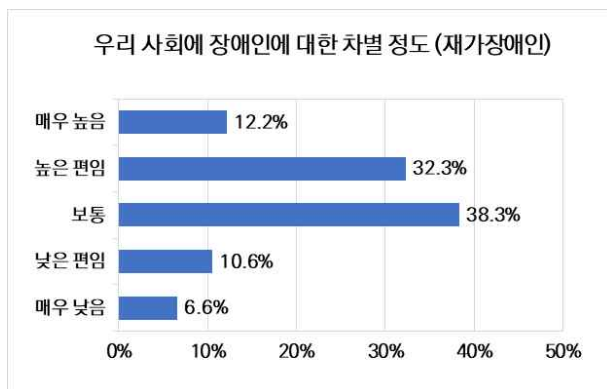
### ㄱ)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해 보통(재가 장애인 38.3%, 시설 거주 장애인 52.9%) 또는 높은 편임(비장애인 45.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55.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대상군의 결과를 합치면 보통 이상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3]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매우 낮음	20	6.6	22	9.8	5	1.7	2	1.2
낮은 편임	32	10.6	33	14.7	23	7.7	11	6.5
보통	116	38.3	119	52.9	114	38.3	49	28.8
높은 편임	98	32.3	30	13.3	136	45.6	95	55.9
매우 높음	37	12.2	21	9.3	20	6.7	13	7.6



[그림 4-11]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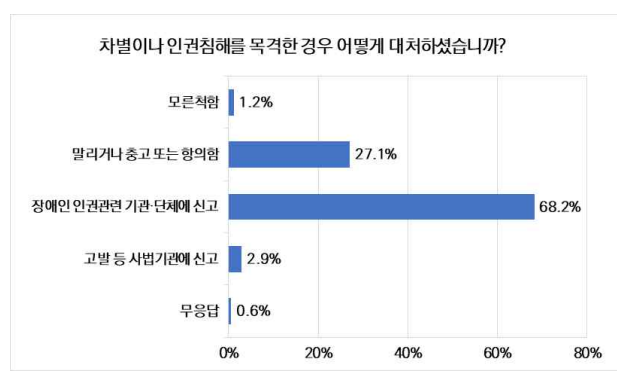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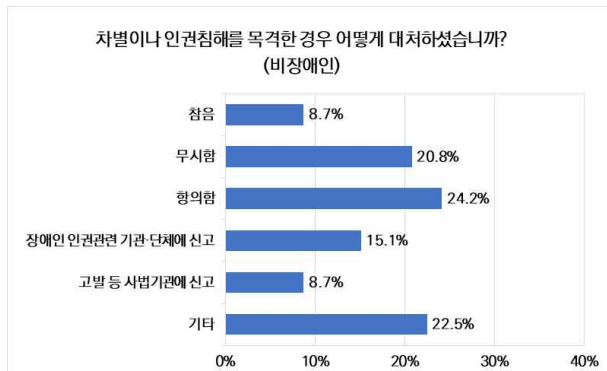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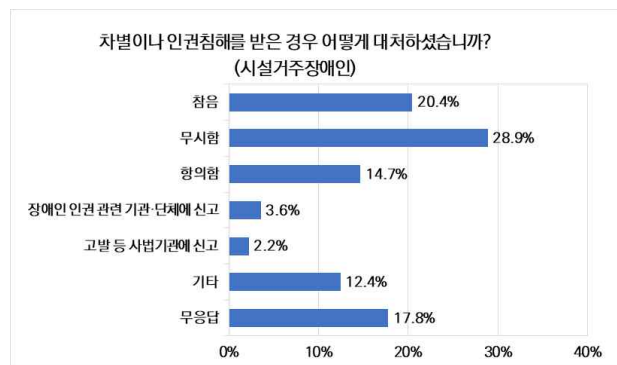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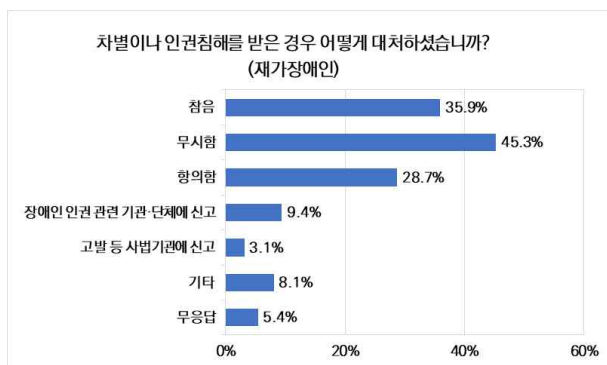


## ㄴ)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거나 목격하면 항의함(재가 장애인 45.3%, 시설 거주 장애인 28.9%, 비장애인 24.2%)이 많았음.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68.2%)가 가장 많았음.
  - 신고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신고 시스템이 복잡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참음	80	26.4	46	20.4	26	8.7	0	0.0
무시함 (모른척함)	101	33.3	65	28.9	62	20.8	2	1.2
항의함 (말리거나 충고함)	64	21.1	33	14.7	72	24.2	46	27.1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21	6.9	8	3.6	45	15.1	116	68.2
고발 등 사법기관에 신고	7	2.3	5	2.2	26	8.7	5	2.9
기타	18	5.9	28	12.4	67	22.8	0	0.0
무응답	12	4.0	40	17.8	0	0.0	1	0.6



[그림 4-12]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 ㄷ)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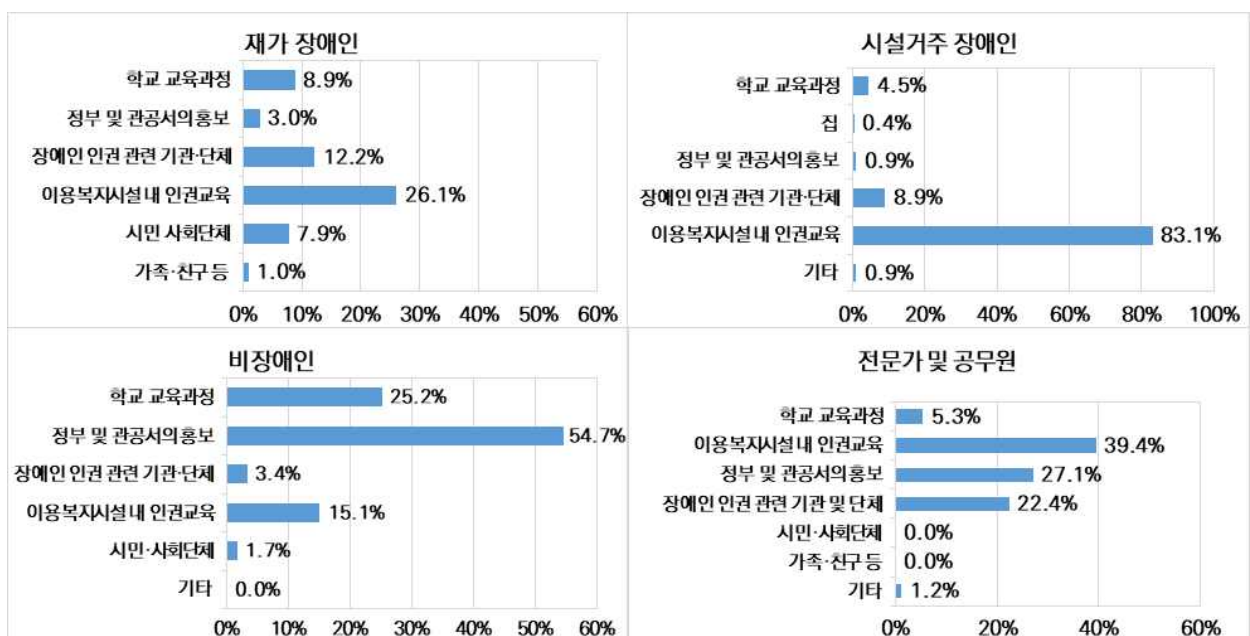
### ○ 정보를 받는 곳

-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정보를 받는 곳은 이용복지시설 내 인권교육(재가장애인 26.1%, 시설 거주 장애인 83.2%, 비장애인 54.7%,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9.4%)이 모든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장애인은 학교 교육으로 접하는 비율도 높으므로 학교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

[표 4-15]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학교 교육과정	27	8.9	10	4.5	75	25.2	9	5.3
집	0	0.0	1	0.4			0	0.0
이용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79	26.1	2	0.9	163	54.7	67	39.4
정부 및 관공서의 홍보	9	3.0	20	8.9	10	3.4	46	27.1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37	12.2	187	83.1	45	15.1	38	22.4
시민·사회단체	24	7.9	2	0.9	5	1.7	0	0.0
가족·친구 등	3	1.0	0	0	0	0.0	0	0.0
기타	0	0.0	2	0.9	0	0.0	2	1.2
무응답	124	40.9	3	1.3	0	0.0	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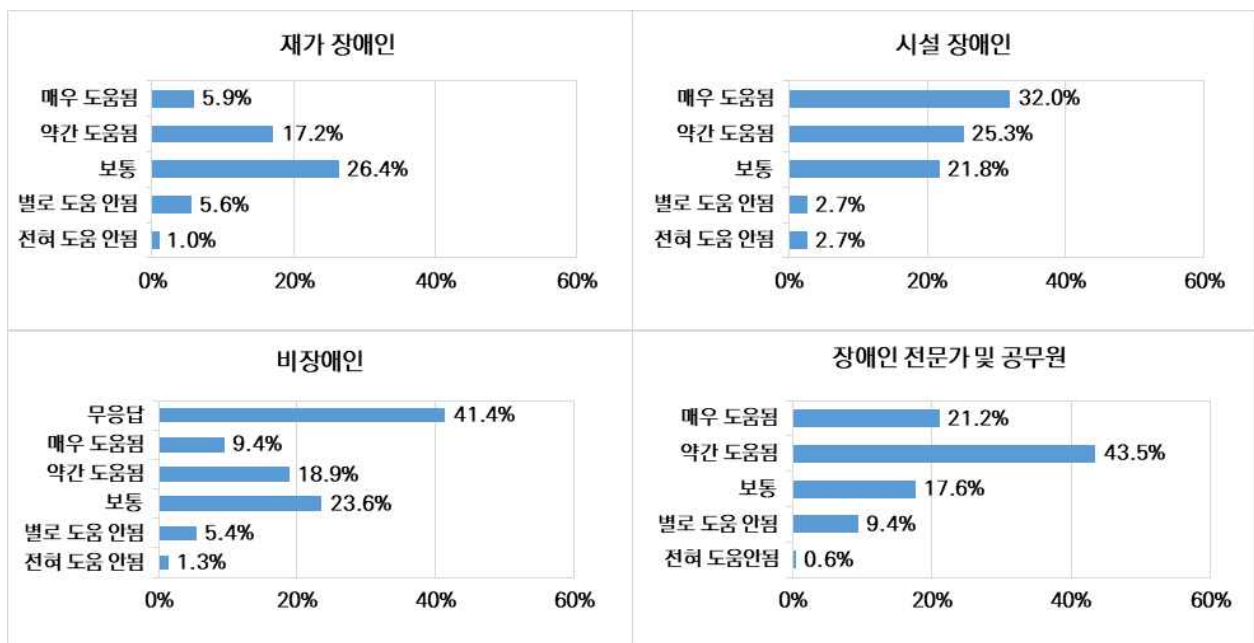
[그림 4-13]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 ○ 교육/정보가 도움이 되었나?

-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정보가 된 정도에 대해 보통(재가장애인 26.4%, 비장애인 40.2%), 약간 도움됨(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43.5%), 매우 도움됨(시설거주 장애인 32.0%)으로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이 보통 이상이 80% 넘는 것으로 볼 때, 자료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6]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전혀 도움 안됨	3	1.0	6	2.7	4	1.3	1	0.6
별로 도움 안됨	17	5.6	6	2.7	16	5.4	16	9.4
보통	80	26.4	49	21.8	70	23.6	30	17.6
약간 도움됨	52	17.2	57	25.3	56	18.9	74	43.5
매우 도움됨	18	5.9	72	32.0	28	9.4	36	21.2
무응답	133	43.9	35	15.6	124	41.4	1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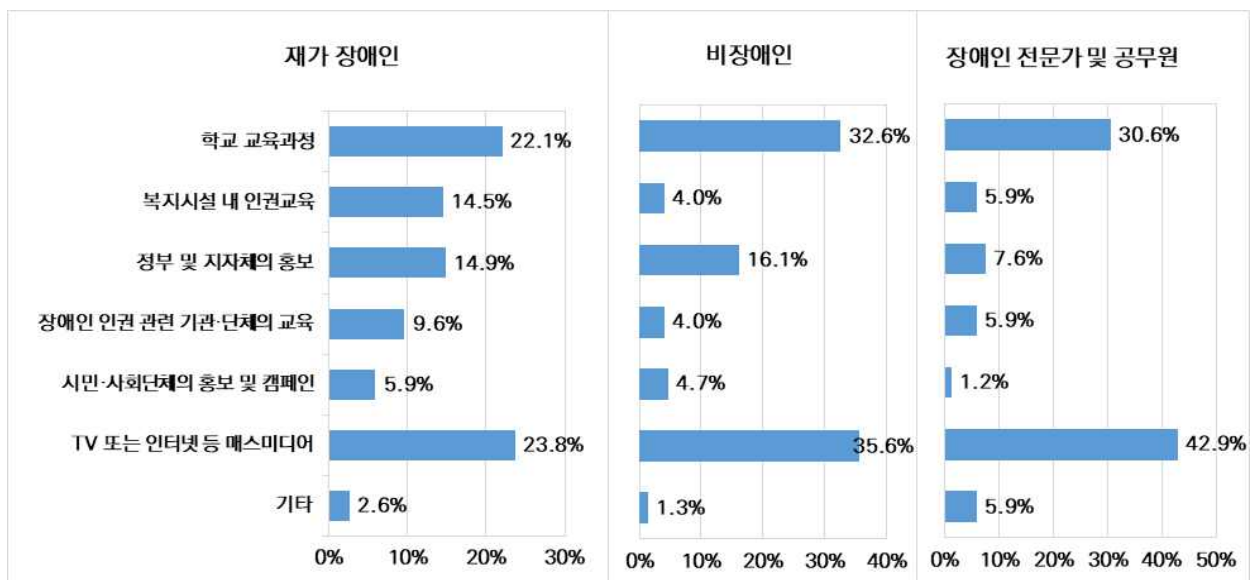
[그림 4-14]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 ㄹ)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 모든 응답에서 1순위가 매스미디어(재가장애인 23.8%, 비장애인 35.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42.9%), 2순위가 학교 교육과정(재가장애인 22.1%, 비장애인 32.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0.6%)으로 의견이 모임.
- 매스미디어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학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표 4-17]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170	100
학교 교육과정	67	22.1	97	32.6	52	30.6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44	14.5	12	4.0	10	5.9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	45	14.9	48	16.1	13	7.6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29	9.6	12	4.0	10	5.9
시민·사회단체의 홍보 및 캠페인	18	5.9	14	4.7	2	1.2
TV 또는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72	23.8	106	35.6	73	42.9
기타	8	2.6	4	1.3	10	5.9
무응답	20	6.6	5	1.7	0	0.0



[그림 4-15]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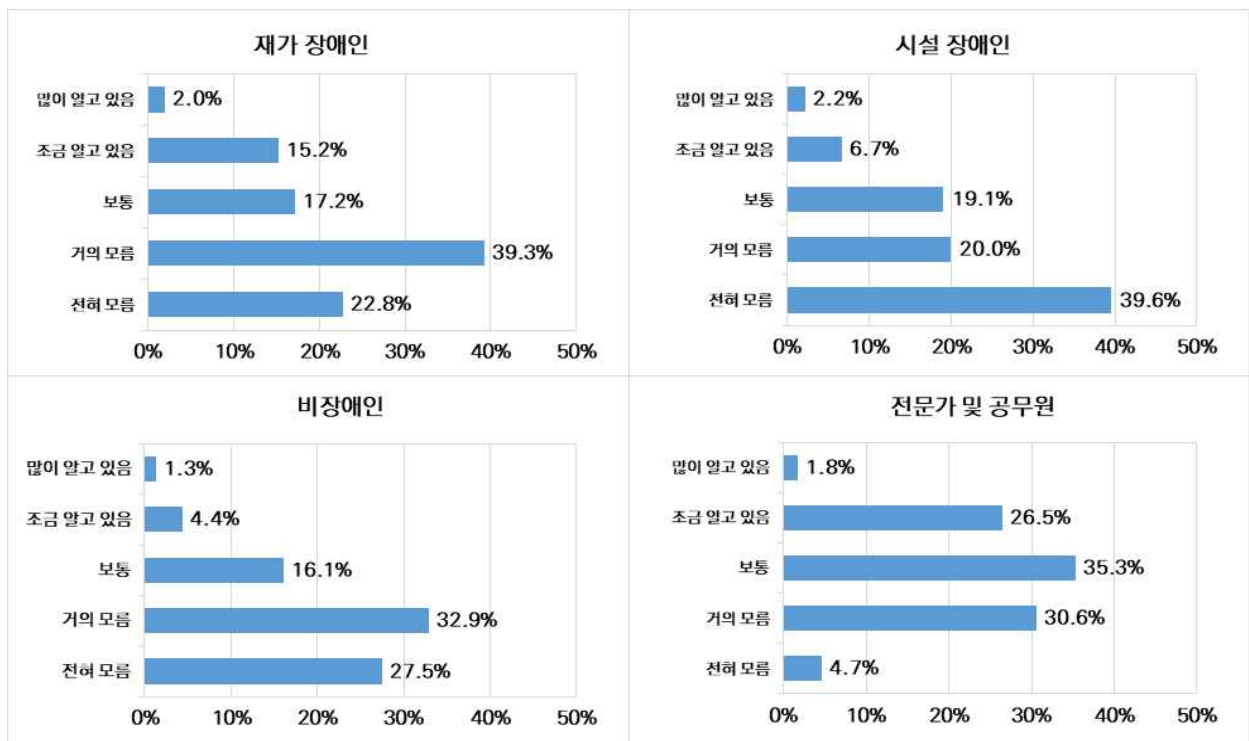
ㄱ)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시설거주 장애인 39.6%), 거의 모름(재가장애인 39.3%), 보통(비장애인 32.9%,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5.3%)으로 나타남.

- 조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교육 및 홍보물에 조례에 대한 설명해주는 방법이 필요함.

[표 4-18]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전혀 모름	69	22.8	89	39.6	82	27.5	8	4.7
거의 모름	119	39.3	45	20.0	98	32.9	52	30.6
보통	52	17.2	43	19.1	48	16.1	60	35.3
조금 알고 있음	46	15.2	15	6.7	13	4.4	45	26.5
많이 알고 있음	6	2.0	5	2.2	4	1.3	3	1.8
무응답	11	3.6	28	12.4	53	17.8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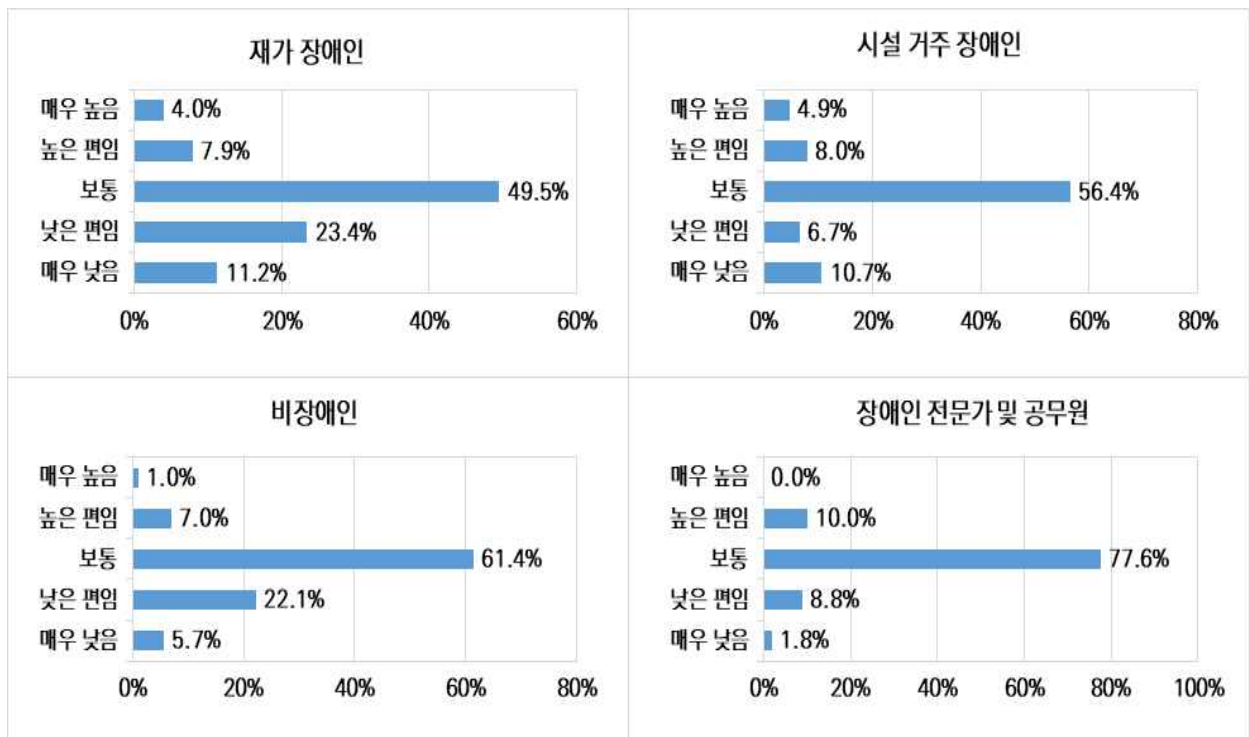
[그림 4-1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 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은 모든 응답에서 보통 (재가장애인 49.5%, 시설거주 장애인 56.4%, 비장애인 61.4%,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77.6%)이 높게 나타남.
- 다른 지역에 가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가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낮은 편이 2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이 주변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9]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25	100	298	100	170	100
매우 낮음	34	11.2	24	10.7	17	5.7	3	1.8
낮은 편임	71	23.4	15	6.7	66	22.1	15	8.8
보통	150	49.5	127	56.4	183	61.4	132	77.6
높은 편임	24	7.9	18	8.0	21	7.0	17	10.0
매우 높음	12	4.0	11	4.9	3	1.0	0	0.0
무응답	12	4.0	30	13.3	8	2.7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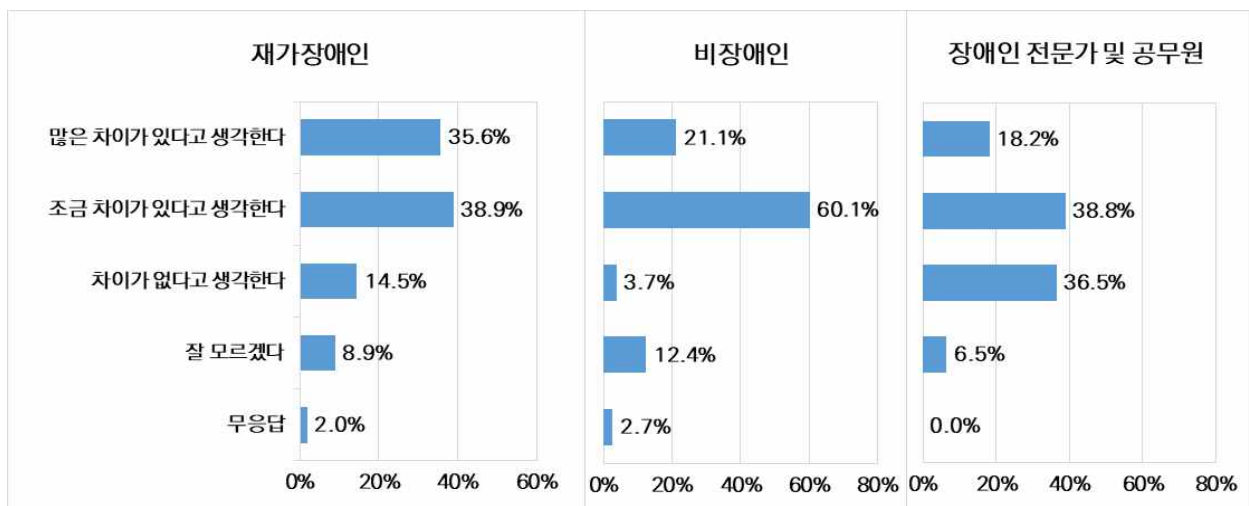
[그림 4-17]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 나)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 장애인이 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에 관한 모든 응답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재가장애인 38.9%, 비장애인 60.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38.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다른 응답군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0]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170	100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08	35.6	63	21.1	31	18.2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18	38.9	179	60.1	66	38.8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44	14.5	37	12.4	62	36.5
잘 모르겠다	27	8.9	11	3.7	11	6.5
무응답	6	2.0	8	2.7	0	0.0



[그림 4-18]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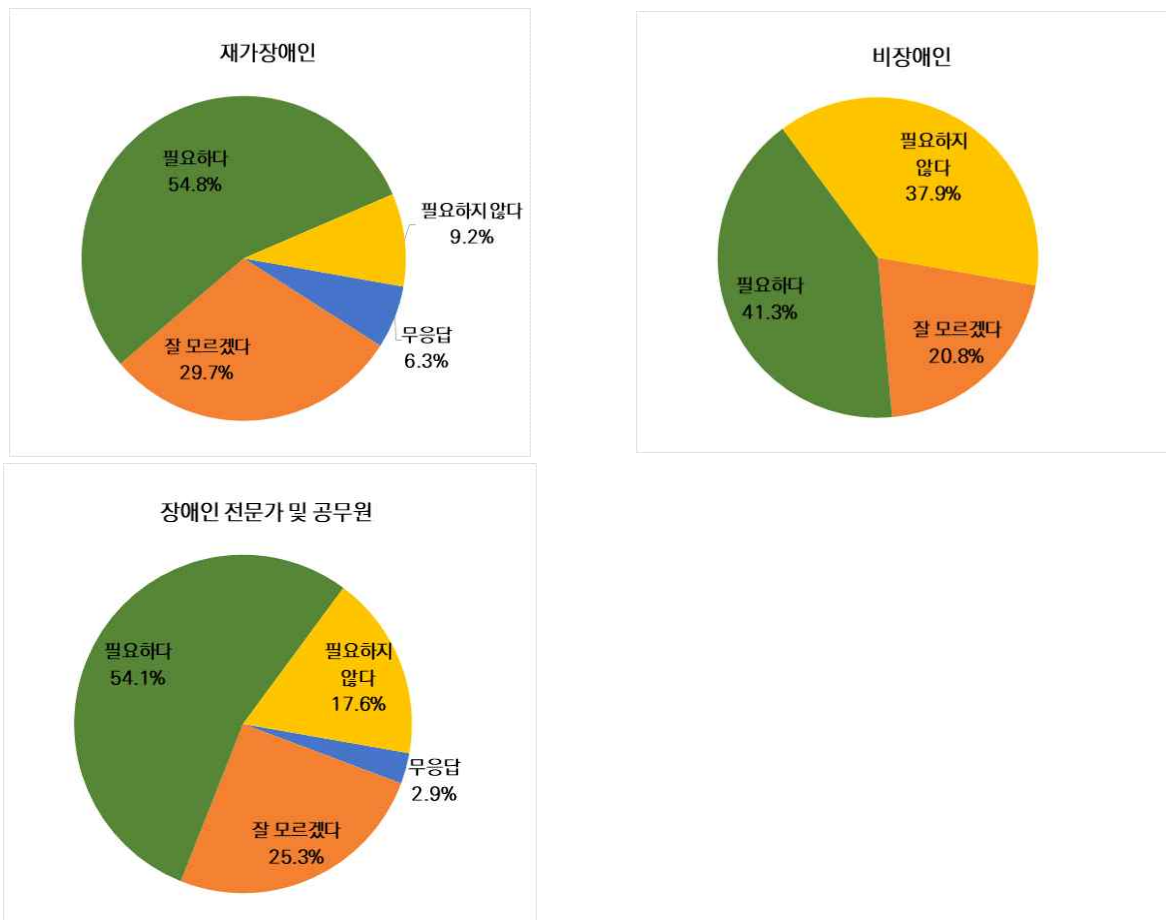
## ○)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 ○ 정책의 필요성

- 모든 응답에서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재가장애인 54.8%, 비장애인 41.3%,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54.1%)

[표 4-2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303	100	298	100	170	100
필요하다	166	54.8	123	41.3	92	54.1
필요하지 않다	28	9.2	113	37.9	30	17.6
잘 모르겠다	90	29.7	62	20.8	43	25.3
무응답	19	6.3	0	0.0	5	2.9



[그림 4-19]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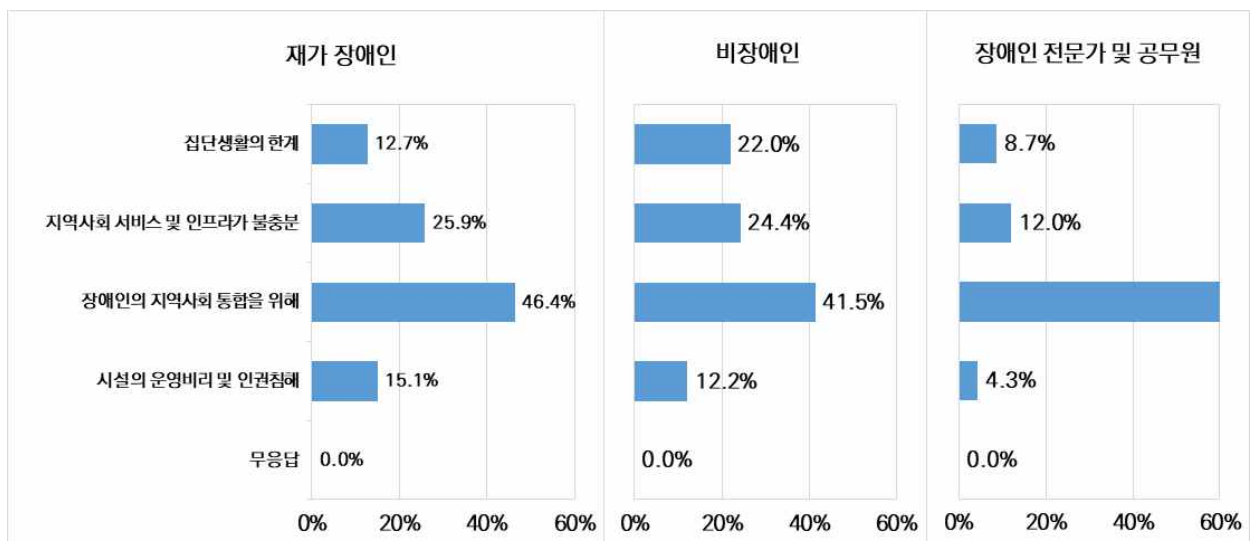


## ○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람만 응답함.
-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재가장애인 42.4%, 비장애인 41.5%,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75.0%)
- 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의 예산이나 계획이 필요함.

[표 4-22]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구분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166	100	123	100	92	100
시설의 운영 비리 및 인권 침해	25	15.1	15	12.2	4	4.3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77	46.4	51	41.5	69	75.0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	43	25.9	30	24.4	11	12.0
집단생활의 한계	21	12.7	27	22.0	8	8.7
무응답	0	0.0	0	0.0	0	0.0



[그림 4-20]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 다)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장애인 대상)

○ 0점부터 3점까지 4단 척도로 응답한 점수를 평균한 결과 시설거주 장애인보다

재가 장애인이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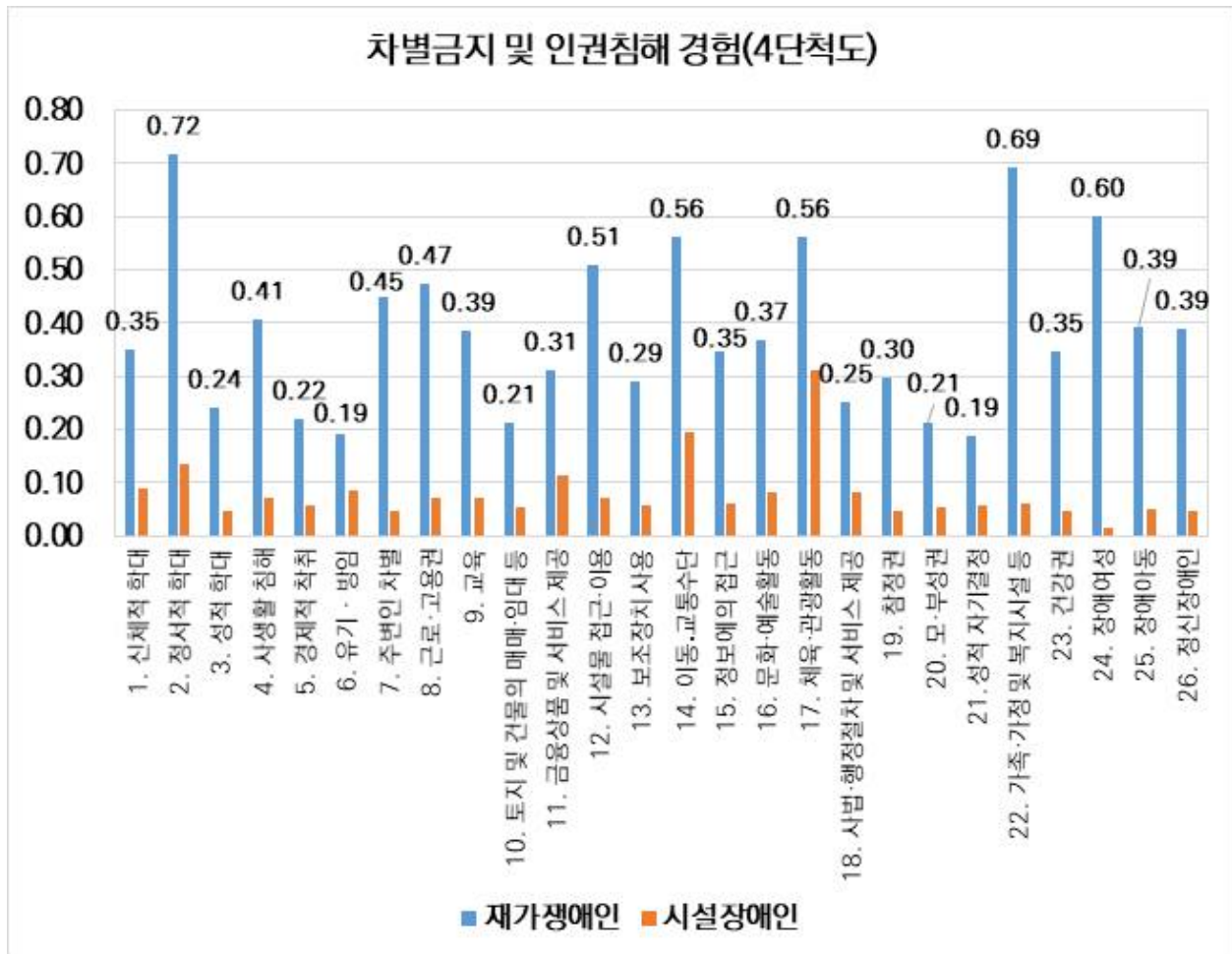
- 재가 장애인은 정서적 학대(0.72점)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0.69점) > 장애 여성(0.6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설거주 장애인은 체육·관광 활동(0.16점)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0.11점) > 신체적 학대(0.0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평균이 1점 이하로 인권 침해 경험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4-23]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구분	재가 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1. 신체적 학대	0.35	0.09
2. 정서적 학대	0.72	0.13
3. 성적 학대	0.24	0.05
4. 사생활 침해	0.41	0.07
5.경제적 착취	0.22	0.06
6. 유기·방임	0.19	0.09
7. 주변인 차별	0.45	0.05
8. 근로·고용권	0.47	0.07
9. 교육	0.39	0.07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0.21	0.05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0.31	0.11
12. 시설물 접근·이용	0.51	0.07
13. 보조장치 사용	0.29	0.06
14. 이동·교통수단	0.56	0.20
15. 정보에의 접근	0.35	0.06
16. 문화·예술 활동	0.37	0.08
17. 체육·관광 활동	0.56	0.31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0.25	0.08
19. 참정권	0.30	0.05
20. 모·부성 권	0.21	0.05
21. 성적 자기결정	0.19	0.06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0.69	0.06
23. 건강권	0.35	0.05
24. 장애 여성	0.60	0.02
25. 장애아동	0.39	0.05
26. 정신 장애인	0.39	0.05



[그림 4-21]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 ○ 성별 분석

- 재가장애인은 근로·고용권 분야에서 남녀의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시설거주 장애인은 주변인 차별, 근로·고용권,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체육·관광 활동 등에서 여성의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함.

[표 4-24]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성별 분석)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남성	여성	무응답	남성	여성	무응답
1. 신체적 학대	0.38	0.25	0.32	0.14	0.01	0.29
2. 정서적 학대	0.76	0.71	0.42	0.20	0.02	0.57
3. 성적 학대	0.22	0.16	0.63	0.05	0.00	0.86
4. 사생활 침해	0.43	0.32	0.63	0.08	0.01	0.86
5. 경제적 착취	0.20	0.15	0.47	0.05	0.00	0.57
6. 유기·방임	0.25	0.08	0.47	0.11	0.01	0.86
7. 주변인 차별	0.49	0.38	0.42	0.02	0.05	0.86
8. 근로·고용권	0.64	0.32	0.37	0.04	0.08	0.86
9. 교육	0.43	0.27	0.47	0.06	0.05	0.86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0.25	0.12	0.47	0.02	0.06	0.86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0.36	0.21	0.42	0.08	0.12	1.00
12. 시설물 접근·이용	0.49	0.48	0.63	0.05	0.07	0.86
13. 보조장치 사용	0.33	0.21	0.58	0.06	0.05	0.86
14. 이동·교통수단	0.58	0.55	0.42	0.20	0.16	0.86
15. 정보에의 접근	0.41	0.32	0.53	0.06	0.06	1.14
16. 문화·예술 활동	0.46	0.23	0.47	0.06	0.08	0.86
17. 체육·관광 활동	0.60	0.51	0.53	0.27	0.38	0.86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0.28	0.14	0.63	0.10	0.01	0.86
19. 참정권	0.36	0.16	0.58	0.07	0.00	0.57
20. 모·부성 권	0.22	0.11	0.53	0.07	0.04	0.33
21. 성적 자기결정	0.22	0.11	0.47	0.07	0.02	0.57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0.37	0.22	0.53	0.08	0.05	0.29
23. 건강권	0.38	0.25	0.47	0.07	0.00	0.57
24. 장애 여성	0.20	0.27	0.53	0.02	0.01	0.33
25. 장애아동	0.34	0.27	0.53	0.07	0.00	0.67
26. 정신 장애인	0.41	0.28	0.53	0.07	0.01	0.43

## ○ 연령대별 분석

## - 재가장애인

- 10대 장애인들이 주변인 차별, 시설물 접근·이용, 보조장치 사용, 이동·교통수단, 건강권, 장애아동, 정신 장애인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으나, 20대 장애인은 정서적 학대, 체육·관광 활동으로 받는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30대 장애인들은 근로·고용권에서 차별이 많으며, 40대 장애인들은 정보에의 접근 분야에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함.
- 반면 50대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과 이동·교통수단에서 차별받는다고 응답이 높으며, 60대 장애인들은 이동·교통수단 분야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별 및 인권 침해는 경험이 연령대별로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0대의 선천성, 20대의 야외활동, 30~40대의 직업 활동, 50대 이상의 이동성 요인으로 판단됨.

[표 4-25]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재가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재가장애인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1. 신체적 학대	0.27	0.23	0.44	0.36	0.33	0.20	0.38
2. 정서적 학대	0.97	0.58	0.85	0.95	0.76	0.40	0.46
3. 성적 학대	0.33	0.05	0.27	0.31	0.15	0.13	0.46
4. 사생활 침해	0.64	0.14	0.35	0.57	0.41	0.25	0.65
5. 경제적 착취	0.36	0.13	0.12	0.24	0.17	0.10	0.42
6. 유기·방임	0.55	0.13	0.13	0.10	0.11	0.03	0.42
7. 주변인 차별	0.88	0.31	0.29	0.64	0.28	0.38	0.42
8. 근로·고용권	0.67	0.27	0.81	0.57	0.35	0.30	0.38
9. 교육	0.91	0.11	0.31	0.52	0.39	0.10	0.46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0.42	0.11	0.08	0.33	0.15	0.08	0.42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0.55	0.30	0.23	0.31	0.26	0.08	0.42
12. 시설물 접근·이용	0.88	0.20	0.31	0.64	0.78	0.30	0.62
13. 보조장치 사용	0.64	0.13	0.25	0.26	0.24	0.23	0.54
14. 이동·교통수단	0.97	0.22	0.48	0.52	0.78	0.70	0.42
15. 정보에의 접근	0.45	0.13	0.31	0.88	0.26	0.25	0.58
16. 문화·예술 활동	0.76	0.20	0.37	0.43	0.28	0.10	0.54
17. 체육·관광 활동	0.91	0.41	0.42	0.79	0.61	0.35	0.54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0.61	0.09	0.15	0.17	0.22	0.08	0.65
19. 참정권	0.58	0.22	0.21	0.29	0.22	0.08	0.58
20. 모·부성 권	0.45	0.14	0.12	0.05	0.17	0.08	0.50
21. 성적 자기결정	0.39	0.08	0.17	0.26	0.09	0.03	0.46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0.58	0.20	0.27	0.45	0.20	0.18	0.46
23. 건강권	0.91	0.08	0.17	0.43	0.33	0.18	0.54
24. 장애 여성	0.33	0.23	0.19	0.26	0.30	0.10	0.50
25. 장애아동	0.82	0.22	0.29	0.26	0.22	0.10	0.58
26. 정신 장애인	0.82	0.33	0.35	0.38	0.24	0.05	0.50

## - 시설거주 장애인

- 10대는 정서적 학대,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정보에의 접근, 체육·관광 활동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며, 20대는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체육·관광 활동의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함.
- 30대는 이동·교통수단, 정보에의 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관광 활동 분야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며, 40대 이상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는다고 응답함.
- 50대는 경제적 착취, 참정권, 건강권, 장애아동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60대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함.

[표 4-26]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시설거주 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시설거주 장애인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1. 신체적 학대	0.00	0.00	0.00	0.11	0.19	0.07	0.45
2. 정서적 학대	0.08	0.00	0.13	0.07	0.26	0.13	0.64
3. 성적 학대	0.00	0.00	0.00	0.00	0.04	0.07	0.82
4. 사생활 침해	0.00	0.00	0.00	0.00	0.09	0.13	0.82
5. 경제적 착취	0.00	0.00	0.00	0.00	0.07	0.00	0.55
6. 유기·방임	0.00	0.00	0.00	0.04	0.17	0.03	0.82
7. 주변인 차별	0.00	0.00	0.00	0.02	0.02	0.07	0.82
8. 근로·고용권	0.00	0.00	0.00	0.09	0.06	0.07	0.82
9. 교육	0.00	0.00	0.00	0.00	0.09	0.13	0.82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0.00	0.00	0.00	0.00	0.00	0.17	0.82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0.00	0.00	0.00	0.13	0.09	0.20	0.91
12. 시설물 접근·이용	0.04	0.05	0.00	0.11	0.02	0.03	0.82
13. 보조장치 사용	0.00	0.00	0.00	0.04	0.04	0.17	0.82
14. 이동·교통수단	0.08	0.05	0.07	0.41	0.20	0.10	0.82
15. 정보에의 접근	0.04	0.00	0.07	0.02	0.02	0.21	1.00
16. 문화·예술 활동	0.00	0.00	0.07	0.04	0.07	0.17	0.82
17. 체육·관광 활동	0.04	0.16	0.07	0.41	0.46	0.40	0.82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0.00	0.00	0.00	0.04	0.15	0.03	0.82
19. 참정권	0.00	0.00	0.00	0.00	0.11	0.00	0.64
20. 모·부성 권	0.00	0.00	0.00	0.02	0.11	0.07	0.50
21. 성적 자기결정	0.00	0.00	0.00	0.00	0.09	0.10	0.64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0.00	0.00	0.00	0.04	0.15	0.03	0.45
23. 건강권	0.00	0.00	0.00	0.00	0.11	0.00	0.64
24. 장애 여성	0.00	0.00	0.00	0.00	0.00	0.04	0.50
25. 장애아동	0.00	0.00	0.00	0.00	0.11	0.00	0.70
26. 정신 장애인	0.00	0.00	0.00	0.00	0.11	0.03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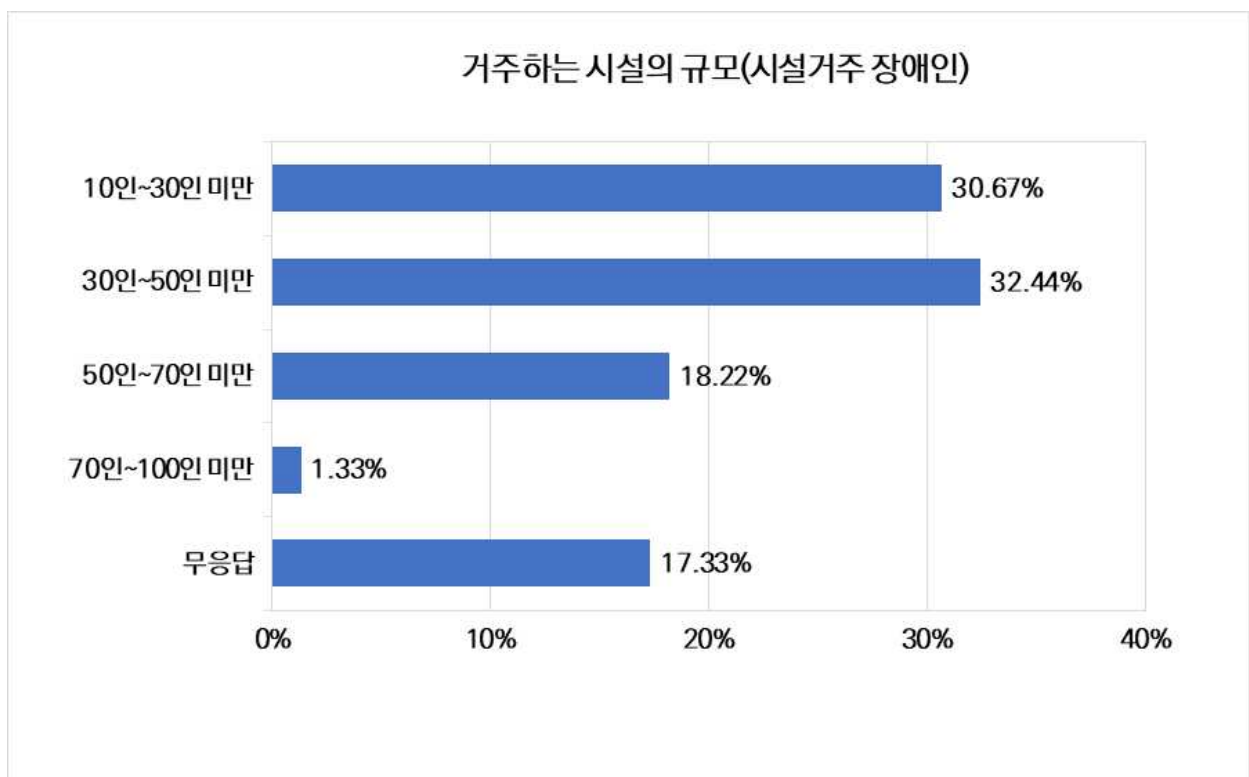
## 라)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중증장애인 탈사회화)

## ㄱ)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는 30인~50인 미만(32.4%) > 10인~30인 미만(30.7%) > 50인~70인 미만(18.2%) 순으로 조사됨.

[표 4-27]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10인~30인 미만	69	30.7
30인~50인 미만	73	32.4
50인~70인 미만	41	18.2
70인~100인 미만	3	1.3
무응답	39	17.3



[그림 4-22]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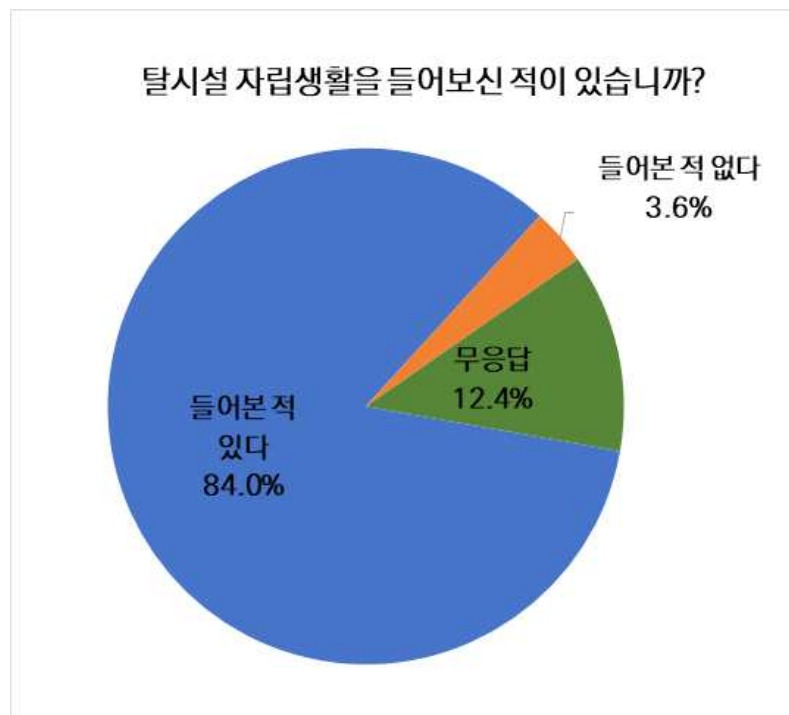
## ㄴ) 탈시설 자립 생활

### ○ 인지 여부

- 탈시설 자립 생활에 대해 84.0%는 들어본 것으로 조사됨.

[표 4-28]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들어본 적 있다	189	84.0%
들어본 적 없다	8	3.6%
무응답	28	12.4%



[그림 4-23]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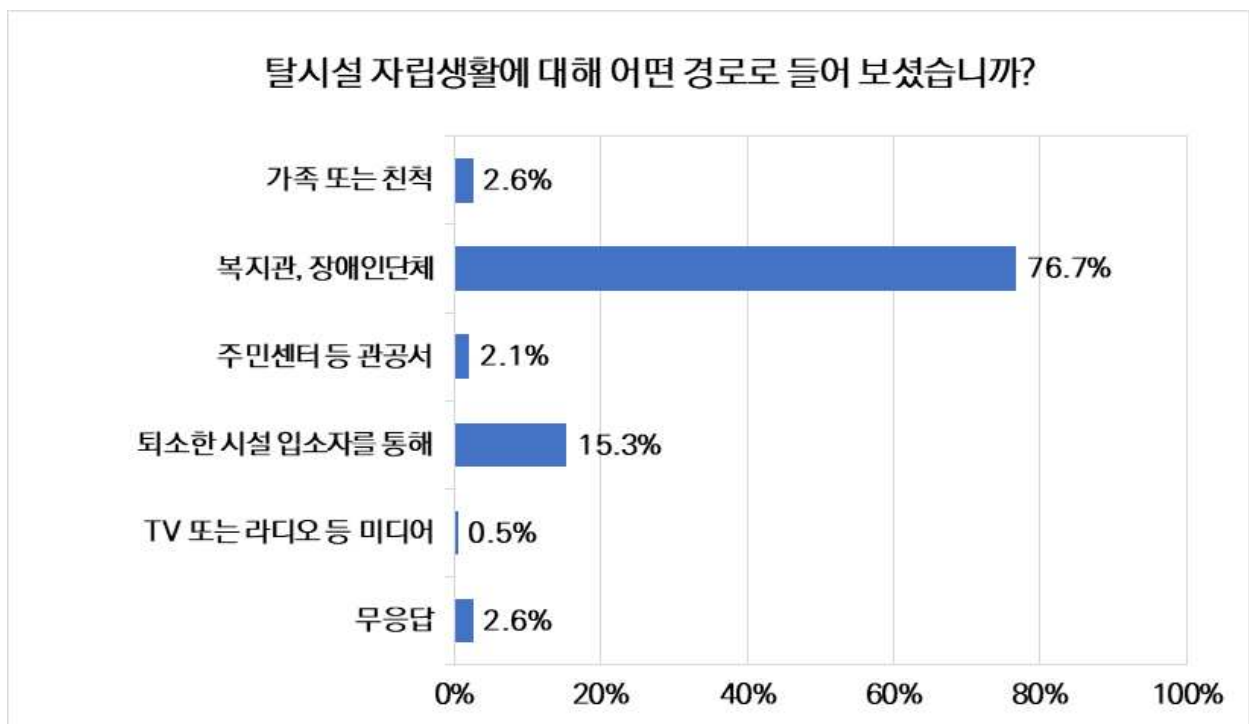
### ㄷ)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 탈시설 자립 생활에 관해 복지관/장애인 단체(76.7%) > 시설 퇴소자(15.3%) > 가족/친척(2.6%) > 관공서(2.1%) 순으로 접한 것으로 조사됨.

· 복지관/장애인 단체도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4-29]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가족 또는 친척	5	2.6
복지관, 장애인 단체	145	76.7
주민센터 등 관공서	4	2.1
퇴소한 시설 입소자를 통해	29	15.3
TV 또는 라디오 등 미디어	1	0.5
무응답	5	2.6



[그림 4-24]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 ㄹ) 시설 밖 거주 경험 및 기간

### ○ 거주 경험 여부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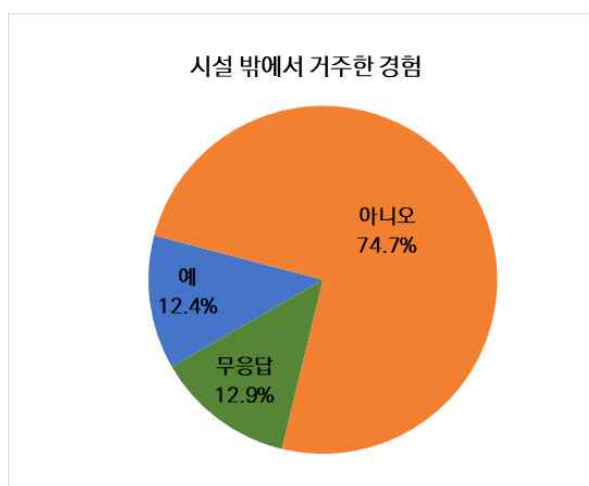
- 시설거주 장애인 중 12.4%가 시설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주기간은 1년 미만부터 5년 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표 4-30] 시설 밖 거주 경험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예	28	12.4
아니오	168	74.7
무응답	29	12.9

[표 2-31] 시설 밖 거주기간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8	100
1년 미만	6	21.4
1년 이상 3년 미만	6	21.4
3년 이상 5년 미만	4	14.3
5년 이상	6	21.4
무응답	6	21.4



[그림 4-25] 시설 밖 거주 경험 및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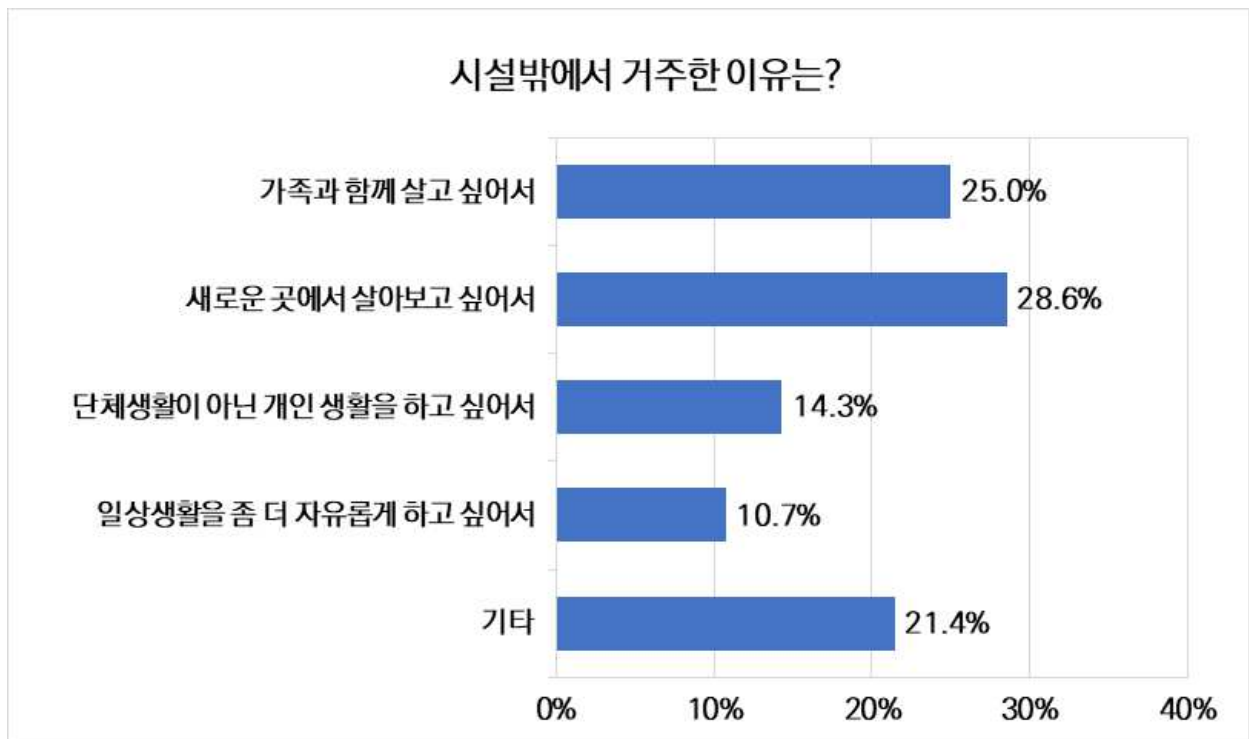
## ○ 시설 밖에서 생활한 가장 중요한 이유

- 시설 밖에서 거주했던 이유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28.6%) >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25.0%) > 개인 생활을 하고 싶다(14.3%) 순으로 조사됨.

. 시설에서의 생활에 개인의 자유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표 4-32] 시설 밖 거주 이유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8	100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7	25.0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8	28.6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4	14.3
일상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3	10.7
기타	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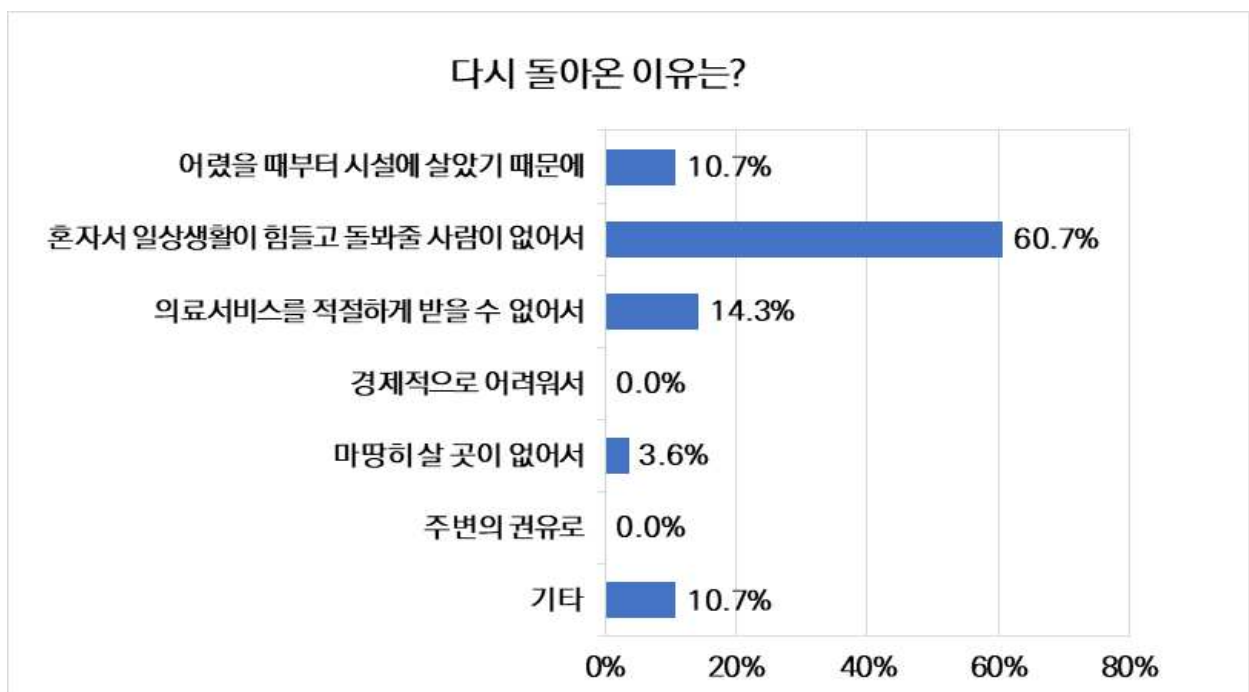
[그림 4-26] 시설 밖 거주 이유

## ㄴ) 시설로 다시 돌아온 주된 이유

- 시설로 다시 돌아온 주된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60.7%)가 가장 많았음.
- 다른 주된 이유로는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다(14.3%),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기 때문(10.7%)이라는 답변이 높았음.
- 탈시설로 생활하기에는 인프라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3]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8	100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3	10.7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7	60.7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어서	4	14.3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0	0.0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1	3.6
주변의 권유로	0	0.0
기타	3	10.7



[그림 4-27]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 ㄴ) 시설 외부 거주 의사

○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장애인들이 더 많은 것(45.3%)으로 조사됨.

[표 4-34] 시설 외부 거주 의사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예	85	37.8
아니오	102	45.3
잘 모르겠다	38	16.9



[그림 4-28] 시설 외부 거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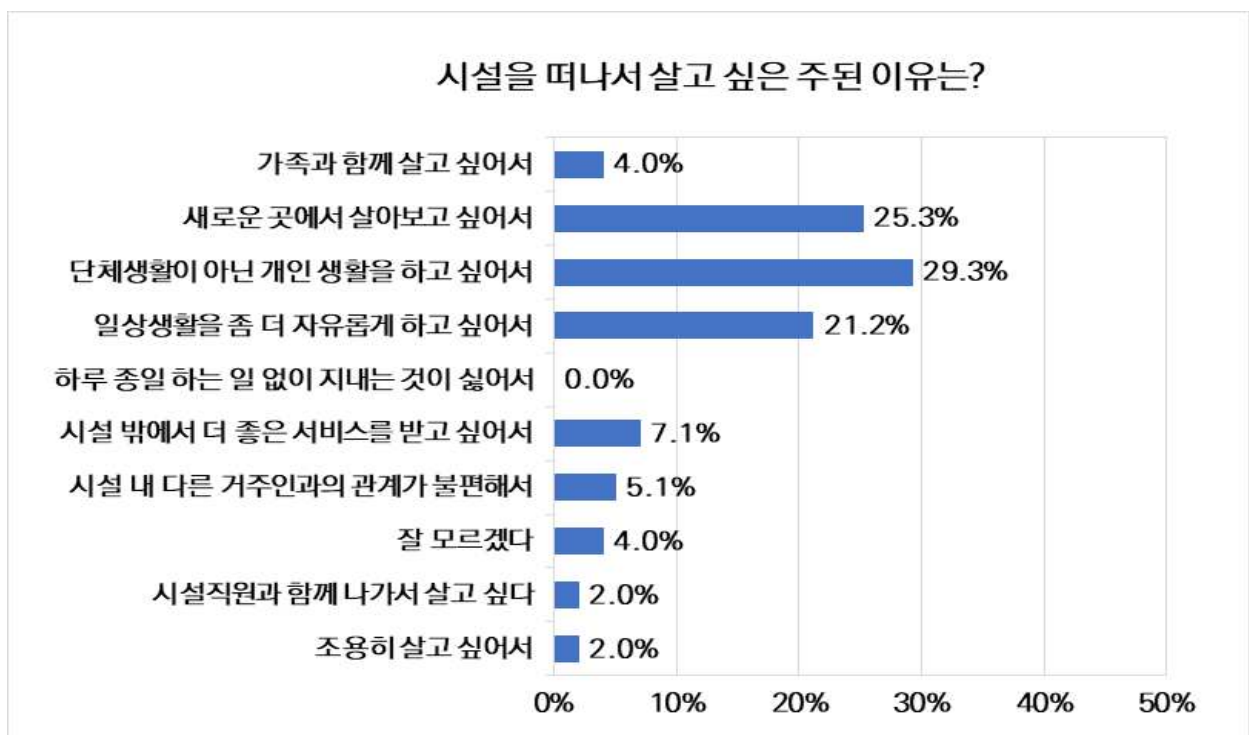
### ㄱ)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주된 이유로는 개인 생활을 하고 싶다(29.3%) >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25.3%) > 자유로운 일상생활(21.2%)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 내에서 지내는 생활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5]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표)	퍼센트(%)
합계	99	100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4	4.0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25	25.3
단체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9	29.3
일상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21	21.2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싫어서	0	0.0
시설 밖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7	7.1
시설 내 다른 거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5	5.1
잘 모르겠다	4	4.0
시설직원과 함께 나가서 살고 싶다	2	2.0
조용히 살고 싶어서	2	2.0



[그림 4-29]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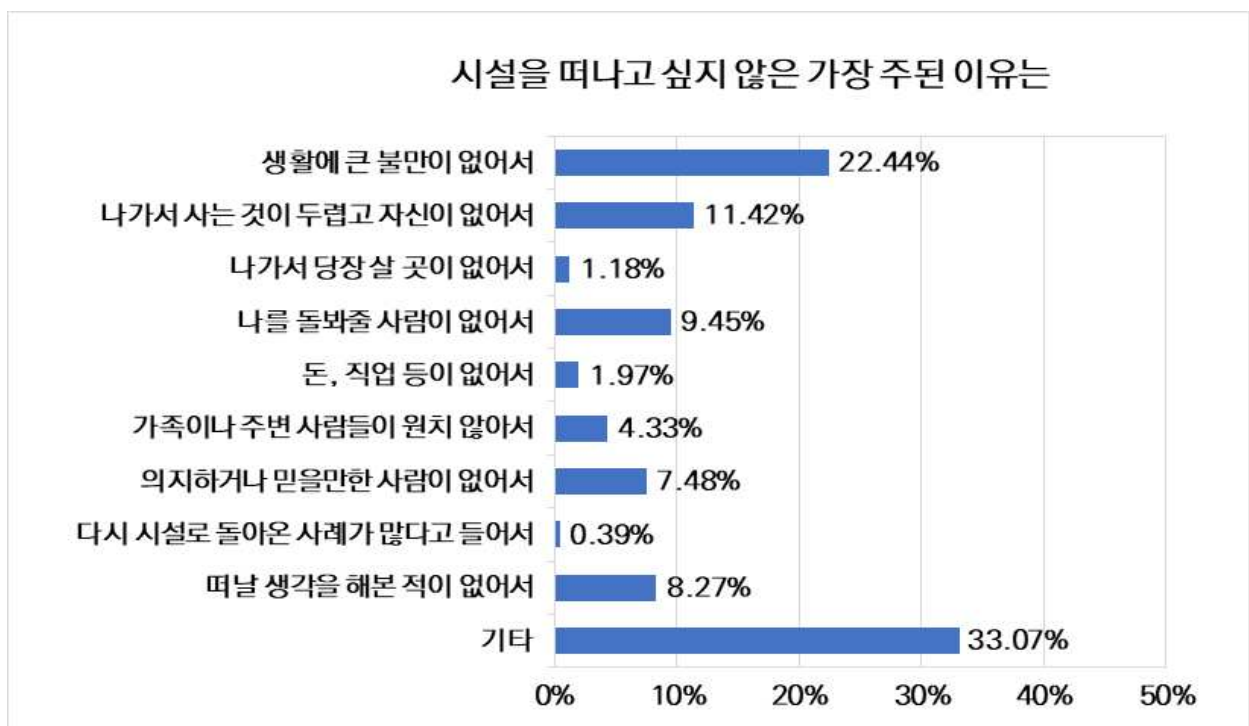
### o)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생활에 큰 불만이 없다(22.4%) >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다(11.4%) >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8.3%)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거주시설 생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시설에 살고 싶은 것으로 판단됨.

[표 4-36]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표)	퍼센트(%)
합계	254	100
생활에 큰 불만이 없어서	57	22.4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29	11.4
나가서 당장 살 곳이 없어서	3	1.2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4	9.4
돈, 직업 등이 없어서	5	2.0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11	4.3
의지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19	7.5
다시 시설로 돌아온 사례가 많다고 들어서	1	0.4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21	8.3
기타	84	33.1



[그림 4-30]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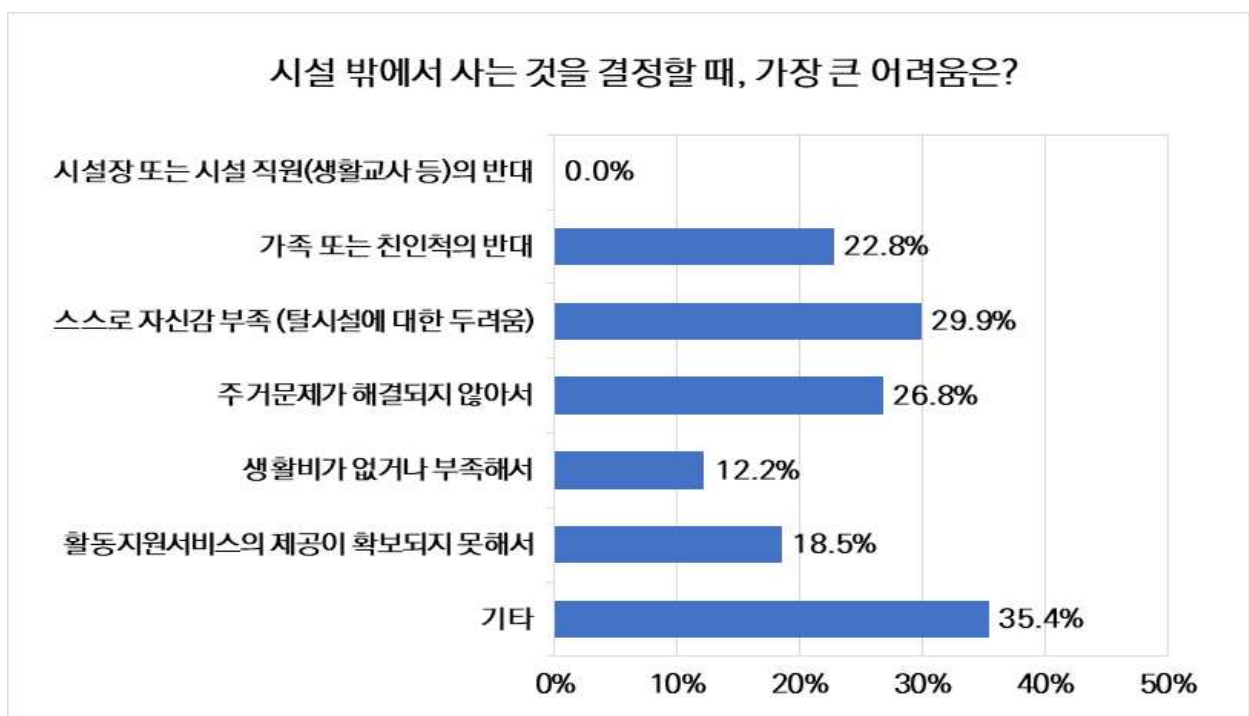
## ㄷ)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 시설 밖에서 사는 걸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 부족(29.9%) > 주거 문제(26.8%) > 가족 또는 친인척의 반대(22.8%)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거주지 문제가 큰 문제로 보이고, 주변 사람의 반대는 주거 문제나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7]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표)	퍼센트(%)
합계	370	100
시설장 또는 시설 직원(생활 교사 등)의 반대	0	0.0%
가족 또는 친인척의 반대	58	22.8%
스스로 자신감 부족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	76	29.9%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68	26.8%
생활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31	12.2%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지 못해서	47	18.5%
기타	90	35.4%



[그림 4-31]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 ㄷ)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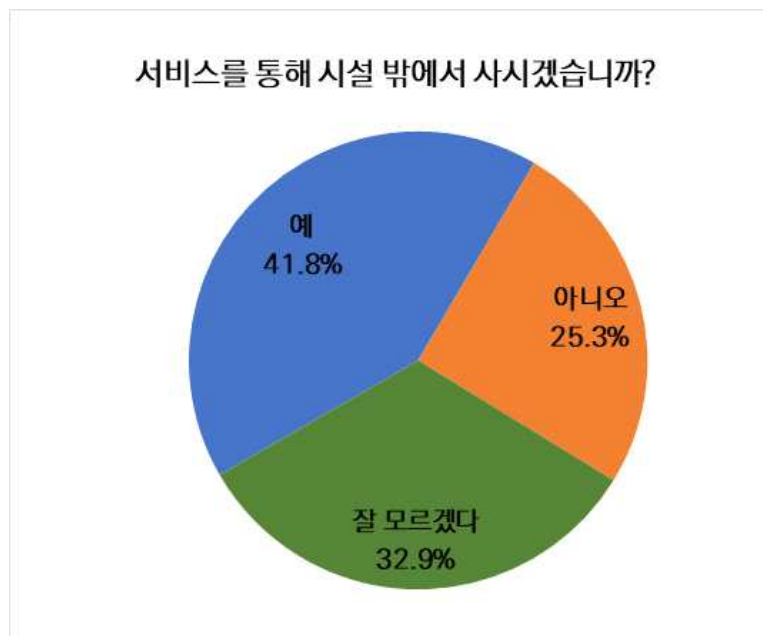
○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사시겠습니까?

- 시설을 나와 살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시설 밖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들은 41.8%로 조사됨.

. 시설을 나와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탈시설화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8]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225	100
예	94	41.8
아니오	57	25.3
잘 모르겠다	74	32.9



[그림 4-32]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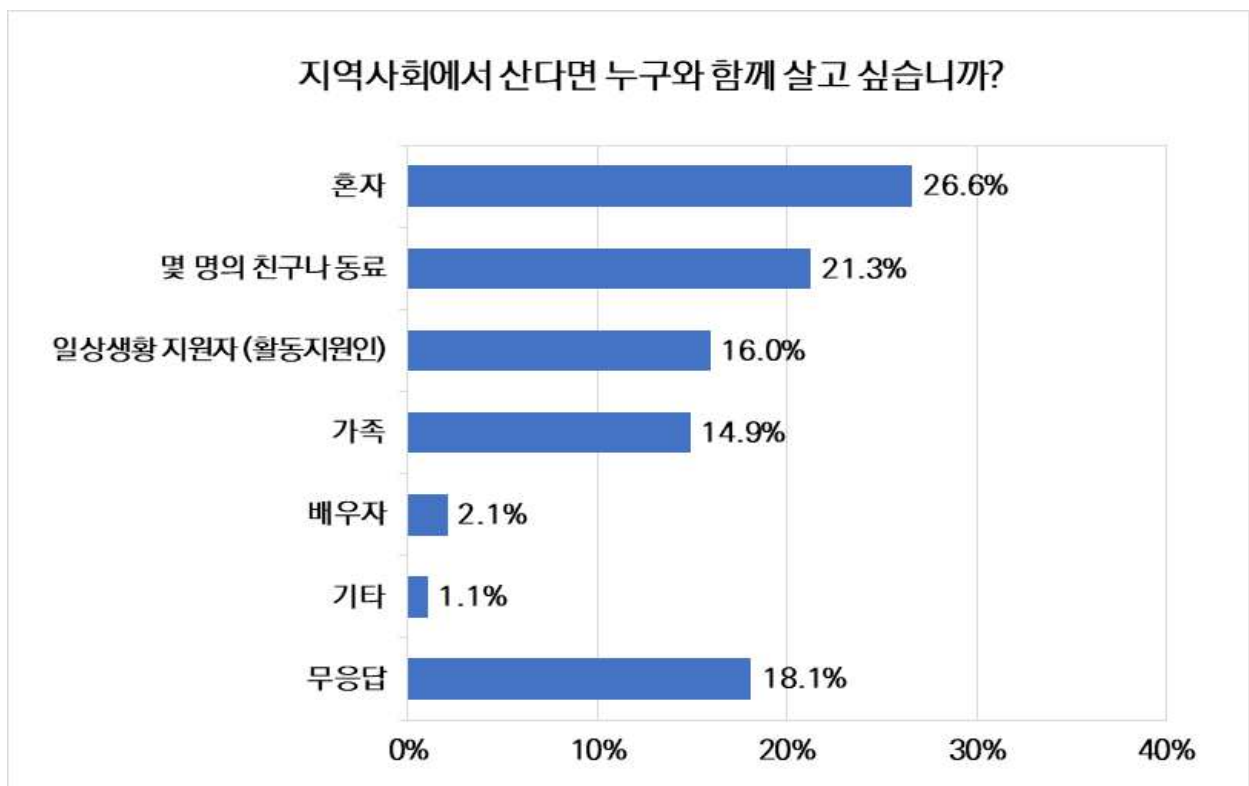
### ㄱ)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산다면 혼자(26.6%) > 친구나 동료(21.3%) > 활동지원인(16.0%)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시설을 나와서 살고 싶지만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9]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94	100
혼자	25	26.6
몇 명의 친구나 동료	20	21.3
일상생활 지원자 (활동지원인)	15	16.0
가족	14	14.9
배우자	2	2.1
기타	1	1.1
무응답	17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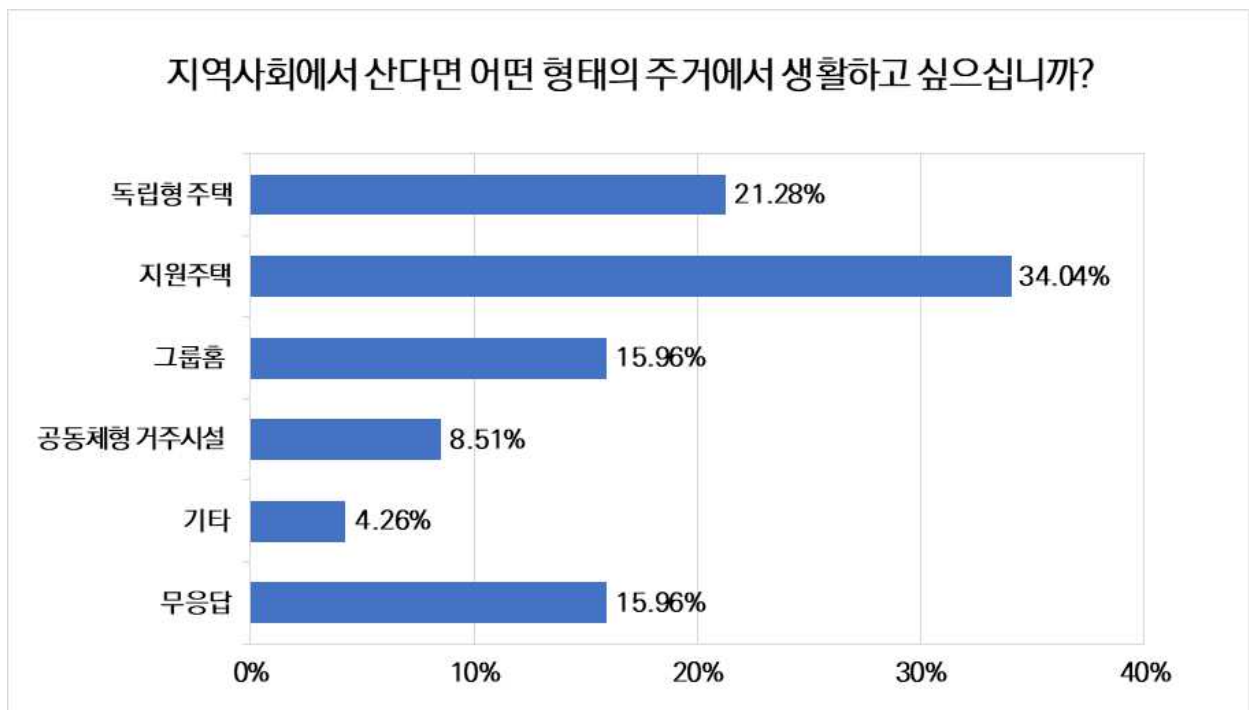
[그림 4-33]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 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 시설 밖에서 살고 싶은 주거 형태는 지원주택(34.0%) > 독립형 주택(21.2%) > 그룹홈(16.0%) 순으로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의 생활을 하고 싶어서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40]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	퍼센트(%)
합계	94	100
독립형 주택	20	21.3
지원주택	32	34.0
그룹홈	15	16.0
공동체형 거주시설	8	8.5
기타	4	4.3
무응답	15	16.0



[그림 4-34]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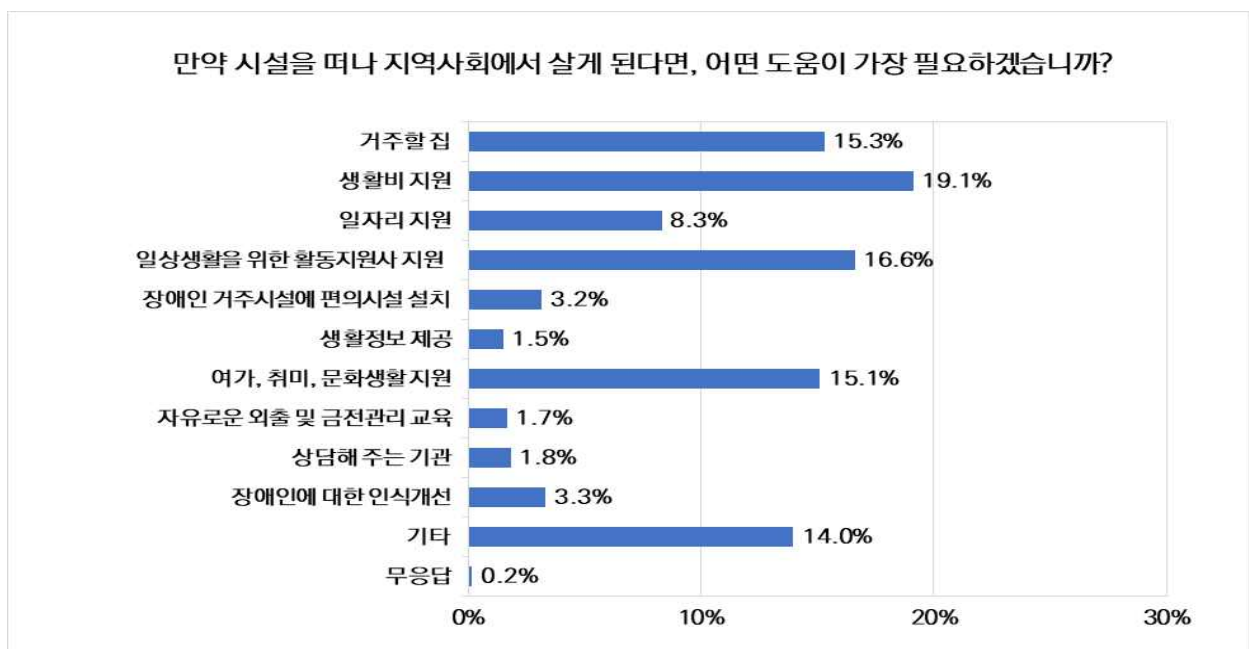
## ㉔)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 시설 밖에서 살 때 필요한 도움으로 생활비 지원(19.1%) > 활동지원사 지원(16.6%) > 거주할 집(15.3%) > 여가, 취미, 문화생활 지원(15.1%)의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
-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탈시설 생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표 4-41]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표)	퍼센트(%)
합계	602	100
거주할 집	92	15.3
생활비 지원	115	19.1
일자리 지원	50	8.3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사 지원	100	16.6
장애인 거주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19	3.2
생활정보 제공	9	1.5
여가, 취미, 문화생활 지원	91	15.1
자유로운 외출 및 금전관리 교육	10	1.7
상담해 주는 기관	11	1.8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0	3.3
기타	84	14.0
무응답	1	0.2



[그림 4-35]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 마) 비장애인 응답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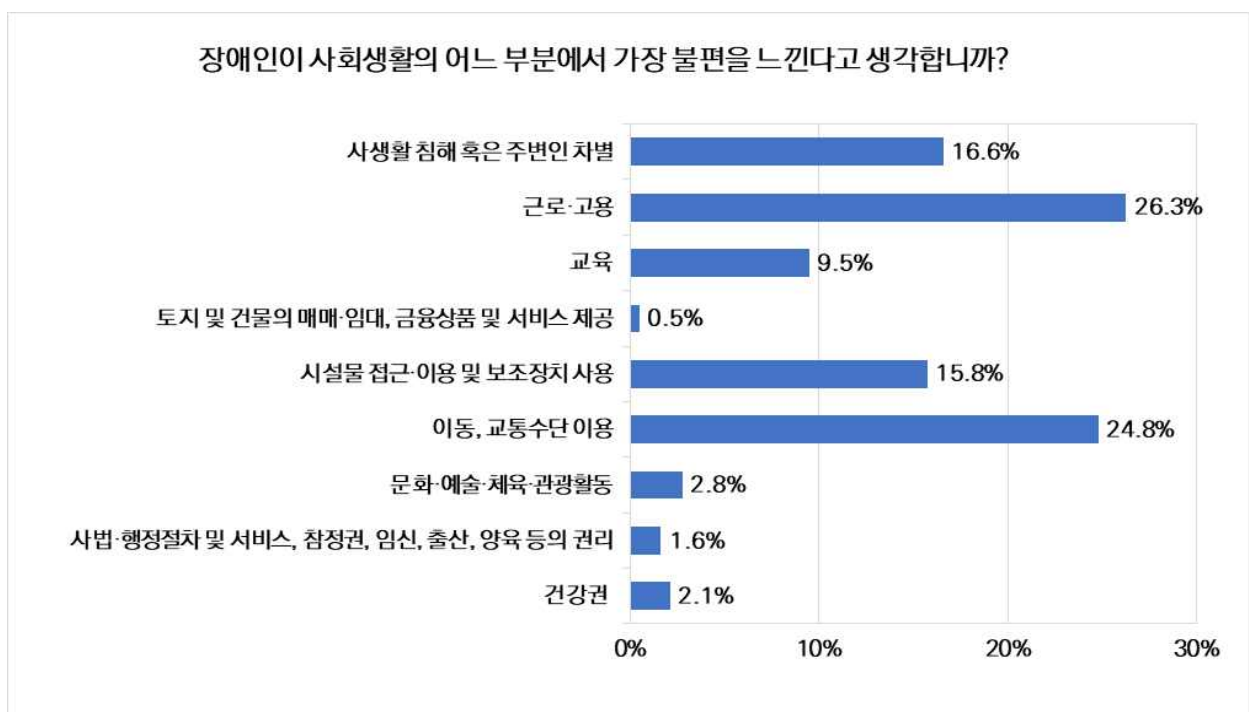
### ㄱ)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근로·고용(26.3%) > 이동, 교통수단 이용(24.8%) > 사생활 침해 혹은 주변인 차별(16.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 고용이나 사생활 침해가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부리가 깊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

[표 4-42]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구분	비장애인	
	빈도(표)	퍼센트(%)
합계	609	100
사생활 침해 혹은 주변인 차별	101	16.6
근로·고용	160	26.3
교육	58	9.5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3	0.5
시설물 접근·이용 및 보조장치 사용	96	15.8
이동, 교통수단 이용	151	24.8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	17	2.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	10	1.6
건강권	13	2.1



[그림 4-36]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 바)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응답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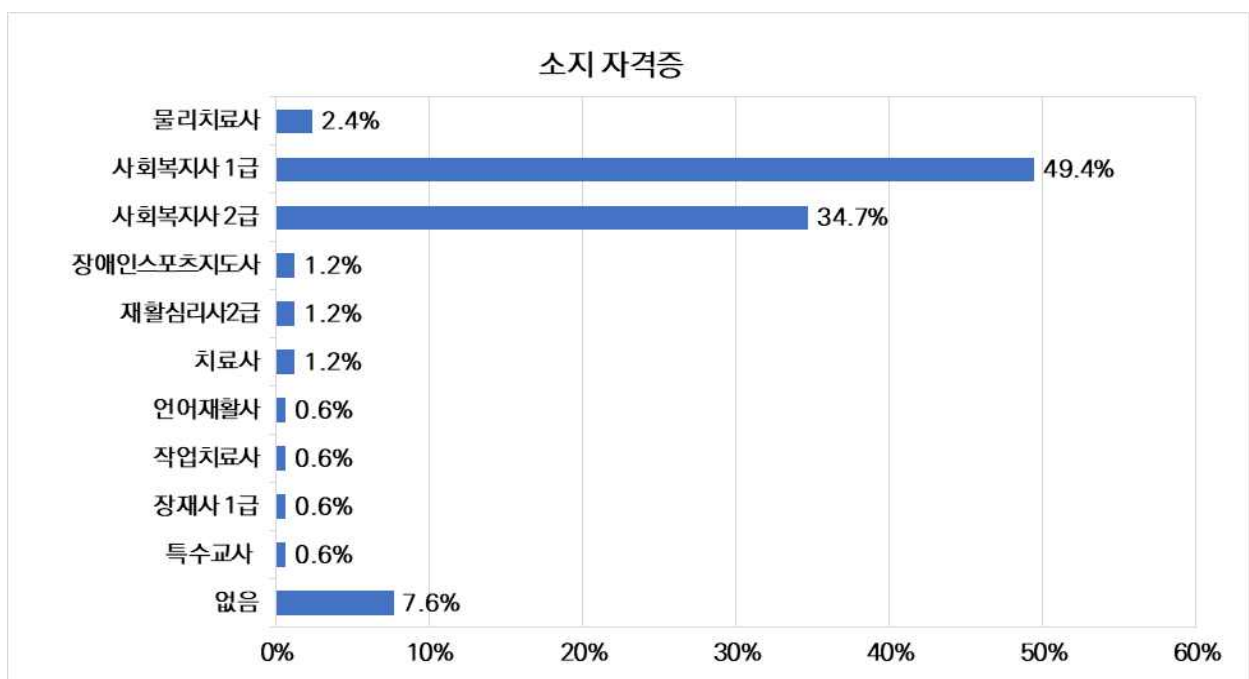
### ㄱ) 설문 응답자 사항

#### ○ 소지 자격증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이 소지한 관련 자격증으로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49.4%) 또는 2급(34.7%)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됨.

[표 4-43] 소지 자격증

구분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70	100
물리치료사	4	2.4
사회복지사 1급	84	49.4
사회복지사 2급	59	34.7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1.2
재활심리사 2급	2	1.2
치료사	2	1.2
언어재활사	1	0.6
작업치료사	1	0.6
장재사 1급	1	0.6
특수교사	1	0.6
없음	1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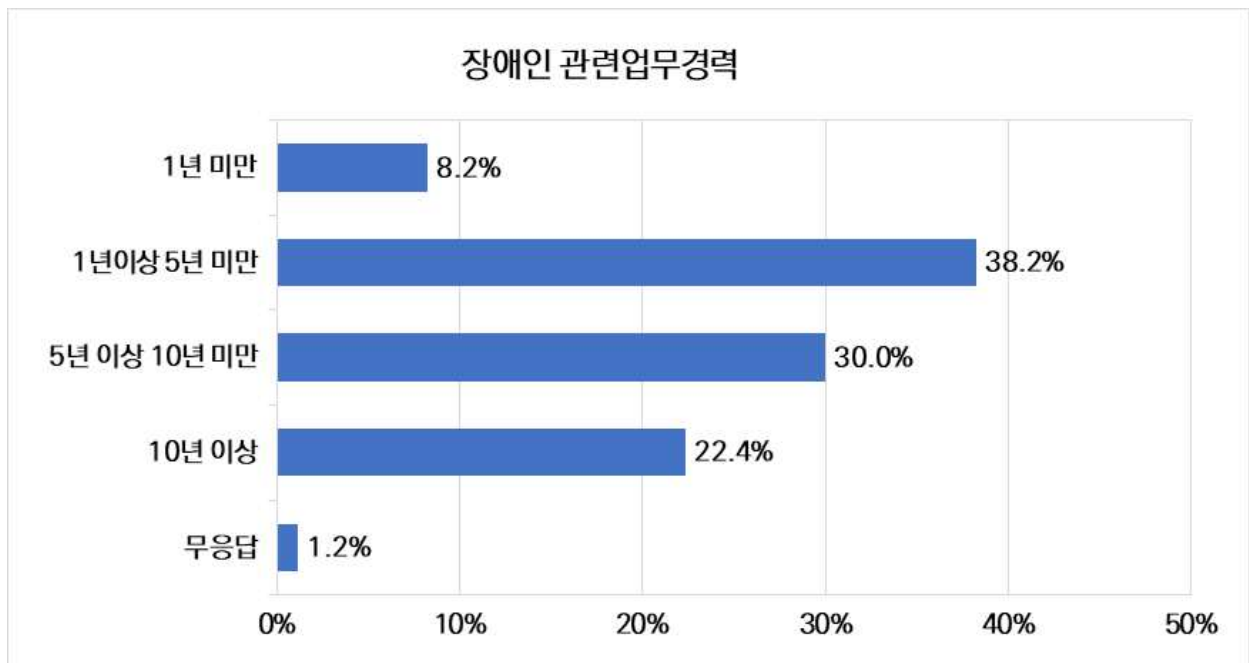
[그림 4-37] 소지 자격증

## ○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38.2%) > 5년 이상 10년 미만(30.0%) > 10년 이상(22.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가 50% 넘게 응답함.

[표 4-44]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구분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70	100
1년 미만	14	8.2
1년 이상 5년 미만	65	38.2
5년 이상 10년 미만	51	30.0
10년 이상	38	22.4
무응답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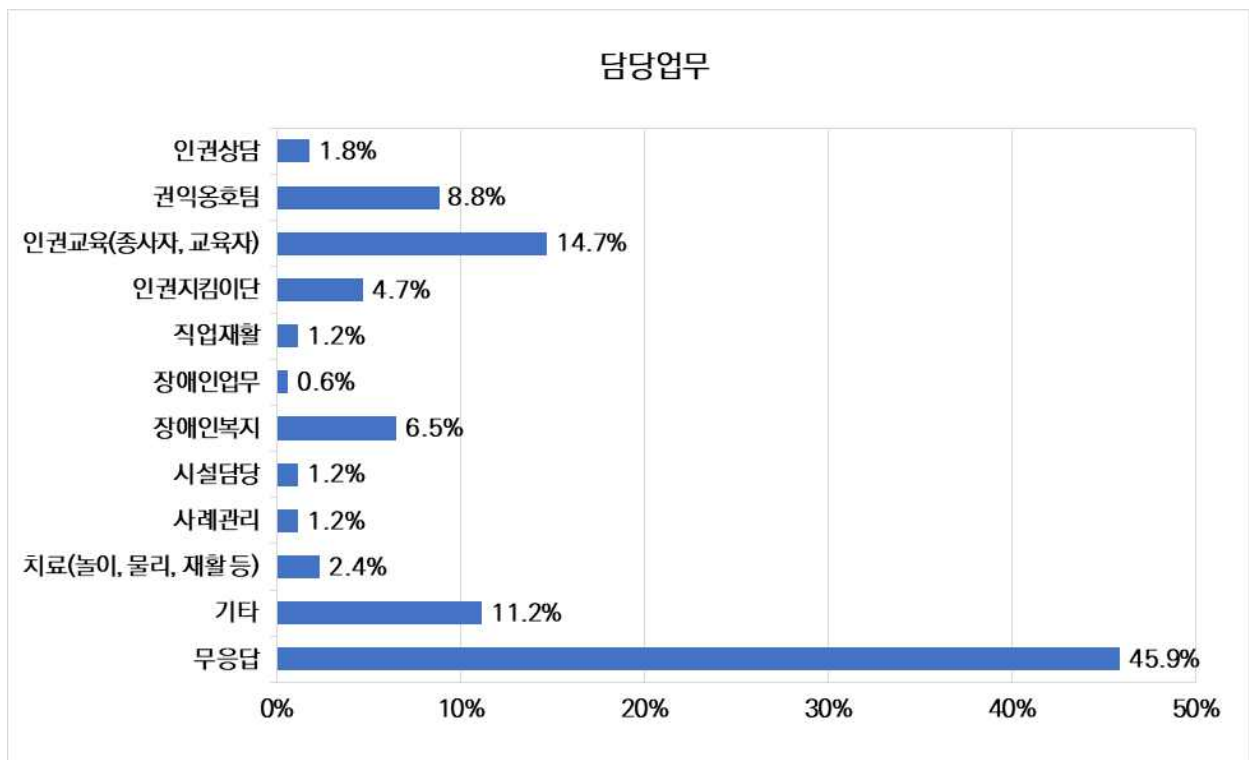
[그림 4-38]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 담당업무

- 응답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인권교육(14.7%) > 기타(11.2%) > 권익옹호팀(8.8%) > 장애인복지(6.5%) 순으로 나타남.

[표 4-45]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구분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70	100
치료(놀이, 물리, 재활 등)	4	2.4
사례관리	2	1.2
시설 담당	2	1.2
장애인복지	11	6.5
장애인업무	1	0.6
직업재활	2	1.2
인권지킴이단	8	4.7
인권교육(종사자, 교육자)	25	14.7
권익옹호팀	15	8.8
인권상담	3	1.8
기타	19	11.2
무응답	78	45.9



[그림 4-39]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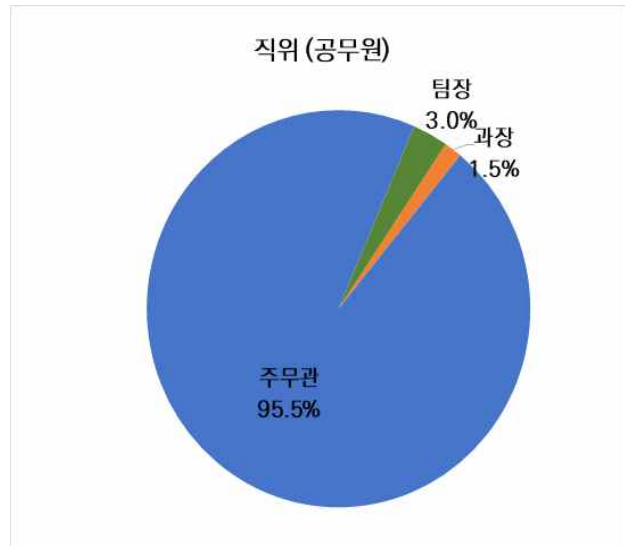


## ○ 직위

- 시설 종사자의 직위는 일반사회복지사(47.6%) > 팀장(29.1%) > 주임(15.5%) 순임.
- 공무원의 직위는 주무관(95.5%) > 팀장(3.0%) > 과장(1.5%)으로 나타남.

[표 4-46]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구분	시설종사자		구분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합계	67	100
관장/시설장	31	1.0	과장	1	1.5
국장	3	2.9	주무관	64	95.5
부장	2	2.0	팀장	2	3.0
일반사회복지사	49	47.5			
주임	16	15.5			
팀장	30	29.1			
무응답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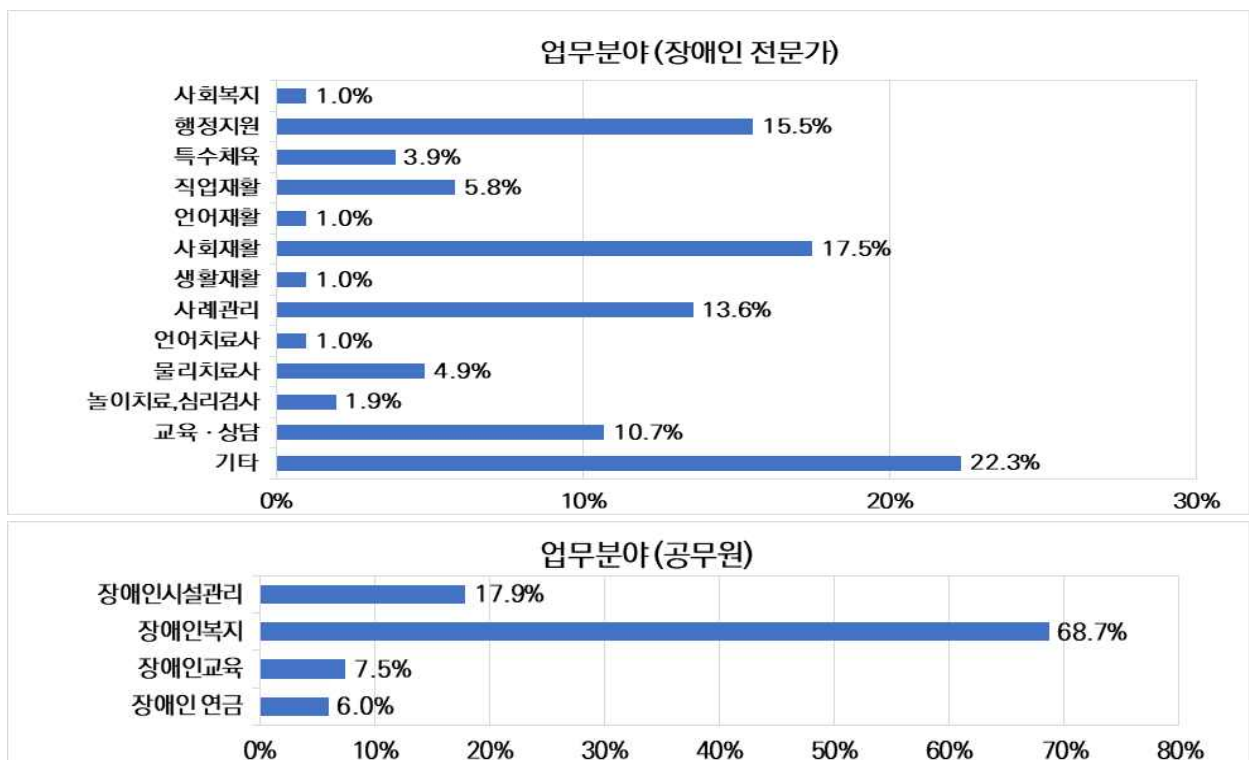
[그림 4-40]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업무 분야

- 장애인 전문가의 사회 재활(17.5%) > 사례관리(13.6%) > 교육·상담(10.7%) 순임.
- 공무원은 장애인복지(68.7%) > 장애인 시설관리(17.9%) > 장애인 교육(7.5%) > 장애인연금(6.0%) 순임.

[표 4-47]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구분	공무원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합계	67	100
교육·상담	11	10.7	장애인연금	4	6.0
놀이치료, 심리검사	2	1.9	장애인 교육	5	7.5
물리치료사	5	4.9	장애인복지	46	68.7
언어치료사	1	1.0	장애인시설관리	12	17.9
사례관리	14	13.6			
생활 재활	1	1.0			
사회 재활	18	17.5			
언어 재활	1	1.0			
직업재활	6	5.8			
특수체육	4	3.9			
행정지원	16	15.5			
사회복지	1	1.0			
기타	23	22.3			



[그림 4-4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 사) 장애인 전문가(시설종사자) 대상 질문

### ㄱ)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및 교육 빈도

#### ○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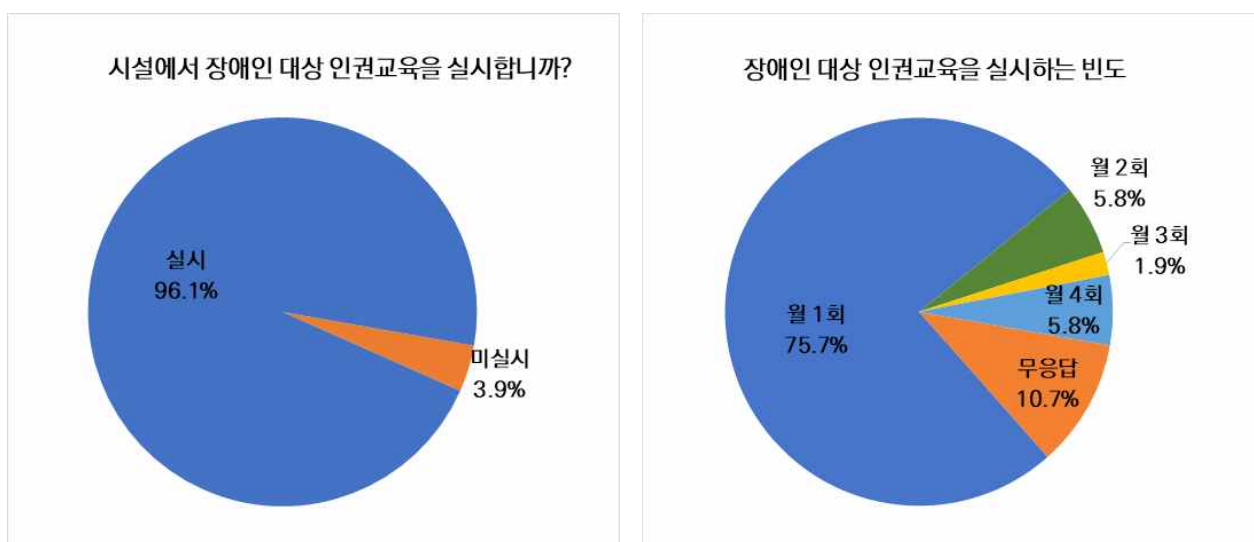
-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시설은 96.1%이며, 인권교육 시행 빈도는 월 1회(7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실시	99	96.1
미실시	4	3.9

[표 4-49]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빈도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월 1회	78	75.7
월 2회	6	5.8
월 3회	2	1.9
월 4회	6	5.8
무응답	11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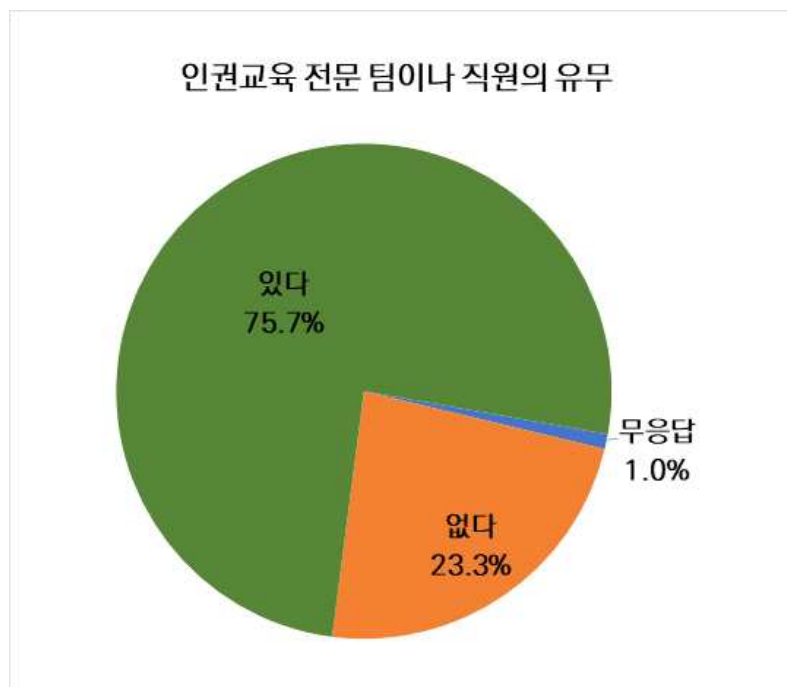
[그림 4-42]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빈도

○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담팀/직원 여부

-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담팀이나 직원이 있는 시설은 75.7%, 없는 시설은 23.3%로 나타남.
- . 일부 시설에서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 판단되지만, 전문 인권교육 종사자는 필요함.

[표 4-50]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있다	78	75.7
없다	24	23.3
무응답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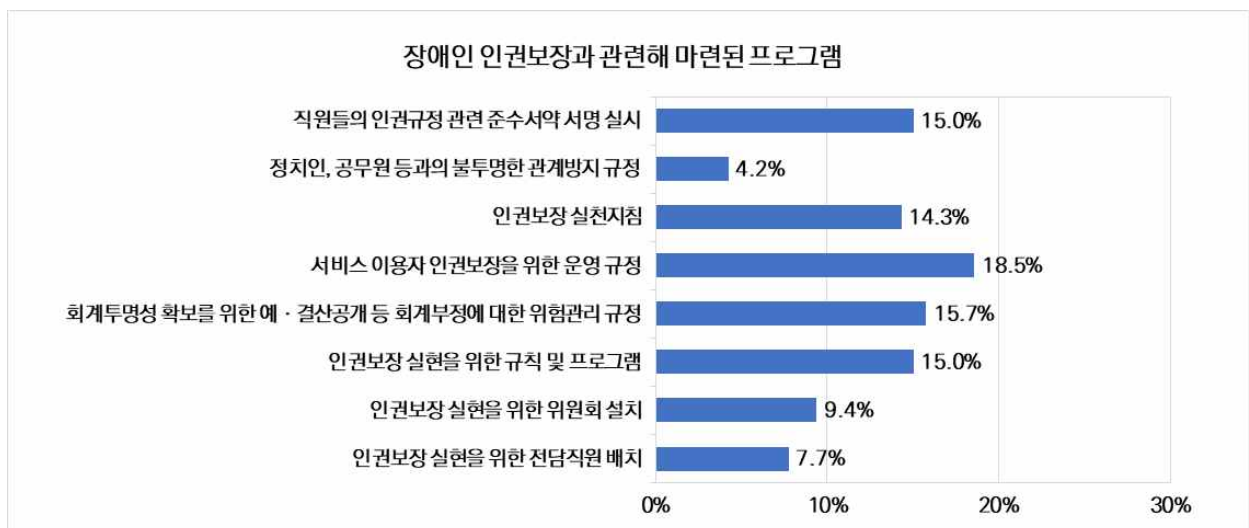
[그림 4-43]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 ㄴ)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 응답자가 종사하는 시설에 갖추어진 모든 절차를 표시함.
-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 규정(18.5%) >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 공개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위험관리 규정(15.7%) >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규칙 및 프로그램(15.0%) > 인권보장 실천지침(14.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정 항목이 두드러지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설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표 4-51]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표)	퍼센트(%)
합계	426	100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33	7.7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위원회 설치	40	9.4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규칙 및 프로그램	64	15.0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 공개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위험관리 규정	67	15.7
서비스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 규정	79	18.5
인권보장 실천지침	61	14.3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불투명한 관계 방지 규정	18	4.2
직원들의 인권 규정 관련 준수 서약 서명 실시	64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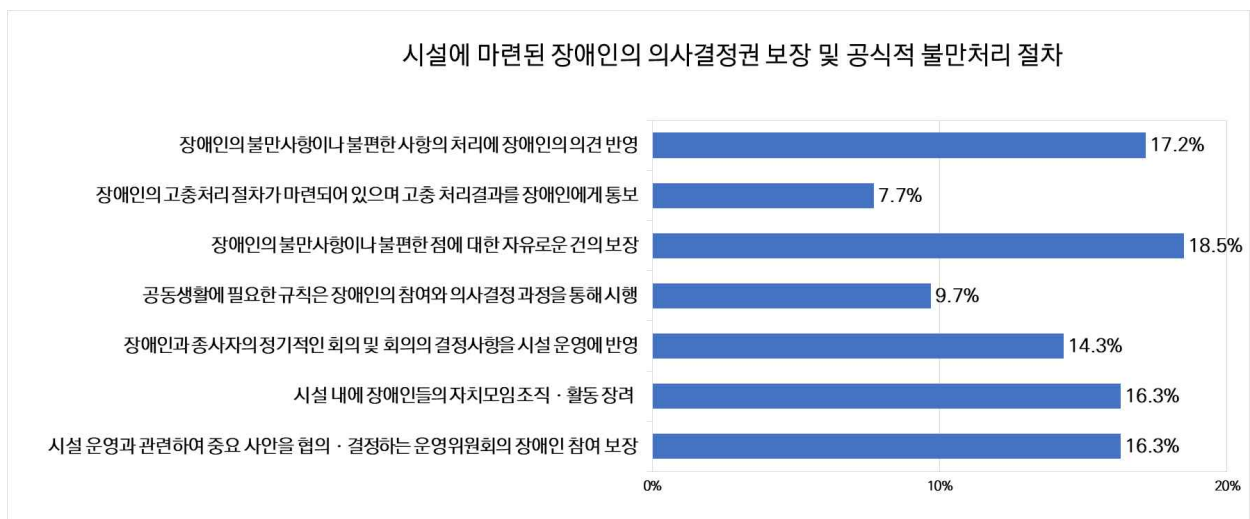
[그림 4-44]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 ㄷ)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 응답자가 종사하는 시설에 갖추어진 모든 절차를 표시함.
-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로는 ‘장애인의 불만 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보장’(18.5%)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참여 보장’ 또는 ‘시설 내에 장애인들의 자치 모임 조직·활동 장려’(16.3%) > ‘장애인과 종사자의 정기적인 회의 및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시설 운영에 반영’(14.3%)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시설은 해당 시설에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표 4-52]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표)	퍼센트(%)
합계	454	100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참여 보장	74	16.3
시설 내에 장애인들의 자치 모임 조직·활동 장려	74	16.3
장애인과 종사자의 정기적인 회의 및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시설 운영에 반영	65	14.3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은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행	44	9.7
장애인의 불만 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보장	84	18.5
장애인의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충 처리결과를 장애인에게 통보	35	7.7
장애인의 불만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의 처리에 장애인의 의견 반영	78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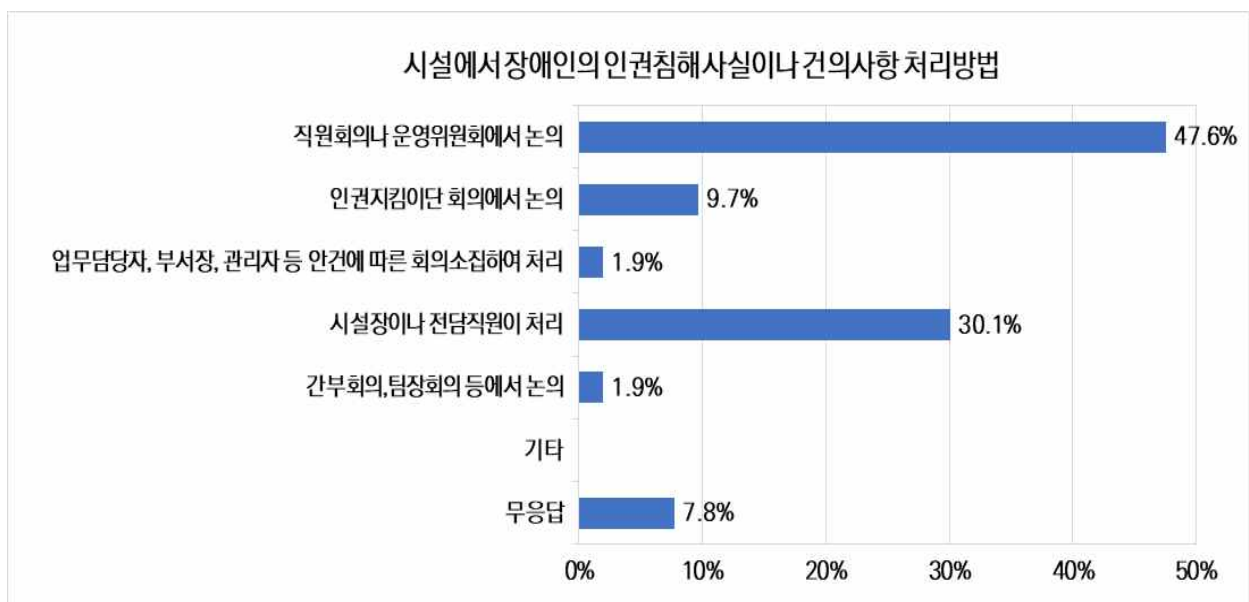
[그림 4-45]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 ㄹ)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 응답자가 종사하는 시설에 갖추어진 모든 절차를 표시함.
-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로 직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47.6%) > 시설장이나 전담 직원이 처리(30.1%) >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논의(9.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앞의 인권보장 프로그램이나 불만 처리 절차와 비교해보면 시설의 적합한 다양한 처리법을 보여준 것과는 상반되게 건의 사항은 대부분 시설이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주요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라 판단됨.

[표 4-53]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구분	장애인 전문가 (시설종사자)	
	빈도(명)	퍼센트(%)
합계	103	100
간부회의, 팀장 회의 등에서 논의	2	1.9
시설장이나 전담 직원이 처리	31	30.1
업무담당자, 부서장, 관리자 등 안전에 따른 회의 소집하여 처리	2	1.9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논의	10	9.7
직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49	47.6
기타	1	1.0
무응답	8	7.8



[그림 4-46]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 아) IPA 분석

-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중요성(중요한 정도)과 시급성(우선순위)을 통해 분석함.
- 고용기회 확대 및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분야에서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높게 응답하였음.
-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는 시설거주 장애인은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재가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모든 응답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서는 비장애인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남.
- IPA 분석 결과 인천시 장애인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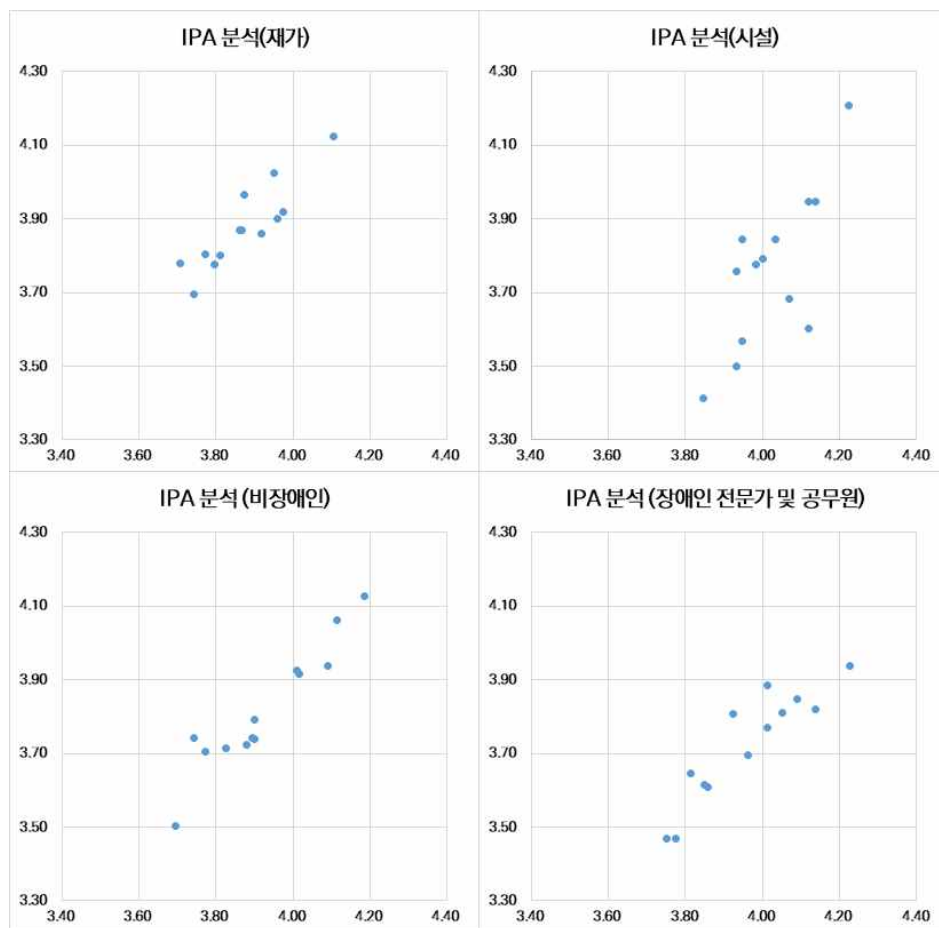
[표 4-54]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1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거주 장애인	
	중요성	시급성	중요성	시급성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3.86	3.87	3.93	3.50
2. 고용기회 확대	3.98	3.92	3.95	3.84
3. 교육권 강화	3.87	3.87	3.95	3.57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3.92	3.86	4.00	3.79
5. 정보 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3.81	3.80	3.93	3.76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3.74	3.70	4.12	3.60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3.77	3.80	4.07	3.68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3.71	3.78	3.84	3.41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3.80	3.78	3.98	3.78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3.96	3.90	4.14	3.95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3.95	4.03	4.12	3.95
12.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	3.87	3.97	4.03	3.84
13. 학대 예방	4.11	4.12	4.22	4.21



[표 4-55]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2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중요성	시급성	중요성	시급성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3.88	3.72	3.78	3.47
2. 고용기회 확대	3.90	3.79	4.01	3.89
3. 교육권 강화	3.90	3.74	3.96	3.70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4.09	3.94	4.14	3.82
5. 정보 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3.90	3.74	4.05	3.81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3.74	3.74	3.85	3.62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3.70	3.50	3.75	3.47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3.83	3.71	3.81	3.65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3.77	3.71	3.86	3.61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4.02	3.92	4.01	3.77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4.12	4.06	4.09	3.85
12.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	4.01	3.93	3.92	3.81
13. 학대 예방	4.19	4.13	4.23	3.94



[그림 4-47] IPA 분석 (인권 수준 향상정책)

## 자) 건의 사항

- 설문 응답에서 일부 응답자의 건의 사항을 작성함.

## ㄱ) 재가장애인

- 사회에서의 박대, 차별, 욕설, 비하 발언, 배려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안 지켜짐.
- 인천시립복지관(인천시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낙후되어서 주위 시선이 더 안 좋은 느낌이 듭.
- 보호자 없는 탈시설화보다는 개방되고 더 좋은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 돌봄 시설, 인원 및 지원이 부족함.
- 직장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도록 체계가 필요함.
- 휠체어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함.
- 실비가 안되어서 의료비가 비쌘.
- 교육을 통한 장애인 관련 교육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체험, 근로 등이 매우 필요함.
- 장애인 모임 활성화,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환경 또는 제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 또는 복지혜택 강화가 필요함.
- 동네에서 자유가 부족하고, 사회 일원으로 행복하게 더불어 살고 싶음.
- 장애인들의 안정된 정서가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애롭게 대하셨으면 좋겠음.
-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세요, 의사소통이 부족함.
-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ㄴ) 시설거주 장애인

- 시설 내에서 자립 있는 삶, 프로그램, 환경 등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싶음.
-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홍보가 부족함.
- 중증장애인이랑 무연고자들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길 원함.

## ㄷ) 비장애인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함.
- 처벌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잘 지켜지지 않음,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인식개선을 위한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체험시설).
-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제도 확대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
- 탈시설화 추진은 사회적 인프라 및 공공기관의 재정, 관련 인프라가 중요함.
- 장애인 고용 시 작업환경 개선, 장애 정도 파악, 근로환경을 시에서 정해야 함.
- 독립생활을 위해 취업, 주거, 이동권 보장해야 함.
- 인력 확충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저상버스 수리 및 확충, 장애인전용 주차장 단속 강화, 도로 정비가 필요함.
- 부모가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는 돌봐줄 시설이 필요함.
-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 또는 인격을 존중해줘야 함.
- 장애인은 주거환경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명예를 보장해야 함.
- 장애인 학교 또는 재활 시설 확충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필요함.

## ㄹ)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무조건적 장애인 배려는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느낄 수 있음.
- 실제로 만나고 행동하며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교육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편의 개선(이동권, 교통), 사각지대 해소, 낡은 시설개선이 필요함.
- 무조건적 탈시설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선택을 존중하고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정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함
-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이 필요함.
- 법과 제도, 인권교육, 배려, 이해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 ㄴ) 워드 클라우드

### ○ 재가장애인

- 장애인, 부족, 지원, 시설, 교육, 도움, 의사소통, 자립 지원 의료비, 욕설, 자유, 비하 발언, 중증장애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4-48] 재가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 시설장애인

- 프로그램, 홍보, 환경, 자립, 완전, 보장, 지원, 인식개선, 무연고자 등의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4-49] 시설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비장애인

- 인력, 강화, 이동권, 확충, 체험시설, 장애인고용, 독립생활, 교육 실천, 홍보, 돌보기, 작업환경 등의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4-50] 비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 사각지대 해소, 역량, 배려, 차별, 정신 장애인, 인권교육, 시설개선 등의 키워드가 나타남.



[그림 4-5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 (2) 설문 결과 시사점

### 가) 일반사항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 5단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과 '전혀 관계없음' 비장애인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이 적은 것이라 판단되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

#### ○ 인천광역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 5단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응답군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재가 장애인은 '보통'이 38.3%, 시설 거주 장애인은 '보통'이 52.9%, 비장애인은 '높은 편'이 45.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높은 편'이 55.9%로 확인되고, 모든 응답군에서 '보통' 이상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을 확인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를 통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가 필요

#### ○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의 대처법

- '항의'한다는 응답이 재가 장애인이 45.3%, 시설 거주 장애인이 28.9%, 비장애인이 24.2% 응답한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가 68.2%로 많은 차이가 발생
-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거나 신고해도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및 보상을 받지 못해서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가시적인 처벌 강화 및 학대 신고를 장애인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의 개선 및 홍보가 필요

#### ○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는 곳으로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복지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근무처 또는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이지만, 비장애인은 '정부 및 관공서'가 54.7%, '학교'가 25.2%로 앞선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교육이 도움 정도는 응답군별로 재가 장애인이 '보통'이 26.4%, 시설 거주 장애인은 '매우 도움됨'이 32.0%, 비장애인은 '보통'이 40.2%,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약간 도움됨'이 43.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관공서나 학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이 비장애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자료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중요



## ○ 효과적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 재가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모두 ‘매스미디어’를 1순위, ‘학교 교육과정’을 2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인지도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보통’이 35.3%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재가 장애인은 ‘거의 모름’ 39.3%,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전혀 모름’ 39.6%, 비장애인은 ‘거의 모름’이 32.9%로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조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자료가 필요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관한 생각은 재가 장애인은 ‘조금 차이가 있다’가 38.9%, 비장애인 ‘조금 차이가 있다’가 60.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조금 차이가 있다’가 38.8% 가장 높음
- 재가 장애인은 ‘많은 차이가 있다’가 35.6%,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36.5%로 두 응답군에서 1순위와 2순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의 정도’가 달라서 발생한 분포로 판단

## 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 의료서비스,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 학대 예방,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 확대가 필요
- 성별로 나눠 보면 재가 장애인은 근로·고용권 분야에서 남녀의 차별이 가장 심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주변인 차별, 근로·고용권,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체육·관광 활동 등에서 여성의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
- 연령대별 재가 장애인은 다음과 같음
  - 10대 장애인들이 주변인 차별, 시설물 접근·이용, 보조장치 사용, 이동·교통수단, 건강권, 장애아동, 정신 장애인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으나, 20대 장애인은 정서적 학대, 체육·관광 활동으로 받는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30대 장애인들은 근로·고용권에서 차별이 많으며, 40대 장애인들은 정보에의 접근 분야에서 차별이 많다고 응답
  - 반면 50대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과 이동·교통수단에서 차별받는다고 응답이 높으며, 60대 장애인들은 이동·교통수단 분야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

○ 연령대별로 시설 거주 장애인은 다음과 같음

- 10대는 정서적 학대,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정보에의 접근, 체육·관광 활동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며, 20대는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체육·관광 활동의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
- 30대는 이동·교통수단, 정보에의 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관광 활동 분야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며, 40대 이상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는다고 응답
- 50대는 경제적 착취, 참정권, 건강권, 장애아동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60대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

○ 연령대와 무관하게 이동·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

다) 중증장애인 탈사회화

○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탈시설이 중요한 이유로 ‘지역사회 통합’을 응답

- 재가 장애인은 42.4%, 비장애인은 41.5%, 장애인 전문가는 75.0%로 응답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중요하게 생각

○ 시설 거주 장애인의 84.0%는 탈시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하고,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76.7%)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확인

○ 시설 거주 장애인 중에서 시설 밖에서 거주한 경험은 12.4%로 매우 낮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가 28.6%, ‘가족과 살고 싶다’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다른 이유로 ‘개인 생활’, ‘일상생활의 자유’라고 응답
- 시설로 돌아온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가 60.7%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 14.3%, ‘시설의 생활이 익숙함’이 10.7%인 것으로 볼 때,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서 시설로 돌아오는 것이라 판단
- 탈시설을 경험한 이유로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로 다시 돌아온 주된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것으로 보아 탈시설을 했을 때 장애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갖추고 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
- 탈시설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자신감 부족’이 29.9%, ‘주거 문제’가 26.8%, ‘가족의 반대’가 22.8%로 볼 때, 경험하지 못한 생활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두려움과 시설밖에서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 지역사회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설을 떠나고 싶은 장애인은 37.8%, 떠나고 싶지 않은 장애인은 45.3%로 확인
  - 시설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는 ‘개인 생활을 희망’이 29.3%, ‘새로운 곳에서 생활’ 25.3%, ‘일상생활의 자유’가 21.2% 순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시설 생활에 만족’이 22.4%, ‘탈시설 생활의 두려움’이 11.4%, ‘돌봐줄 사람이 없다’가 9.4% 순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탈시설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살겠다’는 장애인은 41.8%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혼자’(26.6%) 또는 ‘동료’(21.3%)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활동지원인과 살고 싶다는 응답이 16.0%로 일부 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로 지원주택이 34.0%, ‘독립형 주택’이 21.3%, ‘그룹홈’이 16.0%로 확인
  - 응답자 성향에 따라 개인 생활을 하고 싶은 장애인, 시설을 나와서 살고 싶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고 싶은 장애인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판단
-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생활비’가 19.1%, ‘활동지원사’ 16.6%, ‘주거 지원’이 15.3%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생활에 앞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라)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75.7%는 최소 월 1회는 시행
  - 장애인 시설의 75.7%는 인권교육 전담팀이 있는 시설이 많으므로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응답해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인식
  - 일부 시설의 장애인은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 판단
-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 규정’ (18.5%),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 공개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위험관리 규정’ (15.7%),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규칙 및 프로그램’ (15.0%), ‘인권보장 실천지침’ (14.3%)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정 프로그램의 응답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설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판단
  -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또는 위원회 설치의 응답이 각각 7.7%와 9.4%로 낮은 것을 보면 해당 분야에 인력배치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

-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로는 ‘장애인의 불만 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보장’ (18.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참여 보장’ 또는 ‘시설 내에 장애인들의 자치 모임 조직·활동 장려’ (16.3%), ‘장애인과 종사자의 정기적인 회의 및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시설 운영에 반영’ (14.3%) 순으로 높음
  - 처리결과를 장애인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불만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로 ‘직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47.6%), ‘시설장이나 전담 직원이 처리’ (30.1%),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논의’ (9.7%) 순으로 나타나는데, 불만 처리 절차나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

#### 마) IPA 분석

- IPA 분석 결과 인천시 장애인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우선 추진
  - 고용기회 확대 및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분야에서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높게 응답
  -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은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재가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중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
  -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모든 응답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
  -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서는 비장애인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2. 전문가 회의의견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을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획수립에 반영할 분야별 요구사항 및 수립된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기 장애인 각 분야의 연구, 기관 운영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인천시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개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윤00 위원
    - . 탈시설화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계성
    - . 설문조사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표현하고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
    - . 장애인 이동권(휠체어와 대중교통, 도로상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 보장((이동과 이용을 동시에 추진) 및 교육 필요
  - 최00 위원
    - . 고립된 장애인 방문 서비스 필요(시민참여 방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로 정신 장애인 처방이 어려움.
    - . 정서적 재가 장애인의 복지가 최악(정신 장애인의 환경이 열악)
    - . 장애 유형별(특히 정신장애), 장애인의 차별을 인식하는 수준은 문제 인식 수준에 따라 다름
    - . 재가 장애인의 정서적 확대는 해석의 여지가 갈릴 수 있어 대안 결정이 어려움.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일하는 분 중에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10년째 근무하는 사람도 있음
  - 김00 위원
    - . 발달장애인 인프라가 열악하니 전담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치매, 발달장애 등, 조례에 예산 규모 반영).
    - . 고령 장애인 문제 해결(65세 이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거주)을 위해 요양원 설치가 필요
    - . 발달장애인 자기 결정권(탈시설화 어려움, 독일은 그룹별 거주)이 필요
    - . 중구 및 연수구에 추가적인 장애인 시설이 필요
  - 이00 위원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 개념 명확화 및 신규사업 발굴 절차 필요
  - 김00 위원
    - . 실효성 있는 계획 필요(인력, 예산, 콘텐츠 부족, 장애 유형, 정도 및 형태 고려)
    -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인 예산확보가 필요

- 조00 위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장00 위원

. 설문 결과에 긍정하지만,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탈시설의 관계에 이질감(탈시설 비중)이 있으므로, 시설장애인의 잠재육구 파악이 필요

. 장애인의 인지능력에 따라 구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 종합

- 설문 대상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나 문제의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느끼는 결과는 다름

-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로 정신 장애인의 처방이 힘들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

- 조례에 지원 서비스 예산 규모 명시, 인구밀도 및 장애 정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

- 장애 관련 교육에 관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 등 보급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 필요

- 휠체어 장애인의 도로 이동에 있어 위험에 많이 노출(차도와 인도 턱을 없애면 사람들이 그 공간을 주차에 사용)되므로 인식개선 및 교육 필요

- 발달장애인과 조기 노화에 대한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탈시설이 가능

- 해외의 경우처럼 탈시설을 설치하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그룹홈 형태의 탈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천시의 경우 탈시설을 설치하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3. 중간 보고 전문가 의견

○ 전문가 의견은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된 분들에게 중간 보고 자료를 발송해 이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주신 내용으로 추후 최종 보고서나 용역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받음.

#### ○ 이00 (A 기관)

- 전체적으로 인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자 관련 지역 실태 파악,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유사 계획 사례조사, 현재 수립된 해당 지역(인천)의 주요 계획 검토, 그리고 계획의 주요 대상자 욕구 및 실태조사 등 일반적인 계획수립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과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
- 다만, 중간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 사항 및 세부적인 오류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과 검토가 필요함.
- .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 분류기준 준수
- .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
- . 재가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시설장애인의 시설유형을 제시 필요하며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지시(인구 사회학적 특성, 표본추출 등)
- .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
- .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경험 정도 표현 수정
- .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에 각 항목의 응답 분포에 결과 해석 필요
- . 기본구상의 비전(안)의 추진전략과 정책목표(안)의 추진전략의 통일성
- . 기존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의 검토 필요
-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도출 근거 제시와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의 명칭 변경
-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활병원 개원이 신규인지 기존사업의 지속적 지원인지 명확화 필요
- . 정보통신 분야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에 대한 주체 명확화
-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정보통신 분야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통합이 필요
- . 장애인 기본소득보장사업은 현재 논의 중인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는 이미 인천시에서 유사 사업('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 '시비 지원 활동 보조사업 바우처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 반영 여부 검토가 필요

○ 김00 (B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선언적 의미의 용어 사용 등으로 추상적 내용보다는 실효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제안을 요청
- 장애인 피해 발생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은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충원이 필요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찰(112)에서 전화, 문자,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신고체계 다양화보다는 학교, 기업 및 관련 시설 등의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 운영 중인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확대뿐만이 아니라 장애아동학대피해 쉼터 신규 설치가 필요함.
- 광역 단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인천의 경우 2018년부터 인천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교육 강사비 지원 등) 지원 반영 필요
- 장애인 정신요양원을 설치해 재가 정신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연차별 각 2개소 개관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



## 4. 장애인 종사자 및 관계자 의견수렴 FGI

### (1) FGI 개요

#### ○ 인터뷰 목적

- 설문조사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담당 공무원,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 인터뷰 대상

- 인천광역시 시민 소통 담당관 시민 인권 담당
-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 : 8개소 (모퉁이 재단,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농아인 협회,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시 장애우 인권연구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실)

#### ○ 인터뷰 일시 : 2022년 10월 13일 ~ 10월 20일

[표 4-56] FGI 일정

방문일시	구분	면담자	비고
2022. 10. 13	장애우 인권연구소	임00	
2022. 10. 18	모퉁이 재단	최00, 박00	
	시민소통담당관실	권00	
2022. 10. 19	농아인협회	이0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00	
2022. 10. 20	지체장애인협회	최00, 유00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노00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00	

#### ○ 인터뷰 방법 : 집단 인터뷰 또는 개별 방문

#### ○ 인터뷰 내용은 크게 아래의 6개의 질문의 응답을 받았고, 인터뷰 대상의 의견을 들어보며 현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관련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군·구 장애인 인권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중장기 계획(2023~2027)의 비전, 목표, 방향성, 추진사업 등 제안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
- 기타 차별금지·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2) 인터뷰 결과

### 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인권담당

#### ○ 담당업무

-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시민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민원을 담당
- 인권 행정(공무원 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모니터링)

#### ○ 인천시 인권정책 현황

- 인권정책 관련 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 행정시행
-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방법 교육(국가안전센터의 온라인교육,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참여식 토론, 유명 인사 초빙 등 오프라인 교육)

#### ○ 민원 사례

- 인천광역시 시청 신관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옴.
- 본래 시청 부속 건물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편의시설이 부족하였음.

#### ○ 장애인복지과의 관계

- 시민소통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의 접점은 현재 없음.
- 현재 개별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시행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기관은 위탁 운영 중,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인천시 행정기관에 인권 침해를 받으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민원을 넣는 것은 가능함.

### 나) 모퉁이 재단

#### ○ 시설 운영

- 인천시 보조금(인건비, 운영비)과 시설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함.
- 현재 종사자는 6명, 시설이용자 24명으로 구성됨.
- 인천시는 시설당 종사자 3명, 최소 이용 인원 10명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상기 기준을 적용하면 직업훈련시설 1개소 확대마다 약 1.5억원의 비용이 필요)

#### ○ 지원요청 사항

- 이용시설의 직업훈련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이용장애인에게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함.
- 장애인 급여(S, A, B등급)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나므로 장애인 기본 소득 (약 50만원) 개념으로 지원 필요함.

## ○ 이용자 수급

- 시설이용자 수급은 자체 광고나 장애인 시설 또는 학교에 연락하여 추천받고 있음.
- 평가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평가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지만, 명시된 기준이 없어서 평가 기준 설정 및 채용을 담당하는 평가센터가 필요함.

## ○ 인천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인천시 권익옹호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군·구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애인 복지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효과적일 것임.

## ○ 기타 의견

- 현재 장애인 등록의 경우 동행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실제 필요한 사항은 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지원단체 및 기관이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찾기는 힘들어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장애인 복지관에 1~2명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장애인 등록증 발급할 때 이들을 위한 제반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다)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 주요 업무

- 장애인 체험 교육, 치료, 평생교육 등을 운영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이용장애인의 학대 의심 시 보호 및 상담을 수행함.
- 주 이용자는 중증장애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임.  
(발달장애인 30%, 지체 장애인 36%, 기타장애인 34%)

## ○ 권익옹호기관과의 비교

- 권익옹호기관은 사법절차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줌.
- 복지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학대 예방사업, 인식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함.

## ○ 복지관 운영

- 복지관 종사자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 너무 많음.
- 종사자가 인권 침해를 받으면 인천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종사자 인권상담을 진행함.
- 종사자 내부 문제는 고충 처리 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함.

## ○ 필요한 복지 사안

- 일원화된 학대 신고체계는 인권상황에 대한 과정이 체계화가 필요함.
-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분리해 보호해 줄 기관이 필요함.
- 재가 장애인의 노인성 질환 및 장애 증상 악화에 대해 관리함.

- 재가 장애인의 이웃에 의한 갈취 및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이웃 만들기’와 ‘관계 맺기’ 등의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필요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통합 환경이 필요함(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과 교류하는 것은 가능함).
- 장애인 인구에 비해 복지관이 적은 것 같음.
- 정신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음.  
(이들은 2주마다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소통조정자, 그림이 들어간 안내판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 구상이 쉽지 않음.

## 라) 인천농아인협회

### ○ 지원요청 사항

- 최근 장애인의 경우 의식주 문제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성 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 증원 필요함.
- 농아 장애인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의 어려움(수어 통역사 채용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함.
- 농아 노인 일자리가 없어 이에 대한 일자리 마련 필요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노인 쉼터 (노인정 등) 조성이 필요하나 이러면 수어 통역사도 필요하므로 운영 방법 모색 필요함.
-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 시 농아들은 청취할 수 없으므로 수화 자막을 동시에 영상으로 제공을 요청함.
-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농아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활용 방안(채용, 파트타임 등)이 필요함.
- 급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사회복지사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으며,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급여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자동 진급 금지(7년) 조항에 따른 진급에 따른 급여 보상도 불가능하여 인천시 사회복지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 인천시 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

- 현재 농아인협회는 인천시 권익옹호기관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함.
- 농아인들을 스스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어 통역사가 필요함.

### ○ 인천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 마)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 ○ 운영현황

- 11개 군·구 지부 운영 중,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을 위탁해 추진 중임.
- 인천시 보조금, 후원금, 기부 물품으로 운영함.

### ○ 요청사항

- 지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이동권 보장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의 경우 수급 관점에서 추가적인 수요는 없으나, 저상버스는 연도별 도입 대수가 확대되어야 함)
- 지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 시 도로 기준 턱 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으며, 저상버스의 연결판의 작동 불량률이 많아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도로 노면 기준 보도 턱 높이 통일이 필요)
- 도로 및 보행로 공사 후 약자 시설의 원상 복구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
- 지체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 침해의 발생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협회는 신고접수는 권익옹호기관으로 중계역할을 수행함.
- 지체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음.

### ○ 인천시 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

- 평상시 교류가 없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시 관내 권익옹호기관을 포함하여 협회 차원의 행사는 없었음.
- 법정 교육은 안전교육원을 통하여 이수하고 있음.

### ○ 기타 의견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에 도로, 항만, 철도 분야가 상충하고 있어 이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
- 타 장애인 협회도 유사하지만, 인천시의 보조금 확대 지원을 요청함.
- 장애인 휠체어 구동을 위한 배터리 충전소 설치는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로 설치한다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용자가 있는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 ○ 구성 및 운영

- 운영 인원은 3명, 인건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의 지원은 없음.
- 시에서의 지원은 행사(사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나옴.
- 시각장애인 고용장려금(안마사 파견)의 일부를 협회 운영에 사용함.
-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후원을 통해서 받음.

### ○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 시각장애인의 차량 이동, 이동권 보장 부문에서 차별이 발생함.
- 운전자가 탑승 장소를 정하고 장애인에게 올 것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경험함.
- 식당에서 언어를 통한 장애인 차별 (추가 반찬을 요구해도 셀프서비스라서 못 도와준다고 함.)
- 활동지원사를 요청해도 심사에서 시각장애인은 불리한 항목이 많은 것이 차별이 있는 것 같음.  
(장애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지만, 생활상에 불편한 부분이 있음.)

### ○ 지원요청

-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점자로 된 공고문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작성
- 안마사의 경우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를 선호함.
-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필요함.

### ○ 기타 의견

- 도로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정류장이나 맨홀 위 등 장애물을 거쳐 가는 식으로 형식적 설치가 많음.
- 건널목의 음성 안내시설이 고장 등 불량이 많음.
- 이런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사) 인천시 장애인 인권연구소

###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해

-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계획수립이 늦었음.
- 인천시 정책은 전달체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는 항상성 유지가 필요한데 정권에 따라 변동이 너무 심함.
-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센터에 대해 부분적인 자료는 있으나,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함.
- 현재 장애인 단체나 협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된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기관 중심의 사업추진 개선 필요함.
- 취약 부분에 대한 사업발굴이 필요함.
- 발굴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필요함.  
(연도별 수행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군·구 포함)하여 내년도 계획에 피드백)

### ○ 인천시 권익옹호기관

- 권익옹호기관 활성화에 치우치면 다른 장애인 관련기관과의 형평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애인 기관 간에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
- 권익옹호기관의 핵심은 구제보다는 예방을 위한 교육(장애인, 비장애인)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 반영 필요함.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군·구에도 권익옹호기관이 들어섰으면 함.

### ○ 시설 종사자 인권보장

- 공공시설 종사자의 경우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별로 없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간혹 발생함.
- 민간시설의 경우 급여 및 수당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언어폭력 및 사생활 침해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 기타 의견

- 계획수립은 상위계획과 부합되고 기본권, 이동권, 다문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음.
- 추후 인천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표본 수(분야별 표본 수 확장, 전체 약 3,000 ~ 5,000 샘플)를 늘려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욕구 조사가 시행되었으면 함.
- 향후 인천시는 장애인 관련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총괄적인 장애인 정책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음.

## 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구성 및 업무

- 인천시 11개 장애인 단체의 연대(야학, 부모회, 자립 생활센터, 인권단체 등) NGO 인권운동단체임.
- 차별 대응, 학대, 지자체에 복지정책 요구, 학대 피해자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함.

### ○ 인천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 크게 느끼는 변화는 없음.
- 장애인 인권차별조례를 제정하고 연구계획이 없어서 인천시에 요구함.
- 공무원들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소극적이라 생각함.
-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족함.  
(사건의 접수 및 조사, 경찰 고발까지는 관여하고 있지만, 판결이 끝나고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까지 사건에 관여했으면 함)
- 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결에 영향을 줌.

### ○ 장애인 차별 신고체계

- 신고기관은 여럿(인권보호관제도, 인천시 차별 상담 전화 등) 있지만, 장애인들은 잘 모르므로 신고체계가 일원화되어 적절한 상담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기관들 사이의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

### ○ 장애인 이동권 정책

- 인천시는 콜택시 정책은 잘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은 전국 하위권임.
- 297여 노선 중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은 40여 노선이고 저상버스의 수도 상이함.
- 유럽의 저상버스 보급은 100%이고 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들임.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2%로 확인됨.

###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 가해자가 잘못해서 발생함(주된 가해자는 가족, 지인, 시설 종사자 등이 다수).
- 학대 예방 교육은 대부분 기관에서 의무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지적 장애인 학대의 경우 진술이 어려워 재판에선 CCTV나 사진이 증거로 활용됨.
- 장애인 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에 대해 시에서 설치예산 지원을 요청함.

### ○ 기타 의견

- 시선이나 편견으로 문화 체육 시설 이용에 차별이 발생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현황 조사
- 인천시에서 계획 이행의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



## 자) 인터뷰 종합

○ 아래 표는 FGI 결과를 정리한 내용임.

[표 4-57] 인터뷰 종합

구 분	응답
1.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인권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소통담당관실과 장애인복지과의 접점은 현재 없음.</li> <li>• 현재 개별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시행함.</li> </ul>
2. 모퉁이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직업훈련생과 이용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필요함.</li> <li>• 이용자 채용기준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평가 기준 설정 및 채용 관련 주관기관이 필요함.</li> </ul>
3. 인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옹호기관은 사법절차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줌</li> <li>• 복지관 종사자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 너무 많음.</li> <li>• 장애인 인구에 비해 복지관이 적은 것 같음.</li> </ul>
4. 인천농아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 증원이 필요</li> <li>• 급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사회복지사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으며, 급여 보상도 불가능하여 개정이 필요함.</li> </ul>
5.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 시 도로 기준 턱 높이가 맞지 않은 곳이 많음.</li> <li>• 저상버스의 연결 판의 불량률이 많아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li> </ul>
6.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요청해도 심사에서 차별을 느낌</li> <li>• 급여 차이로 민간기업의 안마사를 선호함.</li> <li>• 도로의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에 정비가 필요함.</li> </ul>
7. 인천시 장애우 인권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옹호기관의 핵심은 예방을 위한 교육(장애인, 비장애인)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 반영 필요함.</li> <li>• 향후 인천시는 총괄적인 장애인 정책보고서가 있으면 좋겠음.</li> </ul>
8.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에서 저상버스는 40여 개 노선뿐이고 버스의 수도 공평하지 않음.</li> <li>• 장애인 시설에 CCTV 설치예산 지원을 요청함.</li> <li>•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의 번호로 전화해 적절한 상담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체계가 필요함.</li> </ul>



## 제5장 기본계획 수립

---

제1절 기본구상

제2절 비전 및 목표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제4절 세부 추진과제

제5절 소요 예산



## 제 5 장 기본계획 수립

### 제1절 기본구상

#### 1. 추진 방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적 변화 반영
  -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의 혁신에 노력하고 하고 있음.
  - 갈수록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인천시만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혁신을 가미한 장애인 정책 발굴을 모색함.
  -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함.
- 정부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계획수립
  - 상위계획인 정부의 장애인 종합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을 인천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점에 바라본 내용을 반영
  -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역시 부분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추구
  - 이를 위해 인천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자리 분야의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
-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선행 기본계획 없이 2022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 선행 기본계획이 있다면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최초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군·구별 장애인 분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시사점(정부, 서울, 경기, 전북, 인천 등), 실태조사(설문, FGI 등) 결과 등을 반영함.
- 수립된 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의 담보
  - 대부분의 보고서처럼 계획수립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큰 계획을 수립하고자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보고서 및 관련 부서의 사업내용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 수립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민선 8기의 핵심 가치가 반영되면 인천광역시의 사업추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핵심 가치를 반영



[그림 5-1]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 반영 요소

## 2. SWOT 분석 및 대응 전략

### (1) SWOT 분석

#### ○ Strength(강점)

- 인천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다수 단체가 장애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임.

#### ○ Weakness(약점)

- 장애인 관련 인프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과 추진 과정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 Opportunity(기회)

-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법률 개정 시행
- 국가적인 인권신장으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음.

#### ○ Threat(위협)

- 장애인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축소되면 장애인의 인권보장 정책 추진에 애로
-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한계

### (2) 대응 전략

#### ○ S-O 전략

- 개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기관 지원 및 정책 확대
-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 기회 확대

#### ○ W-O 전략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
-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S-T 전략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어린이부터 교육 실시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요청

#### ○ W-T 전략

- 장애인 관련 낡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보장 도모

[표 5-1] SWOT 분석

<div> <div>내적 요소</div> <div>외적 요소</div> </div>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li> <li>- 장애인 관련 다수 단체가 장애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인프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과 추진 과정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li> </ul>
Opportunity(기회)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법률 개정 시행</li> <li>- 국가적인 인권신장으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기관 지원 및 정책 확대</li> <li>-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li> <li>-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ul>
Threat(위협)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축소되면 장애인의 인권보장 정책 추진에 애로</li> <li>-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어린이부터 교육 실시</li> <li>-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낡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비장애인의 인식개선</li> <li>-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보장 도모</li> </ul>

## 제2절 비전 및 목표

### 1. 비전과 목표

#### ○ 비전 설정

-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장애인과 동행 추구
  - . 민선 8기 인천광역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제반 검토사항이 반영된 정책과제가 시행되면 미래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이미지를 표현
- 장애인의 이동권이 가장 보장되는 인천시
  - .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의 경우 도로 및 대중 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이동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전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구축 및 제공하는 내용을 계획
- 비전 및 키워드 설정
  - .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천
  - . 키워드 : 균형, 창조, 소통, 공감, 안전, 행복, 인권

#### ○ 정책목표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인천시의 비전에 부합되게 핵심 가치를 ‘균형, 창조, 소통’을 설정함.
- 균형(Balance)
  - . 균형은 전체와 부분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로 형태가 서로 평형을 이룬 상태를 말함. 균형을 이룬 상태는 시각적으로 질서와 안정감과 통일감,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데 인천시의 모든 정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할 때 이는 균형을 의미할 수 있음.
- 창조(Creation)
  - .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정의처럼, 새로운 장애인 사업을 발굴해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창조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소통(Communication)
  - . 소통이란 서로의 의견이나 의사 등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의미로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을 위한 제반 정책이 어느 일방이 아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수립된다면 이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정책목표를 관련 법률에 제시된 주요 사항과 반영 요소를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반영된 정책목표를 제시
  - . (균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인권보장 및 존중
  - . (창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장애 친화 도시로 발전
  - . (소통) 장애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일상 생활환경 보장



##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 1. 추진전략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비전, 핵심 가치 및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장애인 기본권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 지원) 보장, 다중 차별장애인 권리보장’임.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장애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 14개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36개(신규사업 8개, 기존사업 28개)로 계획함.
- 추진과제 : 제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과제와 함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과제로 제시
  - 추진 및 실현 가능성, 효과성, 측정 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 고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 방향
    - .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 .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 .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 .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 재원 조달 방안
    - .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 분야별 핵심과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분야 : 인천시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 홍보, 인식개선,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 대해 계획이 필요하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도록 3개 사업을 제시함.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구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홍보 추진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 장애인 기본권보장 분야 : 장애인의 기본권보장은 법률에 의거 많은 분야를 제시할 수 있지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을 위해 인천시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에 인천시 자체적인 계획 등을 반영하여 5개 사업을 제시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 장애인 건강, 의료권 보장
  - 장애인 교육, 문화권 보장
  -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 지원) 보장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협조 및 참여는 물론 정부(중앙,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 조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고용, 노동, 활동 및 자립 지원 등 3개 사업을 제시함.
  - 장애인고용·노동권 보장
  - 장애인 자립 지원 추진
  -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추진
- 다중 차별장애인 권리보장 분야 : 장애인임과 동시에 성별, 신체, 정신적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여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아동 및 정신 장애인을 위한 3개 사업을 제시함.
  - 여성장애인 지원
  - 장애아동 지원
  - 정신 장애인 지원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장애 친화 도시로 발전</li> <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인권보장 및 존중</li> <li>▪ 장애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일상 생활환경 보장</li> </ul>	
추진 전략	추진전략 4개, 핵심과제 14개, 세부 추진과제 36개 제시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10개 과제, 신규 5, 기존 5)	2. 장애인 기본권보장 (14개 과제, 신규 2, 기존 12)
	3. 장애인의 사회참여 (자립지원) 보장 (기존과제 6)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6개 과제, 신규 1, 기존 5)
핵심 과제	<b>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학대 피해자 권리구제</li> <li>•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홍보추진</li> <li>•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li> </ul>	<b>장애인 기본권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동권 보장</li> <li>•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li> <li>• 장애인 건강·의료권 보장</li> <li>• 장애인 교육·문화권 보장</li> <li>•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li> </ul>
	<b>장애인의 사회참여 (자립지원)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노동권 보장</li> <li>•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li> <li>•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li> </ul>	<b>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지원</li> <li>• 장애아동 지원</li> <li>• 정신장애인 지원</li> </ul>

[그림 5-2]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도

[표 5-2] 주요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부서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1.1. 장애인 학대 피해자 권리구제		
		1.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신규)	장애인복지과
		1.1.3.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신규)	장애인복지과
	1.2.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홍보추진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장애인복지과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신규)	장애인복지과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복지과
	1.3.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신규)	장애인복지과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장애인복지과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신규)	장애인복지과
2. 장애인 기본권 보장			
	2.1. 장애인 이동권 보장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택시정책과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버스정책과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도로과
	2.2.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장애인복지과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장애인복지과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신규)	장애인복지과
	2.3. 장애인 건강·의료권 보장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과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신규)	장애인복지과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추진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부서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건강증진과
	2.4. 장애인 교육·문화권 보장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과
	2.5.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정보화담당관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보화담당관
3.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3.1. 장애인 고용·노동권 보장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장애인복지과
	3.2.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복지과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복지과
	3.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과
		3.3.2.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과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4.1. 여성장애인 지원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과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과
	4.2. 장애아동 지원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영유아정책과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신규)	공원조성과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과
	4.3. 정신장애인 지원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건강증진과

## 제4절 세부 추진과제

###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 (1) 세부사업 1.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개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는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무시하거나 항의를 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신고할 기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가시적인 처벌이 드러나지 않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장애인 복지관 및 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 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말에 따르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한 기관으로 재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
  - 현재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사건의 신고부터 접수, 조사, 판결 후 사회 복귀할 때까지 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길 요청
  -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를 요청
- 기존에 편성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설문조사, 장애인 전문가 회의 및 장애인 단체의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역할 증대를 위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확대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 등 피해장애인의 권익 옹호
-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및 교육, 홍보실시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장애인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는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에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대 피해장애인 및 가족, 학대 행위자 등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위탁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사업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사업
  - 피해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사업
  -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및 홍보사업
  - 장애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사업 등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현원 7명으로 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서는 9 ~10명으로 인원 증원 필요
- 보건복지부 교부금액 내시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지만 국비 지원금으로는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은 시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음
  - '23년 예산 424,200천원(국 104,550, 시 319,650)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7명으로 '27년까지 9명으로 증원 계획
- 현재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인력증원 후 2개 팀으로 분리 필요(사례지원팀, 교육홍보팀)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3]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증원	7	8	8	9	9	

## 아) 소요예산

[표 5-4]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운영 지원	계	424,200	494,200	515,000	560,000	575,000	
	국비	104,550	106,500	108,500	113,000	117,000	
	시비	319,650	387,700	406,500	447,000	458,000	
	기타						



## (2) 세부사업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신규)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의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현재 인천광역시의 피해장애인쉼터는 1개소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피해장애인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현재 피해장애인쉼터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남녀 전용 쉼터 분리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조성 필요성을 제시
  - 장애인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피해상담의 내용이 다르고, 기존에 쉼터에 생활하는 장애인도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존중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
-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을 학대 및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피해장애인쉼터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제시

### 나) 사업목적

-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용 쉼터 마련
-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 필요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등)
  -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피해장애인쉼터 확대 및 연령과 성별에 맞는 운영 및 인력배치, 예산이 필요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대 피해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위탁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사업내용

- 피해장애인 임시 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서비스,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현황 :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 운영('21년 4월 ~)
-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5개 지역(10개소) 선정 예정
  - 22년부터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쉼터(남녀 36개소) 설치 계획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피해장애인쉼터는 현원 5명으로 인력배치기준(시설장 1, 생활 지도원 5명)과 비교하여 1명 부족함(인력증원 필요)
- 장기적으로 피해장애인쉼터도 2개소(남, 여)로 확대 필요(현재 1개소)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피해장애인쉼터 인력배치 기준 충족을 위해 종사자 1명 증원(2024년)
- '27년까지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남, 여),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남, 여) 설치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5]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피해장애인쉼터	1	1	1	2	2	
피해장애아동쉼터	2	2	2	2	2	

#### 아) 소요예산

[표 5-6]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피해장애인쉼터	계	332,996	389,600	401,000	826,000	850,000	
	국 비	90,680	95,000	100,000	220,000	230,000	
	시 비	242,316	294,600	301,000	606,000	620,000	
	기 타						
피해장애아동쉼터	계	432,000	442,000	453,000	465,000	476,000	
	국 비	216,000	221,000	226,500	232,500	238,000	
	시 비	216,000	221,000	226,500	232,500	238,000	
	기 타						

※ 쉼터 설치예산은 미포함

### (3) 세부사업 1.1.3.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신규)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 학대 신고기관 간에 상호협력 미흡
  - 학대 피해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관리해 사건에 따라 신고하는 기관이 달라서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장애인들이 모름
- 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기관이 많아 장애인이 혼동이 발생
  - 피해장애인 관련기관 간 상호 제공할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부족하여 신고자의 혼란이 초래되어 장애인 피해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
  -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인권 수준 향상정책의 IPA 분석 결과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모두 학대 예방에 관해 제도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 학대에 대해 제도적인 예방 및 처벌 강화가 필요
- 따라서 장애인 학대 및 피해와 관련된 여러 기관이 정보교환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신규사업으로 제시

#### 나) 사업목적

-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례지원 강화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 사업내용
  -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 관련기관 간 상호 협약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학대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 학대 사례에 대한 주사례 관리기관 선정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사례별 수시회의 개최

## 라)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연구·교육·홍보, 신고체계 구축·운영에 관해 명시
  -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학대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부터 사건처리의 일련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협력 또는 연계되어 업무가 처리되는 체계가 필요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인 학대 사례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조사 및 지원 문제 발생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중대 학대 사례(사망 사건 등) 발생 시 경찰 등과 협조하여 긴급한 대응 필요
- 사례별 수사회의 등을 통해 주사례 관리기관 선정, 지역사회 내 자원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7] 1.1.3.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피해장애인(아동) 사례 회의 개최	4	4	4	4	4	

## 아) 소요예산 : 비예산

#### (4) 세부사업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의 차별 정도가 높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 비중을 차지
  -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
  - 재가 장애인의 45.3%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항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몰라 신고 대신 항의하는 것이라 판단
- 인권 수준 향상정책의 IPA 분석 결과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모두 학대 예방에 관해 제도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 학대에 관한 교육을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FGI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기관이 많다는 의견
  - 장애인의 학대 신고 편의를 위해 전화 체계를 일원화하여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체계 필요성을 제시
  -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증대에 적합하다 제시
- 기존에 편성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 증액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확대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예방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제5조의10의 제2항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및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수행기관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업내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오프라인 홍보(기관 등 방문 홍보)

## 마) 추진방향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확대
  - 장애인 학대 예방 인권 강사 증원(현재 20명 → 30~40명)
  - 학대 예방 강사 강의료 인상(5만원→10만원)
-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확대
  -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1644-8295) 홍보, 다양한 홍보기법(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예산 증액('22년 5,000천원, '23년 20,000천원)

## 바) 연차별 추진계획

[표 5-8]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계획

(단위 : 건, 명)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학대 예방 교육	1,500명	1,8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학대 예방 홍보	100회	100회	120회	150회	150회	

※ 학대 예방 홍보내용 : 오프라인(버스광고, 인쇄물, 홍보 물품), 온라인(SNS, 홈페이지, 온라인 소식지), 언론(보도자료)

## 사) 소요예산

[표 5-9]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계	20,000	22,000	25,000	30,000	32,000	
	국 비						
	시 비	20,000	22,000	25,000	30,000	32,000	
	기 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예산에 포함(사업비)

## (5) 세부사업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신규)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장애 여성의 차별 및 인권침해가 많다고 제시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주된 가해자가 가족, 지인, 시설 종사자라고 제시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중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다수
  - 여성장애인은 복합적인 이유로 다른 장애인보다 학대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가 필요
- 전문가 회의에서도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차별인식 수준이 다르므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의견을 제시
  - 장애인의 유형에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가 필요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제시

### 나)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 장애아동(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학대 예방 교육 대신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제5조의10의 제2항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 학대 현황 조사'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 사업기간 : '24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수행기관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장애아동(발달), 정신 장애인 등 유형별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형별 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한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등이 많지만 학대 사례는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이 많이 발생
- 기존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 제기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24년 장애 유형별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
- '25년 ~ '27년 매년 50회 이상 장애 유형별 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10]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 유형별 학대예방 교육			50	50	50	

### 아) 소요예산

[표 5-11]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유형별 학대예방 교육	계		30,000	5,000	5,000	5,000	
	국 비						
	시 비		30,000	5,000	5,000	5,000	
	기 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예산에 포함(사업비)



## (6) 세부사업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인 응답자 중 장애인과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장애인에 관한 관심 증대가 필요
  -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업 활성화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예산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
  -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봉사 및 교육이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옹호인으로 활용
-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지원

### 나) 사업목적

-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교육으로 시민옹호인을 양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1:1 매칭으로 개별화된 옹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유인
-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침해 구제 및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군·구별 10개소(옹진 미포함, 미추홀구 2개소)
- 사업내용
  - 시민옹호인 및 대상자(중증장애인) 발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보수교육
  -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등 지원 사업(중증장애인과 시민옹호인 1:1 매칭) 등
- ※ 시민옹호인 : 중증장애인 옹호 활동 및 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 라) 추진방향

- 장애 당사자와 시민옹호인 1:1 또는 1:2 만남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및 권리 옹호 실천
- 중증장애인 시민 옹호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정기적 만남 주선으로 장애인의 '일상적 삶' 지원 도모

## 마) 연도별 추진계획

[표 5-12]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회)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옹호인 양성 교육	303	323	343	363	383	
옹호 활동	6,239	6,259	6,279	6,299	6,319	
관계 맺기	200	220	240	260	280	

## 바) 소요예산

[표 5-13]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인 지원사업	계	200,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국 비						
	시 비	200,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기 타						

## (7) 세부사업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설 거주자 개개인에게 자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미흡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음.
- 장애인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가족이나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 시설 관련 종사자에게서 더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
  -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 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운영’ 예산을 확대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 활동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한 이용자 인권 보호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제5조의10의 제1항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3항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향의 정책 및 체계가 필요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28개소(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등)
  - ※ 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권지킴이단(시설 내 독립적 기구)
- 사업내용
  - 단원구성 : 이용장애인, 종사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 5인 이상 11인 이하
  - 외부단원 : 전체 단원의 50% 이상 지정
  - 역할 :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인권침해 의심 사례 진정·고발,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 보호

### 마) 추진방향

- 인권지킴이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함

### 바) 연도별 추진계획

[표 5-14]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추진계획

(단위 : 개)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28	28	30	30	31	

### 사) 소요예산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활용

## (8) 세부사업 1.3.1.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신규)

### 가) 선정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모두 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1위 매스미디어, 2위 학교 교육으로 응답
  -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에 장애인식 개선 관련 동영상,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
-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건의 사항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 체험 필요의 의견을 제시
  -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학교 교육에 장애인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도모
- 장애인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도 장애인 관련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
  - 학교에서 장애인 체험을 교육했지만, 참여 인원도 많지 않았고 체계적이지 않아 단순 체험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라서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체험 교육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이 필요  
(2인 1조로 시청각장애인 체험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등의 체험)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 매우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을 통해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조항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자체, 학교, 어린이집, 공사공단, 민간단체 등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및 군·구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및 군·구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단체, 기업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파견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민간 위탁) : 장애 인식개선 부스 운영, 장애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SNS 및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지자체, 학교 등)은 대부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요구 증가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중요하나 예산이 편성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 또한 소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졌음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인력풀 관리, 지자체 및 민간 교육 강사비 지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 강사 또는 자체 교육 강사풀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및 예산 지원
  - 전문업체에 홍보사업 위탁하여 광고 및 홍보사업 실시
  - 인천시에서 실제 시행하는 사업을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장애 친화 도시로서의 인천시 이미지 제고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15]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추진계획

(단위 : 명, 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자체 및 민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13,000	13,500	14,000	14,500	15,00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홍보 추진	100	120	150	180	200	

### 아) 소요예산

[표 5-16]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자체 및 민간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 비						
	시 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기 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홍보 추진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국 비						
	시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기 타						

## (9) 세부사업 1.3.2.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 가) 선정 사유

-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느끼는 편견, 차별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문화행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비장애인이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편견 및 차별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인권영화제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인권영화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 추진

### 다) 사업연혁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 ‘20년 ~ ’21년
  - ‘20년, ’21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인천광역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 ‘22년
  - “영화공간 주안”에서 관객 대상 영화 상영 및 부대행사 최초 개최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인권 및 영화에 관심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한 선정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 관련 영화 상영
  - 각종 부대행사 실시(장애인 작품 전시, 인권강연 등)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 마련
- 부대행사인 장애인 캘리그래피, 미술작품,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탈피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를 통한 사업자(비영리민간단체) 선정
- 연 1회 개최(하반기)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17]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인천장애인인권 영화제 개최	1	1	1	1	1	

## 아) 소요예산

[표 5-18]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개최	계	20,000	25,000	25,000	30,000	30,000	
	국 비						
	시 비	20,000	25,000	25,000	30,000	30,000	
	기 타						

## (10) 세부사업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신규)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
  - 장애인 인권 침해 시 대처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무응답을 제외하면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
  - 차별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자치법규에 내용 보완
- 자치법규 및 정책에서부터 장애인과의 차별이 없어야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초 마련
  - 인천광역시의 조례 및 규칙 등에 장애인의 차별이 담겨 있는 내용을 개선해 법률 사항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
  -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도 변했고, 과거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 요즘에는 장애인에게 모욕감 및 수치심을 주는 비하 발언으로 변화

### 나) 사업목적

- 조례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조(차별금지 등)
  - 모든 영역에서 장애에 관해서 차별금지 및 모독, 부당한 영리 행위 금지에 관해 명시한 조항으로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사항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자체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구제, 해소에 관한 조항으로 자치법규에서 작성된 장애인 비하적 내용 개선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천시 및 10개 군·구 자치법규 및 정책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 사업내용
  - 인천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연구에서 도출된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마) 추진과정

- '22년 2월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조례 제정
- '22년 5월 군·구에 장애 차별적 조례 정비 안내
- 향후 장애 차별적 조례 정비 여부 확인 및 신규 조례 등 제정 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 여부 모니터링 실시

바) 연차별 추진계획

[표 5-19]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인천시 자치법규 등의 차별적 용어 개선	1	1	1	1	1	
군·구 자치법규 등의 차별적 용어 개선	2	2	2	2	2	

사) 소요예산 : 비예산

## 2. 장애인 기본권 보장

### (1) 세부사업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개선 제시
  -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이동 편의 제공이 필요
  - 비장애인과 장애인 전문가는 이동권이 보장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인권의 보장
  -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할 때 특장차 운전자가 장애인에게 탑승 장소로 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유발하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반 시의 벌칙 규정 강화가 필요
-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의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이동교통수단)
  - 제4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운전자 및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확충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다)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인천교통공사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장애인콜택시(휠체어 특장차 및 바우처 택시) 운영
    - 휠체어 특장차 : 193대
    - 바우처 택시 : 300대
- ※ 바우처 택시 : 장애인콜택시의 하나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적용, 차액은 자치단체 지원)

## 마) 필요성

- 2022년 현재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 법정 기준 대수(254대, 2021년 말 기준)의 76%(193대) 확보

## 바) 추진목표

- 202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20]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추진계획

(단위 : 대)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특장차 확보 대수	215	240	254	254	254	
특장차 구입 대수	22(8)	25(10)	14(10)	(30)	(25)	

※ ( ) 노후차량 교체 대수

## 아) 소요예산

[표 5-21]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특별운송 수단 보급 확대	계	1,440,000	1,750,000	1,248,000	1,620,000	1,400,000	
	국 비	720,000	875,000	624,000	810,000	720,000	
	시 비	720,000	875,000	624,000	810,000	720,000	
	기 타						

## (2) 세부사업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및 전문가 회의에서 결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제시
  - 비장애인과 장애인 전문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동 편의성 개선이 필요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점검이 필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 버스노선 297개 중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은 40여 개 노선이라 저상버스 운행이 불균형
  -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운행 중인 저상버스의 탑승 장치의 오작동 및 보도블록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휠체어 탑승이 불편하다 언급
-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이 인천광역시 해당 부서의 사업에 반영 필요
  - 국토교통부의 광역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2026년까지 전체 버스의 62%를 목표
  - 2022년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약 2,200여 대 중 저상버스는 약 600대로 이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못 미치므로 저상버스의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저상버스)
  - 제1항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정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도블록을 저상버스 운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
  - 교체하는 버스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운송사업자 지원 및 운전자 교육에 대해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다)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저상버스 도입계획),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 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내용 : 운수업체 저상버스 도입 시 보조금 지원

## 마) 도입현황

[표 5-22] 2.1.2.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 대)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1~10월)
도입 대수 (누계)	26 (379)	44 (423)	46 (469)	59 (528)	52 (580)	33 (613)

## 바) 추진목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23. 1. 19. 시행)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2023년 도입수요: 198대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에 따라 도입 추진
  - 목표 대수 : 202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2,204대)의 61%\*인 1,345대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의 광역시 목표: 61%
  - 우리 시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 비율 : 27.81%(613대 / 2,204대)
  - 저상버스 도입 가능한 시내버스 대비 도입 비율 : 31.39%(613대 / 1,953대)
  -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 61%에 필요한 추가 차량 대수: 732대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23]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계획

(단위 : 대)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저상버스 도입(누계)	813	1,013	1,213	1,345	1,477	

## 아) 소요예산

[표 5-24]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	15,456,000	16,000,000	18,400,000	18,400,000	18,400,000	
	국 비	7,728,000	8,000,000	9,200,000	9,200,000	9,200,000	
	시 비	7,728,000	8,000,000	9,200,000	9,200,000	9,200,000	
	기 타						



### (3) 세부사업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도 이용이 불편
  - 휠체어로 이동할 때 보도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인천광역시의 보도를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개선이 필요
- 반면 전문가 회의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선하면 악용된다고 제시
  - 인천광역시의 특정 구에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보도의 턱을 없앴지만,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
  - 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도 개선 및 비장애인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
- FGI에서 인도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부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언급
  -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등 제 위치에 있지 않아 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의 확인 및 재배치를 요구
  - 장애인에게 편의를 위해 제공한 장치가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것은 정책 실행의 오류 및 예산의 낭비
- 따라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 사업’을 일부 지역(인하로, 인주대로,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에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점검이 필요
-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보도 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 등 스스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

#### 다)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라)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부적정·미설치 보도(L=420km)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총사업비 : 15,000,000천원
- 사업내용 : 기존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따라 정비 방법 선정
  - (상태 양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신속 정비 추진
  - (상태 불량) 보도 정비 시 및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정비 추진
- ※ 현재 남은 보도 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병행 정비 중

## 마) 연차별 추진계획

[표 5-25]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	L= 20km 정비	L= 20km 정비	L= 20km 정비	L= 20km 정비	L= 20km 정비	

## 바) 소요예산

[표 5-26]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계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국 비						
	시 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기 타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4) 세부사업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 가) 선정 사유

-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사용의 불편함을 제시
  -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를 점검
- 따라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추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필요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해서만 제정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에는 충전기 설치장소 및 설치 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관리, 홍보 등의 조항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도모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 다)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천시 관내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및 군·구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공공장소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우선 설치
  - 전동보조기기 이용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급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

## 바) 추진현황

- 2019년 1월 ~ 12월 : 162대 설치(국비설치 82대, 시비설치 80대)
- 2021년 9월 ~ 12월 : 23대 설치
- 2022년 1월 ~ 12월 : 40대 설치

## 사)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역사, 동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 아) 연차별 추진계획

[표 5-27]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추진계획

(단위 : 대)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22	25	30	35	40	

## 자) 소요예산

[표 5-28]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계	99,660	113,250	135,900	158,550	181,200	
	국 비						
	시 비	49,830	56,625	67,950	79,275	90,600	
	군·구비	49,830	56,625	67,950	79,275	90,600	

## (5) 세부사업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의 건물 출입 편의성 제시
  - IPA 분석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문가 모두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의 제도적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13개 항목 중 5번째로 높은 응답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조사가 필요
  - 5년마다 진행되는 다중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외에도 상세 조사가 필요
- 시민소통담당관이 접수한 민원 중에 시청 신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
  - 공공시설은 민원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가 개선될 수 있지만, 민간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인천시 교육청 관련 공공건축물로 한정
  - 다른 지자체(서울, 광주, 목포 등)의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만 제정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도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인천광역시 BF 인증 건물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
-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확충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BF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BF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 확충

### 다) 지원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0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BF 인증 의무 이행 및 대상 시설관리
  - 인센티브 정책으로 BF 인증 참여 유도

- 인증제도 홍보 및 관계자 교육
  -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BF 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 건축주
    - 지원내용 : BF 인증(예비인증,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 ※ 인증 수수료 적용 요율

[표 5-29] 2.2.2. BF 인증 수수료 적용 요율

구분		300㎡미만	3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본인증	기준수수료 (기준)	4,030,000원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원	3,224,000원	4,030,000원	4,836,000원	6,045,000원
예비인증	기준수수료 (기준)	2,060,000원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원	1,648,000원	2,060,000원	2,472,000원	3,090,000원

#### 마) 문제점

- 민간부문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라 BF 인증 취득에 소극적
  - BF 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하여 인증 참여 독려

#### 바) 추진방향

- 본 인증 40개소 확충(매년)

####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30]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40	40	40	40	40	

#### 아) 소요예산

[표 5-31]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BF 인증 수수료 지원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비						
	시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기타						

## (6) 세부사업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신규)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일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 부족
  - 농아인은 수화나 글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의사소통에 애로사항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 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수단을 갖춘 시설 및 공간의 확대가 필요
- AAC에 대해서 시간과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제시
  - AAC 소통은 사설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
- 따라서 ‘AAC ZONE 소통마을’의 예산을 확대하여,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확대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하여 타 시도 사례 검토
  -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해 인천광역시의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다) 추진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군·구
- 사업내용
  - 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읍·면·동 단체회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교육 시행
- 관공서 등 민원실에 자체 AAC 도구 제작·보급

※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보완대체 의사소통, 말과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참여제약 등을 고려하여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AAC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비장애인에게 교육·홍보 등 필요
- AAC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사설 기관의 의존도 증가
- 정책 및 관련기기에 관해서 연구와 시간이 필요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및 AAC 확대

####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32]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추진계획

(단위 : 회/건)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교육·홍보	10	12	12	13	15	
자체 AAC 제작	3	5	5	6	8	

#### 아) 소요예산

[표 5-33]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AAC	계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국 비						
	시 비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타						

※ '23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 (7) 세부사업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 장애 진단 및 질환에 대한 치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필요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 활성화 필요
  -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적자 감소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 지원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진단·서비스를 지원하여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및 제81조(비용 보조)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 사업내용 : 운영비 지원,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병원 이용자들의 재활 및 안전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 경인 권역 재활병원의 적자 감소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필요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경인 권역 재활병원은 종별 변경(요양병원→병원)으로 인한 입원환자 증대 및 적자 감소 기대
-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34]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건)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이용 환자 수	42,000	44,520	47,191	50,027	53,024	연 6% 성장 목표

## 아) 소요예산

[표 5-35]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계	3,168,726	3,358,849	3,560,390	3,774,003	4,000,450	
	국 비	162,514	172,265	182,600	193,557	205,170	
	시 비	3,006,212	3,186,584	3,377,790	3,580,446	3,795,280	
	기 타						

## (8) 세부사업 2.3.2.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신규)

### 가) 선정 사유

- 어린이 재활병원 부족
  - 인천에 어린이재활병원이 부족하여 근처 경기도나 서울로 원정치료를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장애아동은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의료재활 시설이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재활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 의료기관 설립

### 다)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라) 사업목표

- 사업대상 :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
- 사업기간 : '24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 사업내용
  - 재활의료 : 재활전문의와 치료팀의 다학제적 평가 및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 의뢰 등
  - 돌봄 및 상담 : 생애주기별 서비스(부모교육, 재활치료, 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가족 지원 서비스
  - 교육 및 체육 : 교육 연계(특수학교, 병원학교, 순회 교실 등 학령기 아동 교육지원) 및 재활 체육(재활치료 후 사회 적응 재활 체육 프로그램 제공)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 의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서울 등으로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2024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공모 신청
  -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권역 2개 시도 지원
  - 지원금액 : 연 937,500천원 이상(국비 80%, 시비 20%)

####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 내 용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수도권 2개소(서울, 경기) 선정(인천 탈락)
- 지원예산 : 총 937,500천원(국 750,000, 시 187,500)
- 지정주기 : 3년 주기로 재지정(재공모)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36]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 및 운영		1	1	1	1	'24년 1개소 선정 및 지속 운영

### 아) 소요예산

[표 5-37]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100,000	
	국 비		800,000	800,000	800,000	880,000	
	시 비		200,000	200,000	200,000	220,000	
	기 타						

### (9) 세부사업 2.3.3.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 가) 선정 사유

- 지역사회 장애인 의료시설 확대 운영 필요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활성화가 필요
- 따라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을 확대해 지역장애인 의료보건센터 운영 활성화가 필요
- 인천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권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시행계획,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등에 관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도 적합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다)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라) 사업개요

- 지정기관 : 인하대병원(보건복지부 2020년 6월 23일 선정)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사업) 보건의료정보 플랫폼 운영 등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여성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 등
  - (교육사업) 보건 의료인력 및 장애인 등 교육 및 정보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서비스 제공

### 마) 추진목표

- 장애인건강관리 서비스 및 교육지원 : 연중
- 보건의료 자원발굴 및 연계 : 연중

### 바) 연차별 추진계획

[표 5-38]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역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운영·지원	1	1	1	1	1	

### 사) 소요예산

[표 5-39]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역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운영	계	549,440	549,440	549,440	549,440	549,440	
	국 비	274,720	274,720	274,720	274,720	274,720	
	시 비	274,720	274,720	274,720	274,720	274,720	
	기 타	-	-	-	-	-	

## (10) 세부사업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에 관한 조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지원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 및 교육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매년 장애인이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편성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자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위탁기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사업내용
  -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치과 진료(전신마취 진료 등) 및 치료비 지원
  - 구강 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심거점 역할 수행
  -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 구축
  -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
  - 장애인 시설 방문 검진 및 교육
  -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등

### 라)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5조(구강건강증진사업)
  - 장애인에 대한 구강 건강사업에 대해서만 명시
-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5조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관리·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구강 진료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필요

### 마) 문제점

- 환자 대기 증가 및 협조도 낮은 환자 행동 조절을 위한 인력 부족
- 의료재단에 담당의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의 대비책이 필요
  - 의료재단에서 복수의 인원을 배치하거나 장애인 구강 진료만을 하는 부서를 시에서 운영하는 등 보완 사항이 필요

### 바) 추진목표

- 장애인 구강 진료 : 연 1,700명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40]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진료 건수	1,700	1,700	1,700	1,700	1,700	

### 아) 소요예산

[표 5-41]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지원	계	266,600	267,934	269,274	270,620	271,974	
	국 비	133,300	133,967	134,637	135,310	135,987	
	시 비	133,300	133,967	134,637	135,310	135,987	
	기 타	-	-	-	-	-	



## (11) 세부사업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가) 선정 사유

- 설문 응답자의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제시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제도 및 환경을 갖춘 시설의 확대가 시급
- 추가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 제시
  - 전문가 의견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연차별 각 2개소 개관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을 확대해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보장이 필요
-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교육 기반 마련 및 인권보장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저학력 장애 성인의 직업 훈련 참여에 필요한 기초학력 배양 및 생활 능력 향상

### 다)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개소
  -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밀알야학, 꿈땅, 참빛드림학교, 삼애배움터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시설운영 :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 프로그램 : 성인 문해, 문화예술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

## 마) 필요성

-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 기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 바) 추진목표

-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42]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56	57	58	59	60	

## 아) 소요예산

[표 5-43]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지원	계	369,538	373,233	376,965	380,735	384,542	
	국 비	-	-	-	-	-	
	시 비	369,538	373,233	376,965	380,735	384,542	
	기 타	-	-	-	-	-	

## (12) 세부사업 2.4.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지원을 제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 장애인의 재능을 발굴하거나 심신의 안정 도모
-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예산을 확대해 장애 예술인 및 단체 지원
  -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 확대 및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육성 및 창작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시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장애 예술인 육성 및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나)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교육, 체험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및 권리증진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 및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 다) 추진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등록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공모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행사(음악회, 합창제, 전시회 등) 개최 지원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악기, 노래, 그림, 캘리그래피 등) 운영 지원
  -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

## 마) 필요성

-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증진 필요성 제기

## 바) 추진방향

- 인천 전역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행사·공연 참여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장애 예술인 육성 및 역량 강화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44]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계획

(단위 : %)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참여자 만족도	50	55	60	65	70	

※ 만족도 평가 산식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 아) 소요예산

[표 5-45]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계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국 비						
	시 비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기 타						

### (13) 세부사업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혜택에 관한 정보를 받는데 어려움을 제시
  -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화 능력이 미흡해 정보 접근이 어려움
- 정보에 접근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정보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제공
- 따라서 정보화담당관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의 예산 확대가 필요
  - 인천광역시 장애인 및 가족의 정보교육을 지원해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나) 사업목적

-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교육 서비스 제공

#### 다)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인의 교육을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이 지자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환경 제공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직계가족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6개 선정 지원, 협약 운영
- 교육기관 : 관내 비영리 장애인 복지관, 단체, 협회 등
- 교육과정 : 정보화 기초, 중급, 고급, 모바일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 바) 추진방향

- 6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 1,512명 이상 교육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46]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교육 인원	1,512	1,512	1,512	1,512	1,512	

## 아) 소요예산

[표 5-47]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계	126,972	126,972	126,972	126,972	126,972	
	국 비	63,486	63,486	63,486	63,486	63,486	
	시 비	63,486	63,486	63,486	63,486	63,486	
	기 타						

## (14) 세부사업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 가) 선정사유

-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이 재정 여건상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접근의 불편함 해소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의 예산 확대 필요
  - 장애인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기기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
- 관련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지능정보제품)를 제공해 정보 접근과 이용 증진에 관한 조항
  -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지능정보제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

### 나) 사업목적

-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 추진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 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내용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화면낭독 S/W,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보급품목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용 국·외산 100여종
- 비용부담 : 정부 지원(80%), 개인 부담(20%)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 지원 90%, 개인 부담 10%

###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바) 추진방향

- 정보통신 보조기기 300대 보급

### 사) 연차별 추진계획

[표 5-48]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추진계획

(단위 : 대)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300	300	300	300	300	2022년 278대

### 아) 소요예산

[표 5-49]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계	449,424	449,424	449,424	449,424	449,424	
	국 비	224,712	224,712	224,712	224,712	224,712	
	시 비	224,712	224,712	224,712	224,712	224,712	
	기 타						



### 3.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 (1) 세부사업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 가) 선정 사유

- 설문 조사 결과, 건의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삶 보장 필요성을 제시
  - 중증장애인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
- 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노동기회 제공
  - 복지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활동, 노동의 기회 제공,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수행
- 따라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
  -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7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복지 일자리를 제공으로 사업이 계획되었지만,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을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복지 실현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고 그에 맞는 직업 훈련 및 취업 기회 제공을 명시한 조항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인천광역시의 공공사업의 일을 제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방식 : 군·구별 자체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
  - 민간기업이나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근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 제공

## 마) 추진방향

-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근로 기회 제공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취업 경제활동 촉진

## 바) 연도별 추진계획

[표 5-50]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참여 인원	27	45	63	90	108	

## 사) 소요예산

[표 5-51]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계	144,518	252,904	371,770	557,654	702,646	
	국 비						
	시 비	72,259	126,452	185,885	278,827	351,323	
	군·구비	72,259	126,452	185,885	278,827	351,323	

## (2) 세부사업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 가) 선정 사유

-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받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천광역시로 발전 가능
-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계획의 필요성 제시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복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고용으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장애인 자립 기반 제공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시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 및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로 공공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명시

### 나)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통한 자립 생활 기반 제공

### 다)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의2

### 라)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표 5-52] 3.1.2.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단위 : 명)

구분	'18년	'19년~'21년	'22년~'23년	'24년	비고
지자체(공무원)	3.2%	3.4%	3.6%	3.8%	
지자체(근로자)	2.9%				
공공기관	3.2%				

마) 문제점

-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피 및 고용부담금 납부 선택 등 소극적 대응
- 장애인 직무가 단순 노무에 편향화

바) 추진방향

- 의무 고용 관련 추진사항 독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의무 고용 미달 사유 및 원인분석을 통한 직무분석 컨설팅 등 고용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조)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53]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추진계획

(단위 : %)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의무 고용률	3.6	3.8	3.8	3.8	3.8	

아) 소요예산 : 비예산

### (3) 세부사업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가) 선정 사유

- 탈시설 후 가장 필요한 사업은 생활비 지원 의견 제시
  -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 거주시설, 활동 지원인 같은 서비스를 언급
  - 정착지원금을 통해 생활비 문제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
  - 2022년에는 10명의 탈시설 장애인이 초기정착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편성
  - 많은 탈시설 장애인이 초기정착금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지원받은 장애인이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이 초기정착금, 자립 정착 생계비, 활동 지원급여의 지원 및 제공으로 볼 때, 퇴소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확인

#### 나) 사업목적

-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 의지 고취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①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②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 생활 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 생활 주택 퇴소 시, 자립 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 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군·구, 市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8백만원(시비 50%, 구비 50%), 1회에 한함
  - 사용용도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

- 지급방법 : 군·구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 라) 필요성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시설 퇴소자에게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매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마)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선정('22 ~ '24) 및 추진에 따른 시설 퇴소 자립장애인 증가 예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 바) 연도별 추진계획

[표 5-54]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추진계획

(단위 : 명/천원)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원 인원	10	20	10	10	10	
1인당 지원액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사) 소요예산

[표 5-55]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	8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 비						
	시 비	4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군·구비	4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 (4) 세부사업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가) 선정 사유

- 설문 응답자의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 권리보장을 요청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언급
- 설문조사 결과, 탈시설 경험자들은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탈시설 장애인은 시설에 거주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생활에 익숙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편
  -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탈시설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 단계별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 나) 사업목적

-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제공으로 자립역량 향상 도모

##### 다)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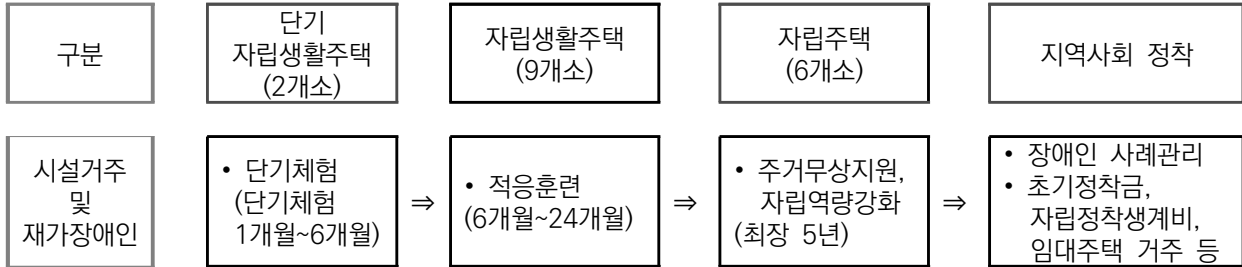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제17조(자립주택 제공)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규모 : 11개소(단기 생활 주택 2, 자립생활주택 9)
- 사업주체 :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거주기간 : 6개월 ~ 최장 2년
  - 지원내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자립 생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 자립지원 시설 체계

[표 5-56] 3.2.2. 자립지원 시설 체계



### 마) 필요성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험과 훈련을 지원하여 자립역량 강화 필요

###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시, 군·구, 운영사업자 간 업무 협력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 관내 거주시설 업무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장애인 자립 생활 추진 및 입주자 확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57]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설치 주택 수	11	11	12	12	12	

### 아) 소요예산

[표 5-58]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계	750,000	960,000	800,000	1,000,000	830,000	
	국 비						
	시 비	520,000	720,000	550,000	740,000	560,000	
	군·구비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 (5) 세부사업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가) 선정 사유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건의
  - 설문 응답자의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시설이 부족하고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 및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생활하는 인천광역시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시설 거주 장애인은 탈시설에 대한 어려움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부족을 언급
  - 설문 응답자의 18.5%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탈시설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탈시설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충분한 지원과 복지서비스 필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연간 1,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
  - 동 사업은 2022년 기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 생활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사업목적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

### 다) 추진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
  - 장애인의 활동 지원급여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필요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비외 활동 지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구간 12구간 이내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군·구, 활동 지원 기관
- 사업내용 :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마) 추진방향

- 장애 유형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

## 바) 연도별 추진계획

[표 5-59]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이용자 수	1,080	1,160	1,240	1,320	1,400	

## 사) 소요예산

[표 5-60]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계	13,614,532	17,394,854	20,836,008	24,633,144	28,432,000	
	국 비						
	시 비	6,807,266	8,697,427	10,418,004	12,316,572	14,216,000	
	기 타	6,807,266	8,697,427	10,418,004	12,316,572	14,216,000	

## (6) 세부사업 3.3.2.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가) 선정 사유

-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도우미로 활동지원사 필요
  - 설문조사 결과 탈시설 생활에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첫 번째가 생활비 지원이 19.9%, 활동지원사가 16.6%로 나타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의 자립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됨
  -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생활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활동지원인을 선택하는 예도 있어, 중증 장애 및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같은 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
- 장애인의 건의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을 돌봐줄 시설 및 서비스 필요의견 제시
  - 중증장애인 부모들도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인천광역시에서 최종증 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상시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외 최종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종증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최종증 장애인 상시 보호 체계 마련

### 다) 추진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자체에서 적절한 활동 지원급여 및 사업을 지원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명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지원사업)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종증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 사업주체 : 군·구, 활동 지원 기관
- 사업내용 :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마) 추진방향

- 최종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바) 연도별 추진계획

[표 5-61] 3.3.2.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이용자 수	70	80	90	100	100	

## 사) 소요예산

[표 5-62] 3.3.2. 최종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최종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6,101,172	6,054,300	7,267,392	8,587,620	10,016,100	
	국 비						
	시 비	3,050,586	3,027,150	3,633,696	4,293,810	5,008,050	
	군·구비	3,050,586	3,027,150	3,633,696	4,293,810	5,008,050	

##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 (1) 세부사업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가) 선정 사유

-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차별이 자주 발생
  -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에서 재가 장애인의 여성장애인 차별 경험이 26개 항목 중 3위로 높게 나타나는데,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았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 조성의 의견 제시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복지서비스 또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가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 강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 자조 모임 등

#### 라) 추진방향

- 여성장애인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생애주기별 고충 상담과 멘토링 등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고충 해소

## 마) 연도별 추진계획

[표 5-63]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추진계획

(단위 : 개/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지원 개소	3	3	3	3	3	
수혜 인원	2,000	2,100	2,200	2,300	2,400	

## 바) 소요예산

[표 5-64]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계	206,229	212,416	218,788	225,352	232,113	
	국 비	144,360	148,691	153,152	157,746	162,478	
	시 비	61,869	63,725	65,637	67,606	69,634	
	기 타						

## (2) 세부사업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가) 선정 사유

- 여성장애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제도 기반 조성 및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의견 제시
  - 여성의 출산은 비용뿐만 아니라 임신부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기간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형성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 조성 필요성을 언급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이 필요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편성되어 2022년에는 82명의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해 태아 1인당 1백만원을 지원을 발표해 해당 사업의 예산 및 지원 인원이 변경될 것으로 확인
-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명시한 조항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으로 이후에 많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는 환경을 조성

### 나) 사업목적

- 비장애 여성과 비교하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라) 추진방향

- 비장애 여성보다 임신과 출산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 마) 연도별 추진계획

[표 5-65] 4.1.2.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개/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수혜 인원	65	65	65	65	65	

## 바) 소요예산

[표 5-66]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국 비	45,500	45,500	45,500	45,500	45,500	
	시 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기 타						



### (3) 세부사업 4.2.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 가) 선정사유

- 설문조사 응답자의 건의 사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어릴 때부터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환경이 필요
  - 설문조사 응답자의 54.1%가 장애인과 관계가 없는 비장애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환경이 부족해서 벽이 생기므로 미래세대에게 장애인과 같이 있는 환경을 제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
-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위한 상세한 예산 편성이 필요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장애아동을 적합한 어린이집 환경, 일반 보육교사 대상으로 장애아동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
-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5조(아동의 편의증진)
  -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의 성별 및 장애 여부를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통해 아동 친화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도모

#### 나) 사업목적

- 취약한 특수보육시설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장애 통합 어린이집 106개소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시, 군·구
- 사업내용
  - (차량운영비) 월 300천원 지원
  - (보육교사) 특수교사 수당 월 100천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월 50천원
  - (치료사) 인건비 100% 지원 및 치료사 수당 월 400천원
  - (자연체험 학습비) 장애아 현원별 차등 지원(700천원 ~ 1,900천원)

## 라) 문제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확대 필요(현재 정원의 20% 이내)

## 마) 추진방향

- 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집 통학 장애아동 파악 및 장애인 인권 침해 교육 지원
- 장애아 보육 관련 특수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지속 확대
  - 136명(2019년) → 401명(2020년) → 637명(2021년) → 743명(2022년 10월)
  - (2019년 대비 약 446% 증가)

## 바) 연차별 추진계획

[표 5-67]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추진계획

(단위 : 개/명)

주요내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 특수교사 수당	214	220	220	220	220	
자연 체험 학습비	92	95	100	100	100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34	40	40	40	40	
차량 운영비	23	25	30	30	30	

## 사) 소요예산

[표 5-68]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특수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계	525,317	530,000	550,000	580,000	600,000	
	국 비						
	시 비	525,317	530,000	550,000	580,000	600,000	
	기 타						

#### (4) 세부사업 4.2.2.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운영(신규)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 전문가 건의 사항으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언급
  - 미래세대가 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선 교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 전문가 회의의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확보가 필요
  -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 혹은 놀이터가 필요
- 따라서 장애 및 비장애 아동들이 동일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
-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5조(아동의 편의증진)
  -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의 성별 및 장애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항을 바탕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공간이 필요

##### 나) 사업목적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놀이터 설치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노안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 사업기간 : '25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내용
    - 놀이터를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기준 충족 필요
    - 장애아동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
      - 장애아동용 그네※, 휠체어 탑승 가능한 회전기구, 휠체어 및 유모차 접근이 가능한 미끄럼틀 등
- ※ 장애아동용 그네 : 그네에 등받이와 안전벨트를 장착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동 이용 가능

마) 문제점(또는 필요성)

- 장애아동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 시 환경보건법(어린이 유해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 등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필요

바) 추진방향(또는 추진목표)

- 2025년 무장애 통합놀이터 시범 설치 및 운영(1개소)
- 2027년까지 무장애 통합놀이터 5개소로 설치 확대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69]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규 설치			1	2	2	

아) 소요예산

[표 5-70]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계			200,000	400,000	400,000	
	국 비						
	시 비			200,000	400,000	400,000	
	기 타						

### (5) 세부사업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 보호자를 대신해 돌봐줄 복지시설 필요
  - 장애인 및 전문가의 건의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이라면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의 방과 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대 필요
  -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방과 후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따른 발달장애 학생 지원
  - 553명의 발달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코로나와 같은 외부요인을 고려한 2023년 예산 편성이 필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평생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교육과정, 인력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를 따라「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하나로 평생교육을 제공

#### 나)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청소년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 다)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지원)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사업기간 : '23년 1월 ~ '27년 12월
- 사업주체 : 군·구
- 사업내용 : 월 44시간 이내의 소그룹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표 5-71] 4.2.3.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내용

구 분	월요일 ~ 토요일	비고
방과 후 활동(월 44시간)	09:00~21:00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예) 취미와 여가 활동, 직업 탐구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체험활동, 자조활동 등

마) 문제점

- 체험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등의 사유로 현장 체험이 안 되면 원활한 사업 시행이 어려움.

바) 추진방향

-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 단가 적용 지급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 그룹 80%)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72]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추진계획

(단위 : 명)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이용 인원	220	240	260	280	300	
제공기관	17	17	17	18	18	

아) 소요예산

[표 5-73]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계	3,477,715	3,520,600	3,532,740	3,544,880	3,557,020	
	국 비	2,864,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시 비	613,715	620,600	622,740	624,880	627,020	
	기 타						

## (6) 세부사업 4.3.1. 정신 장애인 일자리 지원

### 가) 선정 사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
  - 「장애인복지법」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신 장애인은 재활 상담 등 지역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이 어려우므로 정신 「장애인 정신건강법」에 따른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확충이 필요
-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하나로 정신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복귀 훈련, 사회적 편견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나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생각하면 사회적응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및 사업을 계획하여 사회 복귀 시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나) 사업목적

- 정신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
- 정신 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카페 근로자)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취업 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바리스타 카페 운영
  - 취업 유지 지원 및 안정적인 외부취업 준비를 위한 사회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 운영현황

[표 5-74]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운영현황

점 포	위 치	개소일	근무 인원
빛솔 1호(꿈앤카페 빛솔)	서구 심곡동 인재개발원 1층	2015. 4. 1.	현재 운영 중단(매장 휴업)*
빛솔 2호(아이갯에브리핑)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1층	2016. 9. 26.	5명(교대근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 3. 2.부터 현재까지 임시휴업

## ○ 종사자 현황

[표 5-75]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5	'16	'17	'18	'19	'20	'21	'22
입사자	24	2	7	3	2	5	-	4	1
퇴사자	20	-	1	4	2	2	3	5	3
외부취업자	3*	1	1	-	1	-	-	-	-

\* 사업장: (주)빛과소금(제조업), (주)플랜에이치(품질관리), 사회적기업함께걸음(바리스타 보조강사)

## 마) 필요성

○ 정신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회 마련 및 사회적 편견 해소

## 바) 추진방향

○ 사례관리(지속적인 상담 및 취업장 방문지도)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정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마련

## 사) 연도별 추진계획

[표 5-76]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운영기관(카페)	2	2	2	2	2	

## 아) 소요예산 : 비예산



## 제5절 소요 예산

[표 5-77] 세부사업 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추진 전략	핵심과제	세부 사업명	소요 자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1.1. 장애인 학대 피해자 권리구제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424	494	515	560	575	2,568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 아동쉼터 설치 확대(신규)	765	832	854	1,291	1,326	5,068
		1.1.3. 장애인학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강화 (신규)	비예산					
	1.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0	22	25	30	32	129
		1.2.2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신규)	0	30	5	5	5	45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	200	250	300	350	350	1,450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사용					
	1.3. 장애인식개선 사업추진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신규)	55	55	55	55	55	275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20	25	25	30	30	130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신규)	비예산					
	소계		1,484	1,708	1,779	2,321	2,373	9,665
2. 장애인 기본권 보장	2.1. 장애인 이동권 보장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1,440	1,750	1,248	1,620	1,400	7,458
		2.1.2 자생버스 도입 확대	15,456	16,000	18,400	18,400	18,400	86,656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2.2. 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100	113	136	159	181	689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10	10	10	10	10	50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신규)	10	20	20	20	20	90
	2.3. 장애인 건강·의료권 보장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3,168	3,358	3,560	3,774	4,000	17,860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신규)		1,000	1,000	1,000	1,000	4,000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549	549	549	549	549	2,747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267	268	269	271	272	1,346

추진 전략	핵심과제	세부 사업명	소요 자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4. 장애인 교육·문화권 보장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70	373	377	381	385	1,885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	250	300	350	400	1,500
	2.5.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127	127	127	127	127	635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449	449	449	449	449	2,247
	소계		25,146	27,267	29,445	30,110	30,193	142,163
3. 장애인 사회 참여  (자립 지원)  보장	3.1. 장애인 고용 노동권 보장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 추진	145	253	372	558	703	2,029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비예산					
	3.2. 장애인 자립 지원 추진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80	200	100	100	100	580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750	960	800	1,000	830	4,340
	3.3.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추진	3.3.1 인천형 사후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3,615	17,395	20,836	24,633	28,432	104,911
		3.3.2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6,101	6,054	7,267	8,588	10,016	38,027
	소계		20,546	24,609	29,003	34,321	39,378	147,858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 보장	4.1. 여성 장애인 지원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06	212	219	225	232	1,095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65	65	65	65	65	325
	4.2. 장애 아동 지원	4.2.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525	530	550	580	600	2,785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신규)			200	400	400	1,000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3,478	3,321	3,733	3,545	3,557	17,633
	4.3. 정신 장애인 지원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비예산					
		소계		4,274	4,128	4,767	4,815	4,854
총계			51,450	57,712	64,994	71,567	76,798	322,524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7),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 경기도청(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권기본계획 보고서
- 경기도청(2017),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 경기도청(201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전라북도청(2018),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 인천광역시청(2021), 20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청(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 인천광역시청(2018),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 고양시청(2021),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 원주시청(2021),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 김포시청(2021),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대전복지재단(2019), 대전광역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인천시장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연구
- 대전세종연구원(2020),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 기본방향
-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부록





## 부록

### 1. 설문조사지

#### 1) 재가장애인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 (재가 장애인용)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06월

● 조사문의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본희 선임연구원(Tel : 010-2235-9683)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안재석 주무관(Tel : 032-440-2939)

#### ★ 인권이란?

귀하께서 살아가시는데 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는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접근권, 거주 이전권, 문화 향유권, 이동권, 생활권, 정보 접근권, 보행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 중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3점 기준으로 표시해주세요.

구분	차별 또는 인권침해 내용	점수			
		없음	약간 있음	있음	많음
1	신체적 학대	0	1	2	3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경험	0	1	2	3



구분		차별 또는 인권침해 내용	점수			
			없음	0		
			약간 있음	1		
			있음	2		
			많음	3		
2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경험	0	1	2	3
3	성적 학대	장애를 이유로 성적 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	0	1	2	3
4	사생활 침해	지역주민에게 도움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받은 경험	0	1	2	3
5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0	1	2	3
6	유기·방임	보호·감독 의무자가 장애인을 버리거나 보호 및 치료에 소홀함	0	1	2	3
7	주변인 차별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등 관련자들이 차별받음	0	1	2	3
8	근로·고용권	모집·채용, 임금복지,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등	0	1	2	3
9	교육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 전학을 강요 등	0	1	2	3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토지·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	0	1	2	3
12	시설물 접근·이용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에 관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	0	1	2	3
13	보조장치 사용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 등의 장애인 보조장치 사용을 방해 또는 차별받은 경험이 있음	0	1	2	3
14	이동·교통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에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15	정보에의 접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이용 및 접근에 차별을 경험	0	1	2	3
16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참여에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한 행동 강요 등	0	1	2	3
17	체육·관광활동	체육·관광활동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차별 및 편의시설 부족	0	1	2	3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경험	0	1	2	3
19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을 경험	0	1	2	3
20	모·부성권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21	성적 자기결정	성에 관한 권리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누릴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당한 경험	0	1	2	3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등을 경험	0	1	2	3
23	건강권	의료행위에 있어서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24	장애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임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	0	1	2	3
25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임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	0	1	2	3
26	정신장애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한 불이익 등을 경험	0	1	2	3

II.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 대처방법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3. 귀하께서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① 참음      ② 무시함  
③ 항의함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⑤ 고발 등 사법기관에 신고      ⑥ 기타( )

4. 귀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4-1번으로)      ② 없음 (→ 5번으로)

4-1.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이용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③ 정부 및 관공서의 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  
⑤ 시민·사회단체      ⑥ 가족·친구 등  
⑦ 기타( )

4-2. 교육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차별금지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③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⑤ 시민·사회단체의 홍보 및 캠페인      ⑥ TV 또는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⑦ 기타( )

III.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 있음      ⑤ 많이 알고 있음

7.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8.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중요성(중요한 정도)과 시급성(우선순위) 정도 표시해주세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중요성					시급성				
		중요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1					1				
		2					2				
		3					3				
		4					4				
		5					5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1	2	3	4	5	1	2	3	4	5
2	고용기회 확대	1	2	3	4	5	1	2	3	4	5
3	교육권 강화	1	2	3	4	5	1	2	3	4	5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5	정보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1	2	3	4	5	1	2	3	4	5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1	2	3	4	5	1	2	3	4	5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1	2	3	4	5	1	2	3	4	5
1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1	2	3	4	5	1	2	3	4	5
13	학대예방	1	2	3	4	5	1	2	3	4	5

9. 귀하께서는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④ 잘 모르겠다

10. 인천시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배려, 존중, 인정, 이해, 자주, 자치, 상호교류, 포용, 평등, 존엄성, 법치 등

IV. 다음은 중증장애인 탈시설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귀하께서는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11-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1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12번으로)

11-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③ 집단생활의 한계      ④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⑤ 기타( )

12.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건의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	
2	출생년도	( ) 년생			
3	장애유형 (중복체크)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지적	⑦ 정신	⑧ 자폐성
		⑨ 심장	⑩ 신장	⑪ 호흡기	⑫ 간장
		⑬ 안면	⑭ 장루·요루	⑮ 뇌전증	
4	장애등급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 )	
6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이상	⑥ 기타( )	
7	가구형태	① 당사자 1인가구	② 당사자 부부가구	③ 당사자부부+자녀	
		④ 당사자+손자녀	⑤ 조부모+당사자	⑥ 당사자+형제자매	
		⑦ 당사자+친인척	⑧ 공동생활가정(그룹홈)		
8	주거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임대아파트
		⑤ 무허가주택	⑥ 친척집	⑦ 그룹홈	⑧ 기타( )
9	현재직업	① 직업 없음(→11번으로)      ② 직업 있음(→10번으로)			
10	고용형태	① 상용 임금근로자	② 임시 임금근로자	③ 일용 임금근로자	
		④ 자영업자	⑤ 무급가사종사자	⑥ 직업 훈련 및 수련	
11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⑧ 일정한 소득 없음		
12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옹진군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시설장애인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  
(시설거주 장애인용)**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06월

- ◎ 조사문의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본희 선임연구원(Tel : 010-2235-9683)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안재석 주무관(Tel : 032-440-2939)

**★ 인권이란?**

귀하께서 살아가시는데 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는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접근권, 거주 이전권, 문화 향유권, 이동권, 생활권, 정보 접근권, 보행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 중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3점 기준으로 표시해주세요.

구분		차별 또는 인권침해 내용	점수			
			없음	0		
			약간 있음	1		
			있음	2		
			많음	3		
1	신체적 학대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경험	0	1	2	3
2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경험	0	1	2	3
3	성적 학대	장애를 이유로 성적 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	0	1	2	3

구분		차별 또는 인권침해 내용	점수			
			없음		0	
			약간 있음		1	
			있음		2	
			있음		3	
			많음		3	
4	사생활 침해	지역주민에게 도움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받은 경험	0	1	2	3
5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0	1	2	3
6	유기·방임	보호·감독 의무자가 장애인을 버리거나 보호 및 치료에 소홀함	0	1	2	3
7	주변인 차별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 등 관련자들이 차별받음	0	1	2	3
8	근로·고용권	모집·채용, 임금복리,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등	0	1	2	3
9	교육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 전학을 강요 등	0	1	2	3
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토지·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1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	0	1	2	3
12	시설물 접근·이용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에 관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	0	1	2	3
13	보조장치 사용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 등의 장애인 보조장치 사용을 방해 또는 차별받은 경험이 있음	0	1	2	3
14	이동·교통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에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15	정보에의 접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이용 및 접근에 차별을 경험	0	1	2	3
16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참여에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한 행동 강요 등	0	1	2	3
17	체육·관광활동	체육·관광활동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차별 및 편의시설 부족	0	1	2	3
18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경험	0	1	2	3
19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을 경험	0	1	2	3
20	모·부성권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21	성적 자기결정	성에 관한 권리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누릴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당한 경험	0	1	2	3
22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등을 경험	0	1	2	3
23	건강권	의료행위에 있어서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0	1	2	3
24	장애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임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	0	1	2	3
25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임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	0	1	2	3
26	정신장애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한 불이익 등을 경험	0	1	2	3

II.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 대처방법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3. 귀하께서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① 참음                                      ② 무시함  
③ 항의함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⑤ 고발 등 사법기관에 신고            ⑥ 기타( )

4. 귀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4-1번으로)                      ② 없음 (→ 5번으로)

#### 4-1.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이용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 ③ 정부 및 관공서의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
- ⑤ 시민·사회단체                      ⑥ 가족·친구 등
- ⑦ 기타( )

4-2. 교육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Ⅲ.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 있음      ⑤ 많이 알고 있음

6.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귀하께서는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편임      ③ 보통      ④ 높음 편임      ⑤ 매우 높음

7.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중요성(중요한 정도)과 시급성(우선순위) 정도 표시해주세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중요성					시급성				
		중요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1					1				
		2					2				
		3					3				
		4					4				
		5					5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1	2	3	4	5	1	2	3	4	5
2	고용기회 확대	1	2	3	4	5	1	2	3	4	5
3	교육권 강화	1	2	3	4	5	1	2	3	4	5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5	정보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1	2	3	4	5	1	2	3	4	5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1	2	3	4	5	1	2	3	4	5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1	2	3	4	5	1	2	3	4	5
1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1	2	3	4	5	1	2	3	4	5
13	학대예방	1	2	3	4	5	1	2	3	4	5

8. 인천시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배려, 존중, 인정, 이해, 자주, 자치, 상호교류, 포용, 평등, 존엄성, 법치 등

IV. 다음은 탈사회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9. 탈시설 자립생활(시설 밖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있다(→ 9-1번으로)                      ② 들어본 적 없다 (→ 10번으로)

9-1. 시설 퇴소나 자립생활에 대해 어떤 경로로 들어 보셨습니까?

- ① 가족 또는 친척                      ② 학교  
 ③ TV 또는 라디오 등 미디어                      ④ 인터넷  
 ⑤ 복지관, 장애인단체                      ⑥ 주민센터 등 관공서  
 ⑦ 퇴소한 시설 입소자를 통해                      ⑧ 기타( )

10. 시설에서 살다가 시설 밖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타 시설, 병원 제외)

- ① 예 (→ 10-1번으로)                      ② 아니오 (→ 11번으로)









### 3) 비장애인

####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 (비장애인용)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비장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06월

- 조사문의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분희 선임연구원(Tel : 010-2235-9683)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안재석 주무관(Tel : 032-440-2939)

#### ★ 인권이란?

귀하께서 살아가시는데 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는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접근권, 거주 이전권, 문화 향유권, 이동권, 생활권, 정보 접근권, 보행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 1.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2. 귀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2-1번으로)      ② 없음 (→ 3번으로)

#### 2-1.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① 학교 교육과정       | ②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
| ③ 정부 및 지자체, 관공서 |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 |
| ⑤ 시민·사회단체       | ⑥ 가족·친구 등         |
| ⑦ 기타( )         |                   |

## 2-2. 교육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③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⑤ 시민·사회단체의 홍보 및 캠페인 ⑥ TV 또는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⑦ 기타( )

4.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모른척함 ② 말리거나 충고 또는 항의함  
 ③ 장애인 인권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④ 고발 등 사법기관에 신고  
 ⑤ 기타( )

II.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 있음 ⑤ 많이 알고 있음

6.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귀하께서는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7.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중요성(중요한 정도)과 시급성(우선순위) 정도 표시해주세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중요성					시급성				
		중요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1					1				
		2					2				
		3					3				
		4					4				
		매우 중요					매우 시급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1	2	3	4	5	1	2	3	4	5
2	고용기회 확대	1	2	3	4	5	1	2	3	4	5
3	교육권 강화	1	2	3	4	5	1	2	3	4	5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중요성					시급성				
		중요하지 않음				1	시급하지 않음				1
		약간 중요				2	약간 시급				2
		보통				3	보통				3
		중요				4	시급				4
		매우 중요				5	매우 시급				5
5	정보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1	2	3	4	5	1	2	3	4	5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1	2	3	4	5	1	2	3	4	5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1	2	3	4	5	1	2	3	4	5
1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1	2	3	4	5	1	2	3	4	5
13	학대예방	1	2	3	4	5	1	2	3	4	5

8. 귀하께서는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④ 잘 모르겠다

9. 귀하께서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① 사생활 침해 혹은 주변인 차별  
② 근로·고용 (모집·채용, 임금복지, 교육·배차·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등)  
③ 교육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 전학을 강요 등)  
④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⑤ 시설물 접근·이용 및 보조장치 사용  
⑥ 이동·교통수단 이용  
⑦ 문화·예술·체육·관광활동  
⑧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  
⑨ 건강권 (의료행위에 있어서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을 경험)  
⑩ 기타( )

10. 인천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배려, 존중, 인정, 이해, 자주, 자치, 상호교류, 포용, 평등, 존엄성, 법치 등

### Ⅲ. 다음은 중증장애인 탈시설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중증장애인 탈시설화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주거, 생활지원금,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11. 귀하께서는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11-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1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12번으로)

11-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③ 집단생활의 한계      ④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⑤ 기타( )

12.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건의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 -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이상                      ⑥ 기타(                      )
주거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임대아파트 ⑤ 무허가주택 ⑥ 친척집                      ⑦ 그룹홈                      ⑧ 기타(                      )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⑧ 일정한 소득 없음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옹진군
장애인과 관련성	① 본인이 장애인임                      ② 장애인 가족 또는 지인이 있음 ③ 장애인이나 인권 관련 종사자                      ④ 전혀 관련 없음 ⑤ 기타(                      )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4)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  
(장애인 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06월

- 조사문의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분희 선임연구원(Tel : 010-2235-9683)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안재석 주무관(Tel : 032-440-2939)

**〈응답요령〉**

- 공무원, 장애인 단체 : 개인적 배경 + 11번 문항까지 답변
- 시설종사자 : 개인적 배경 + 전체문항 답변

**※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이상      ⑥ 기타(      )
자격증	① 없음      ② 사회복지사 3급 ③ 사회복지사 2급      ④ 사회복지사 1급 ⑤ 기타(      )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총 (      )년 (      )개월
인권업무 담당경력	① 있음      총 (      )년 (      )개월 ① 있음      ② 없음

담당업무	① 인권상담                                  ② 권익옹호팀 ③ 인권교육(종사자, 교육자)        ④ 인권지킴이단 ⑤ 기타( )					
근무처	공무원	직위	① 주무관      ② 팀장      ③ 과장			
		업무분야	① 장애인권익지원      ② 장애인교육      ③ 장애인 연금 ④ 장애인편의시설      ⑤ 장애인복지      ⑥ 장애인시설관리			
		근무처	① 시청                                  ② 군청, 구청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기타( )			
	단체	직위	① 단체장      ② 간사      ③ 기타( )			
	시설종사자	직위	① 일반사회복지사      ② 주임      ③ 팀장 ④ 부장                                  ⑤ 국장      ⑥ 관장/시설장			
		업무분야	① 행정지원      ② 교육·상담      ③ 사회재활 ④ 생활재활      ⑤ 사례관리      ⑥ 물리치료사 ⑦ 간호사      ⑧ 영양사      ⑨ 기타( )			
		근무처	① 장애인복지관                          ② 주간·단기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④ 공동생활가정 ⑤ 직업재활시설                          ⑥ 의료재활시설 ⑦ 정신보건센터                          ⑧ 생활시설 ⑨ 종합복지관                                  ⑩ 체육·수련시설 ⑪ 장애인 인권관련시설      ⑫ 기타( )			
		시설유형	① 지체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언어      ⑤ 지적                          ⑥ 정신 ⑦ 자폐성      ⑧ 기타( )			
		시설규모	① 10인 미만 공동생활가정      ② 10인~30인 미만 ③ 30인~50인 미만                          ④ 50인~70인 미만 ⑤ 70인~100인 미만                          ⑥ 100인 이상			
운영주체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재단법인 ④ 종교법인                                  ⑤ 학교법인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⑦ 기타( )				

1. 다음은 영역별 차별·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2. 귀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2-1번으로)      ② 없음 (→ 3번으로)

2-1.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이용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③ 정부 및 관공서의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  
 ⑤ 시민·사회단체      ⑥ 가족·친구 등  
 ⑦ 기타( )

2-2. 교육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교육과정      ②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③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      ④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⑤ 시민·사회단체의 홍보 및 캠페인      ⑥ TV 또는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⑦ 기타( )

4.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모른척함      ② 말리거나 충고 또는 항의함  
 ③ 장애인 인권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④ 고발 등 사법기관에 신고  
 ⑤ 기타( )

II.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 있음      ⑤ 많이 알고 있음

6.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귀하께서는 인천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보통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7.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중요성(중요한 정도)과 시급성(우선순위) 정도 표시해주세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중요성					시급성				
		중요하지 않음					1				
		약간 중요					2				
		보통					3				
		중요					4				
		매우 중요					5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교육의 확대	1	2	3	4	5	1	2	3	4	5
2	고용기회 확대	1	2	3	4	5	1	2	3	4	5
3	교육권 강화	1	2	3	4	5	1	2	3	4	5
4	교통수단 등 시설물 접근 및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5	정보접근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1	2	3	4	5	1	2	3	4	5
6	재화·용역과 금융상품 등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7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8	모·부성권 및 성 보호	1	2	3	4	5	1	2	3	4	5
9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호	1	2	3	4	5	1	2	3	4	5
10	의료서비스 이용권 확대	1	2	3	4	5	1	2	3	4	5
11	장애 여성 및 아동 보호	1	2	3	4	5	1	2	3	4	5
1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1	2	3	4	5	1	2	3	4	5
13	학대예방	1	2	3	4	5	1	2	3	4	5

8. 귀하께서는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④ 잘 모르겠다

9. 인천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배려, 존중, 인정, 이해, 자주, 자치, 상호교류, 포용, 평등, 존엄성, 법치 등

### Ⅲ. 다음은 중증장애인 탈시설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10-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11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11번으로)

10-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불충분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③ 집단생활의 한계      ④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⑤ 기타( )

11.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건의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504호  
연 락 처      02) 588-2162  
팩 스          02) 583-9571  
홈페이지    <http://www.kiir.or.kr>

---